2026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논술 파이널

1강 2026학년도 모의논술
2강 2025학년도 기출문제 1
3강 2025학년도 기출문제 2
4강 2025학년도 모의논술
5강 2024학년도 기출문제 1
6강 2024학년도 기출문제 2
7강 2024학년도 모의논술
8강 2023학년도 기출문제 1
9강 2023학년도 기출문제 2

메가스터디 장진석 논술

제 1 강 2026학년도 모의논술

※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가> 소송제도는 개인의 권리·의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가 마련한 절차에 관한 제도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소송제도는 제도적 이상(理想)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과오 없는 재판'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인 재판'이다. 특히 개인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민사소송제도에서는, 과오 없는 재판을 통해 적정성과 공평성을 달성하려고 하며, 경제적인 재판을 통해 신속성과 저비용을 달성하려고 한다. 이 중에서 경제적인 재판에 주목한다면, 오판비용(error cost)과 소송제도운용비용(operating cost)의 합인 소송의 사회적 비용(social cost)를 최소화하는 것이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오판비용이란, 법원이 완전정보가 아닌 불완전정보에 기초하여 판결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말한다. 그리고 소송제도운용비용이란, 인지대나 송달료와 같은 재판비용, 당사자가 부담하는 서류작성비용 및 변호사 보수, 판사의 인건비 등이 해당된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판결은 완전한 실체적 진실과 완벽한 법률지식에 기초한 완전정보판결과 일정 부분 괴리될 수밖에 없다. 물론 법원은 완전정보판결을 추구하며 이 괴리를 좁히는 것은 오판비용을 감소하게 하므로 바람직하다. 다만 오판비용이 줄어드는 데에는 제도운용비용이 소요되므로 그 비용이 증가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어떤 손해에 대한 기회비용*이 100만원인데, 가해자가 그 손해발생을 회피하기 위하여 지출해야 하는 회피비용이 90만원이라고 하자. 만일 법원이 완전정보판결을 내리고 있다면 가해자는 그 손해발생을 회피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야 10만원의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동일 유형의 사건에서 평균 15%에 해당하는 불완전정보판결이 나타난다고 하자. 즉 가해자에게 책임이 있음에도 그것을 부인하는 판결의 비율이 15%라고 하면, 가해자는 손해발생을 회피할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 손해의 기회비용이 85만원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판이 없는 경우와 달리 오판이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사고회피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때 오판확률을 10% 미만으로 줄이는데 제도운용비용이 5만원 소요된다고 하면, 그 5만원을 들여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 이렇게 하여야 오판비용과 소송제도운용비용의 합인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되기 때문이다. 다만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가 항상 피해자의 최적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 기회비용: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다른 가치들 중 가장 큰 가치.

<나> 분쟁이 소송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판 없이 당사자 간의 화해 또는 조정에 의하여 해결되기도 한다. 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각기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며 법관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 주장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된다. 즉 누군가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다른 누군가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반면에 조정은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제3의 대안에 합의해 가는 과정이다. 보통 제3자인 조정인이 대안을 제시하면 분쟁의 당사자들은 그 대안을 수용할 것인지 자율적으로 판단한다. 조정인은 합의를 강제할 수 없으며 당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분쟁해결의 자율성이 강조되면서 소송보다는 조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한다.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은 각 당사자로서의 개인이나 기업들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많은 긍정적 효과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조정이 분쟁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으로써 분쟁으로 인해 지출되는 당사자들 사이의 비용은 물론 사회적인 소모적 비용 역시 대폭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조정이 갖는 효용성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기도 한다. 첫째, 당사자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절차의 비밀을 보장함에 따라 신뢰구축이 가능하다. 셋째, 법률에 대한 전문성이 없더라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발언하고 소통할 수 있다. 넷째, 절차가 신속하고 간편하며 비용이 저렴하다. 다섯째,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결과를 새롭게 도출해낼 수 있다. 여섯째, 합의의 결과를 자발적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

<다> 조정을 일종의 거래 또는 흥정관계로 치환하면 다음과 같은 설명도 가능하다. 즉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는 원고의 권리를 100이라고 가정하면, 조정은 그러한 원고의 권리를 피고에게 파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이때 거래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원고가 자신의 권리에 관해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피고가 그 권리에 대해 같거나 높게 평가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피고가 그 권리를 100 이상으로 평가하면 거래는 성사된다.

그런데 만일 원고가 절대적으로 100 이상을 원한다면 그는 소송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것일 뿐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자신의 권리를 100 이하에서 어느 수준으로 평가하는지에 따라 조정의 가능성이 결정될 수 있다. 가령 원고가 자신이 승소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확률을 70%로 평가한다면 100 중에서 70만큼이 원고의 기대이득이 된다.

한편, 피고의 입장에서 그가 원고로부터 권리를 매수한다는 의미는 원고의 소 제기를 막고 조정절차를 선택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소송으로 이행됨에 따른 기대손실을 방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기대이득이 피고의 기대손실보다 작거나 최소한 같아야 한다.

이렇게 보면 ㉡조정을 선택할 유인은 결국 승소확률에 의존한다. 하지만 원고가 생각하는 승소확률과 피고가 생각하는 원고의 승소확률이 다를 수도 있다. 그리고 만일 원고나 피고가 자신이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높다고 예상하는 경우 조정을 선택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즉 분쟁당사자들의 낙관적인 기대에 따라 조정보다 소송의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비관적인 기대에 따르면 조정의 가능성이 커진다. 양 당사자가 상대적 낙관주의에 빠지지 않고 각자가 처한 상황에 대해 정확한 정보와 이해를 가질수록 조정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낙관적 기대는 각 분쟁당사자 개인이 가진 정보의 차이로부터 기인한다.

<라> 규범적 논증은 어떠한 법제도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 만일 바람직하지 않다면 어떻게 바뀌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의미를 가지려면 먼저 "바람직함의 판단기준"이 확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운전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과하면 교통사고가 줄어든다는 실증적 분석이 있다고 하자. 여기서 바로 "무과실책임이 사회적으로 보다 바람직하다"라는 규범명제가 도출될 수 있을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규범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이 사회적인 목적이라면"이라는 전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경제학은 경제학이기 때문에 효율(efficiency)을 그 잣대로 사용한다. 효율이란 그 사회의 부(富)의 전체 크기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정확하다. 그 부(富)를 누가 얼마나 가지는지, 즉 분배(distribution)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법경제학의 관심사가 아니다. 법경제학에서 어떠한 상태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말할 때에는 항상 그 앞에 "분배의 결과와 상관없이, 사회 전체의 경제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만이 사회가 추구하는 목표라면"이라는 전제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갑(甲)이 수고를 하면 100원, 을(乙)이 수고를 하면 300원이 든다고 하자. 여기서 100원 또는 300원은 수고나 노력에 수반되는 고통을 평가한 금액일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소멸되는 자원일 수도 있다. 이 경우 법경제학은 법제도가 갑(甲)이 수고를 하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을(乙)이 수고를 하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200원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따라 갑(甲) 또는 을(乙)의 부(富)가 달라지지만, 법경제학은 이 문제가 효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 무과실책임: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에 없음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

문제 1

제시문 <나>의 입장에서 제시문 <가>를 활용하여 제시문 <다>의 ㉡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술하시오. (800~1,000자)

문제 2

제시문 <가>의 예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해 보자.

①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자의 기회비용=100만 원
② 가해자의 회피비용은=150만 원
③ 불완전정보판결 확률=0%, 제도운용비용=200만 원
불완전정보판결 확률=5%, 제도운용비용=190만 원
불완전정보판결 확률=10%, 제도운용비용=180만 원
⋮
불완전정보판결 확률=100%, 제도운용비용=0만 원

제시문 <가>의 ㉠의 관점에 따르면 위 예시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서술하고, 제시문 <라>의 관점에서 ㉠이 지닌 문제점(한계)에 대해 논술하시오. (800~1,000자)

제 1 강 2026학년도 모의논술 대학발표 해설

1. 출제 의도

① 이번 모의논술고사 문제는 종래 문제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은 범위에서 출제하였으며, 고등학교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등의 과목에서 학습한 내용을 구체적 과제 해결에 응용함으로써, 논리구조의 파악 및 분석, 비판적 평가, 창의적 응용과 합리적 논증 역량을 포괄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동시에 그와 같은 역량을 다양한 관점에서 각각 평가하고자 하였음.

② 각 제시문과 문제는 고등학교 수준의 인문·사회적 소양 및 일반 상식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일부 제시문에서는 예시를 함께 소개함으로써 그 내용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수치를 통한 계량적 설명을 함께 제시하여 더욱 명확한 논증과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음.

③ 사회 속에서는 필연적으로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우리 사회는 그러한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분쟁 해결 수단을 마련하고 있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소송 또는 재판이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역시 존재함. 사회적 관점에서 소송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개인적 관점에서는 또 무엇이 필요한지, 각각의 요소들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분쟁 해결로 나아갈 수 있는바, 각 제시문은 경제적인 재판, 당사자의 자율적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조정, 조정을 선택할 유인, 바람직함의 판단기준과 사회적 후생 등을 다양한 차원에서 주제로 제시하고 있음. 응시자가 이러한 제시문들의 논지와 관계를 적절히 파악하고, 사회적 효율성 차원에서의 접근과 효율성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한계를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함.

2. 제시문 해설

- 제시문 <가>는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소송제도의 제도적 이상을 두 가지로 나누고, 그중에서 '경제적인 재판'에 초점을 두고 설명한다. 경제적인 재판이란 저렴하고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사회적 비용은 오판비용과 제도운용비용의 합으로 구성된다. 이때 오판비용과 제도운용비용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오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운용에 비용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시문 <가>에서는 마지막 문단에서 오판비용과 제도운용비용의 합이 최소화되는 하나의 예시를 들어 언제 경제적인 재판이 가능하게 되는지 보여준다. 그러나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를 통해 경제적으로 재판하는 것이 항상 피해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지적한다.

- 제시문 <나>는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조정제도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조정이 당사자 자율에 의하여, 양보와 타협이라는 과정을 거쳐 분쟁의 해결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특징적으로 설명한다. 특히 두 번째 문단에서는 소송에 비하여 조정이 가지는 강점을 여섯 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한다.

- 제시문 <다>는 분쟁의 당사자가 소송과 조정이라는 두 가지 절차 중에서 언제 조정을 선택하게 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분쟁당사자의 관계를 거래관계로 전제하고, 원고의 기대이득과 피고의 기대손실을 비교할 때 전자가 후자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조정이 가능함을 설명한다. 그런데 원고의 기대이득과 피고의 기대손실의 비교는 승소확률에 의존한다. 제시문 <다>는 일반적으로 이 승소확률에 대한 각 당사자의 낙관적인 기대수준이 낮아질수록 조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며, 분쟁당사자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게 될수록 상대적

낙관주의로부터 벗어나 조정을 선택할 유인이 커진다고 한다.

- 제시문 <라>는 법경제학의 관심사가 효율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법경제학에서 어떠한 사회적 상태가 바람직하다는 것은, 그 상태에서 사회 전체의 경제적 후생이 극대화되는 것을 전제한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어떤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각기 다른 주체가 투입하는 비용을 예시로 들어, 사회적 후생극대화의 관점은 누가 얼마만큼을 부담하는지에 대한 형평성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한다.

3. 문항 해설

[문제 1]

본 문제는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조정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어떠한 방안들이 조정을 선택할 유인으로 이어지는지 논술하도록 요구한다.

본 문제의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의 서술이 필요하다.

첫째, 제시문<나>의 입장에서 논술하여야 하므로, 분쟁을 소송이 아닌 조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관점을 취하여야 한다.

둘째, 제시문<가>에서는 언제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되어 경제적인 재판이 가능하게 되는지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정에 유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즉 각각의 분쟁당사자가 어떠한 선택을 하도록 제도를 운용하여야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되는 조정으로 이어지는지 논증하여야 한다. 대안으로, 소송보다 조정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논증도 가능하다.

셋째, 제시문<다>에 따르면 당사자들이 조정을 선택할 유인(㉡)은 각 당사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와 이해를 가지는 경우 증가한다. 따라서 답안에서는 어떠한 제도를 통하여 당사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통하여 승소확률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인지 제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의 마련 등이 제시될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당사자가 정확한 정보를 통해 승소확률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제도적 수단을 그것에 연결시킨다면 어떤 수단을 제시하더라도 무방함. 즉 제시하는 수단 자체의 적절성이나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기준으로 삼을 필요는 없음.

[문제 2]

본 문제는 법경제학적 효율성이 모든 분쟁을 바람직하게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비판적으로 논술하도록 요구한다.

본 문제의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의 서술이 필요하다.

첫째, 제시문<가>의 경제적인 재판(㉠) 및 그것을 설명하는 예시와 <문제 2>에서 주어진 변경된 예시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서술하여야 한다. 제시문<가>의 예시는 피해자의 기회비용이 가해자의 회피비용보다 높은 상황을 가정하고 있으며, <문제 2>의 예시는 가해자의 회피비용이 피해자의 기회비용보다 더 높은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함으로써 다음의 서술로 이어나갈 수 있다.

둘째, <문제 2>의 예시에 대하여 경제적인 재판만을 근거로 하는 경우, 사회적 비용은 최소화되지만 가해자가 사고회피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된다는 점을 논증하여야 한다.

셋째, 제시문<라>는 사회 전체의 경제적 후생이 극대화되더라도 이익(부)가 적절히 분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므로, 공정성과 형평성의 관점에서 <문제 2> 예시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비판하여야 한다. 또한, 바람직한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효율성과 다른 판단기준도 표준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당사자 사이에서의 적절한 분쟁 해결 및 이익분배가 가능해진다는 점 등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4. 채점 기준

배점 기준표

문항	배점	세부 내용
문제 1	5	· 제시문 <나>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20	· 제시문 <가>의 경제적인 재판을 조정에 적절히 유추하고 있는가? 그리고 조정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를 적절히 논증하고 있는가?
	20	· 조정을 선택할 유인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각 당사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와 이해를 가질 수 있어야 함을 제시하고, 그것을 위한 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는가?
	5	· 정확한 어법과 표현을 사용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분량을 지켜서 논술하였는가?
문제 2	10	· 제시문 <가>의 예시와 <문제 2>의 변형 예시를 적절히 비교하고 있는가?
	15	· <문제 2>의 변형 예시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적절히 도출하고 있는가?
	20	· 제시문 <라>의 관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으로부터 <문제 2>의 변형 예시에서 나타나는 결과의 한계점을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는가?
	5	· 정확한 어법과 표현을 사용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분량을 지켜서 논술하였는가?

[문제 1]

1번 문제의 답안은 다음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제시문 <나>의 입장을 이해하여 서술하는 부분.

둘째, 제시문 <가>에서 설명하는 경제적인 재판을 이해하고 그것을 조정에 적용하고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에 관해 서술하는 부분.

셋째, 분쟁의 당사자들이 정확한 정보와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떠한 제도가 필요한지 자유롭게 제시하는 부분.

첫째 부분

- 제시문 <나>의 입장에 대한 이해
- 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의 관점

둘째 부분

- 제시문 <가>에서 말하는 경제적인 재판에 대한 이해와 설명
- 제시문 <가>의 내용이 조정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주장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서술. 예를 들어, 조정에서는 옳고 그름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오판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등의 서술이 가능함.

셋째 부분

- 조정을 선택할 유인을 높이기 위한 전제에 관한 설명

- 당사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통하여 승소확률을 파악할 수 있으려면 어떠한 제도적 수단이 필요한지 자유롭게 제시.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의 마련 등이 제시될 수 있음.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당사자가 정확한 정보를 통해 승소확률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제도적 수단을 그것에 연결시킨다면 어떤 수단을 제시하더라도 무방함. 나름대로의 수단을 제시하고자 한 점에 주목하여 평가.

[문제 2]

2번 문제의 답안은 다음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제시문 <가>의 경제적인 재판의 예시와 <문제 2>의 변형 예시를 비교,

둘째, <문제 2>의 변형 예시에서 나타나는 결과 도출. 예를 들어, 경제적인 재판만이 해결의 목표가 되면 가해자가 사고회피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되고 법원 역시 진위판단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는 점 등 서술.

셋째, 제시문<라>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관점에서 <문제 2>의 변형 예시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비판.

첫째 부분

- 제시문 <가>의 예시와 <문제 2>의 변형 예시 비교
-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서술

둘째 부분

- <문제 2>의 변형 예시에서 나타나는 결과 도출
- 가해자의 회피비용이 피해자의 기회비용보다 더 높은 상황에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만 고려하게 되면, 가해자가 사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게 되고 법원은 진위판단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게 되어 결과적으로 가해자가 모든 부담을 안게 된다는 점 등을 서술

셋째 부분

- 제시문 <라>의 내용을 이해하고 서술
- <문제 2>의 변형 예시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공정성과 형평성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한계를 지적

<문제 1>의 세 부분 각각의 점수와 정확한 어법과 표현 점수(5점, 답안 수준별 점수차 1점) 및 <문제 2>의 세 부분 각각의 점수와 정확한 어법과 표현 점수(5점, 답안 수준별 점수차 1점)를 모두 합산하여 답안은 다음과 같이 6등급으로 평가한다.

1등급:	95점 이상	2등급:	90점 이상	3등급:	85점 이상
4등급:	75점 이상	5등급:	60점 이상	6등급:	60점 미만

※ 각 문제별로 글자 수에 제한(900자±100자)이 있으므로, 800자 미만의 경우 각 문제별로 아래와 같이 감점한다.

700자~799자:	5점 감점	600자~699자:	10점 감점
600자 미만:	6등급	백지 답안:	7등급

○ 대학발표 예시답안

[문제 1]

개인 간 분쟁을 해결하는 법적 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서 조정은 분쟁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을 모색한다는 점, 신속하고 저렴하다는 점에서 소송에 비해 장점이 있다. 소송제도의 이상은 크게 '과오 없는 재판'과 '경제적인 재판'으로 나뉜다. 그런데 조정에서는 그 특징상 과오 또는 오판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조정은 소송과 달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당사자 스스로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조정은 신속성과 경제성에 이점이 있다. 따라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려면, 조정이 소송보다 유리하다. 조정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서는 오판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오히려 분쟁 당사자들이 소송이 아닌 조정을 택하도록 유인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핵심적인 수단이 된다.

원고의 기대이득이 피고의 기대손실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 조정이 가능하게 된다. 이 경우 원고의 기대이득 수준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양 당사자의 이익에 모두 부합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때 기대이익과 기대손실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승소확률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조정을 선택할 유인을 높일 수 있다. 승소확률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자신이 소송에서 이길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에 의존하게 되어 조정을 배척하게 된다. 이는 당사자 사이의 정보 불균형으로부터 야기된다.

따라서 조정을 선택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분쟁의 당사자가 자기가 가진 정보만을 기초로 상황을 판단하는 경우 낙관적 기대에 빠지기 쉬우므로, 상대방이 가진 정보를 일정한 범위에서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법원에 정보공개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이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보격차를 줄이고 승소확률을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기대이익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조정으로 유인할 수 있다. (991자)

[문제 2]

주어진 예시의 상황에 따르면,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그 손해발생 방지를 위해 가해자가 지출해야 하는 회피비용보다 작다. 이 경우 잠재적 가해자는 손해발생 방지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것인데, 그 이유는 판결을 통하여 가해행위가 100%의 확률로 인정되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하는 기대사고비용 100만원은 회피비용보다 여전히 작기 때문이다. 즉, 법원의 불완전정보판단 확률의 수준에 상관없이 잠재적 가해자는 그 가해행위를 선택할 것이다. 이러한 가해자의 무조건적 가해행위의 선택을 고려한다면, 예시상황에서 소송의 사회적 비용-오판비용과 제도운용비용의 합-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법원의 불완전정보판단 확률을 가장 높은 수준인 100%로 유지하는 것이

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가해자의 행위가 100% 확률로 부인되는 판결을 가져올 것이고, 그에 따라 가해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은 온전히 피해자에게 전가되는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예시의 상황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는 사회적 효율성 증진이란 명목으로 피해자가 모두 감당하게 되는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낳고 있다. 이처럼 '경제적인 재판'은 소송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할 순 있지만, 이것은 재판의 적정성과 공평성을 담보로 한다. 즉, '경제적인 재판'의 결과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에 대한 규범적 논증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규범적(윤리적)인 측면에서 법제도가 추구하는 바람직함의 판단기준을 항상 충족시키진 않으며, '경제적 재판'의 지나친 강조는 자칫 사회 구성원이 지켜야 할 도덕(규범)의 실천과 대치될 수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과오 없는 재판'을 통해 적정성과 공평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한 이후 '경제적 재판'을 통해 효율성을 추구하는 균형감 있는 소송제도의 운용이 필요할 것이다. (948자)

2026 성신여대 파이널

제 2 강 2025학년도 기출문제 1

※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가>

㉠영토는 한 국가의 배타적 지배가 가능한 장소로서 공간적 존립기반이며, 국민, 주권과 함께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가 되어 국가 정체성을 이룬다. 또한 국민들이 거주하는 물리적 공간이자 경제활동의 터전일 뿐만 아니라 특정한 문화, 언어, 종교 등이 발전·보존된 공간으로, 영토주권은 국민들의 국적, 생활방식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영토에 관한 국민의 권리를 이른바 영토권으로 구성하여 기본권으로 인정하기도 한다. 영토주권의 이전은 국제관계에서 세력균형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모든 국가는 자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영토 확보에 노력한다. 사람들이 자국의 영토가 가장 넓었던 시기를 영광된 역사로 기억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나아가 영토는 그 실제 가치를 떠나 국민감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별한 경제적 가치가 없는 작은 땅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수많은 희생을 감수하기도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1948년 제헌 헌법 이래 수 차례의 헌법개정 속에서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조항이다. 분단 상황에도 불구하고 규범적으로는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속도서의 의미는 대한민국 영토의 한계와 직결되는 것이어서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부속도서는 지리학적·정치학적 개념이기 때문에 국제법상 개념 정의가 없다. 따라서 한반도의 부속도서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 통상 한반도 근해에 위치하여 남북한에 소속된 모든 도서를 의미한다.

한편 조선은 성립 초기 이래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인식하고 관리해왔으나, ㉠영토 범위를 구체적·규범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았다. 다만 숙종 때인 1712년 청(淸)과의 경계를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토문강으로 한다는 내용의 백두산 정계비가 조선과 청 사이의 국경 합의에 따라 건립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주가 고토(故土)라는 인식, 즉 우리나라를 '만리(萬里)의 나라'로 인식하고 있었던 기록들도 있다. 당시 지리학의 제1인자였던 양성지(梁誠之)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국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우리나라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한쪽이 육지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 크기는 거의 만리이다"라고 표현하였다. 또한 노사신(盧思愼)은 『동국여지승람』 전문에서 "우리의 국토는 만리"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서거정(徐居正)도 『동국여지승람』 서문에서 "고려의 서북지방은 압록강을 넘지 못했지만 동북지방은 선춘령(先春嶺)을 경계로 하여 고구려 지역을 더 넘었다"고 쓰고 있다.

<나>

영토분쟁 데이터뱅크인 ICOW(The Issue Correlates of War)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109건의 영토분쟁이 진행 중이다. 영토분쟁이란 인접한 국가 사이에 일정한 영토의 주권을 두고 벌어지는 국가 사이의 국제 분쟁으로, 대표적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카슈미르(Kashmir) 분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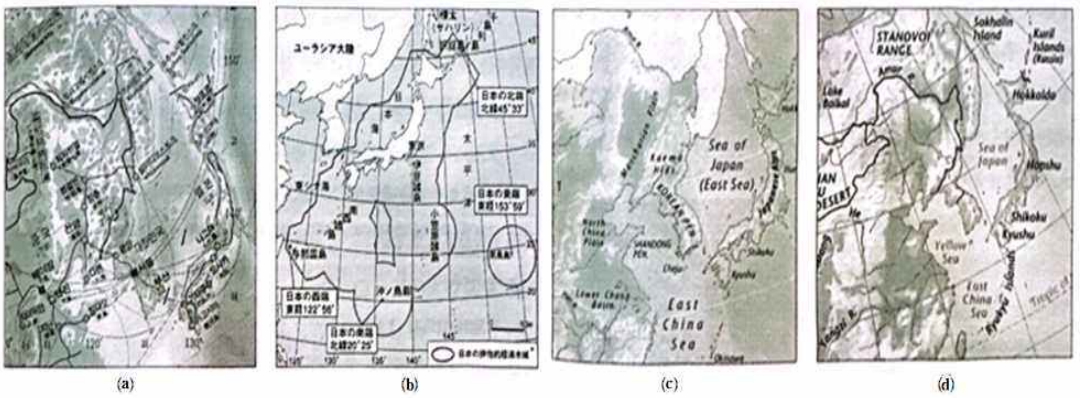
우크라이나는 구소련에서 떨어져 나간 15개 국가 중 하나로 이들은 모두 민족적 근간을 키예프 루스(Kievan Rus′)라고 생각하는 국가들이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들 구소련 국가들이 자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혹은 영향권 아래에 있어야만 하는 국가들인 것이다.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는 서방과의 우호관계를 확대하고 발트 3국에 이어 나토(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및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에 가입하고자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동쪽으로는 러시아, 서쪽으로는 나토 및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국경을 접하는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으며, 흑해와 아조프해(Sea of Azov)에 접하고 있어 군사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로 인해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어느 진영에 서는가에 따라 세력균형이 완전히 바뀔 수 있기에 이들을 자유롭게 내버려둘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러시아의 2014년 크림반도 합병, 돈바스(Донбáс) 전쟁,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분쟁이 전개되어 오고 있다.

마찬가지로 카슈미르 지역은 인도와 파키스탄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지역으로 오랫동안 분쟁의 불씨로 여겨지는 곳이다. 카슈미르 지역은 인도의 북부, 파키스탄의 북동부, 그리고 중국의 서부와 경계를 이루는 지역으로 히말라야 산맥의 비경을 품고 아름다운 경관을 뽐내는 '행복의 계곡', '지상의 낙원'이라고 불렸던 땅이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지난 60여 년간 종교분쟁으로 얼룩져 주민, 역사, 문화,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무차별적으로 파괴되었다. 인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당시 종교에 따라 힌두교(인도)와 이슬람교(파키스탄)로 분리되었다. 하지만 카슈미르는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인도령이지만, 인구의 60%에 해당하는 500만 여명은 파키스탄과 연계가 있는 이슬람교도로 구성되어 분쟁의 실타래가 더욱 복잡해졌다. UN의 중재로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통제선이 설정되었으나 양국의 소규모 교전은 계속되고 있다. 카슈미르 분쟁이 단순히 양국 간의 종교·영토분쟁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더 나아가 이들은 중국과 아프가니스탄, 구소련 영역에까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으로 미국-러시아-중국의 대리전 분쟁으로까지 이어져 복잡한 국면으로 흘러가는 양상이다.

<다>

지도는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시각 자료로서의 역할을 넘어 정치적 패권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륙이나 세계지도는 국가 영역의 범위와 주권을 주장하는 데 사용된다. 영토와 영해 지도를 제작하고 특히 지도 상에 자국에서 명명한 지명을 기입하는 행위는 자국의 관점

을 제시하고 관철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다음 [그림 1]은 동해 지명 표기에 작용한 서로 다른 권력의 양상을 보여준다. (a)는 한국에서 발간한 중학교 사회과 부도의 지도이고, (b)는 일본의 한 고등학교 지리 교과서에 실려있는 지도이다. (c), (d)는 영어권의 대학 교양용 세계지리 교재에 실려있는 지도이다. 동해라는 동일한 공간을 대상으로 한 지도이지만, 동해 지명을 비롯하여 국경 표시가 서로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b)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권력과 패권 의식을 강하게 반영하면서 자국의 영역 이미지 중 보여주고 싶은 것만을 보여주고 그렇지 않은 것을 감추는 교육용 지도로 자국 영역의 범위와 주권을 주장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그림 1] 동해 지명 표기와 관련한 지도

이와 달리 일본의 고지도에는 독도가 조선에 속하는 것임이 명시된 경우가 있다. [그림 2]는 임진왜란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명령으로 제작된 <조선국지리도>에 속한 <팔도총도(八道總圖)>이다. 이 지도는 울릉도와 우산도(于山島, 오늘날의 독도), 그리고 대마도를 조선의 영토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그림 3]은 1785년 에도시대 경세론가인 하야시 시헤이(林子平)가 작성한 <삼국접양지도>의 프랑스어판이다. 이 지도에서는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한반도와 같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대마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림 2] 조선국지리도 중 팔도총도

[그림 3] 삼국접양지도(프랑스어판 일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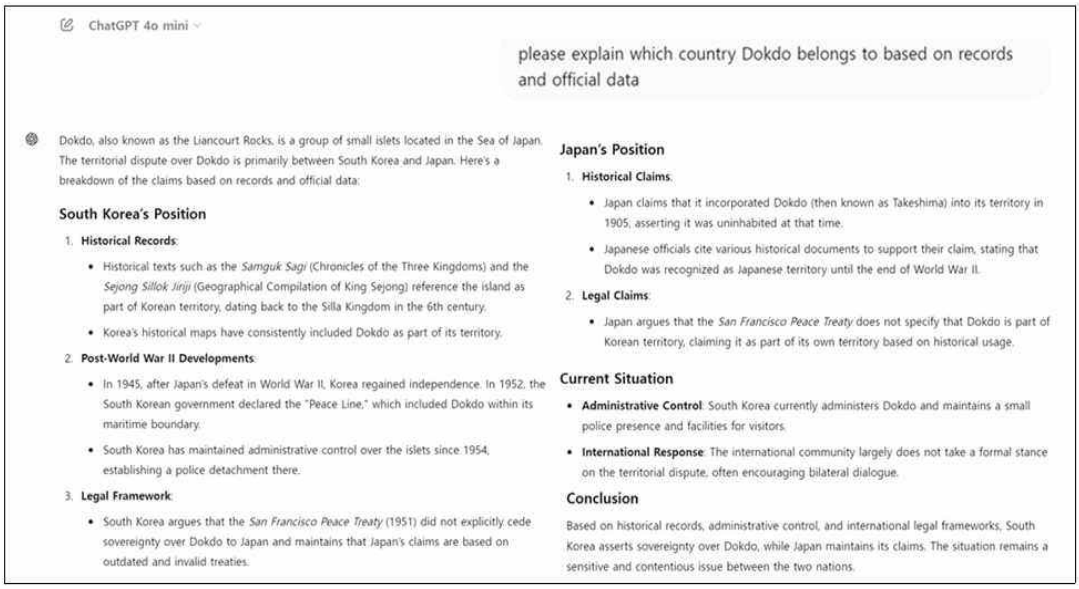
<라>

고지도나 역사적 기록은 영토분쟁에서 영유권의 증거로 자주 제시된다. 그러나 국제재판에서 고지도나 역사적 기록이 직접적인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은 낮다. 특히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는 고지도에 대하여 다른 증거를 통해 이미 도달된 결론을 확인하거나 지지하는 것 이상으로는 법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고지도의 가치는 제작 주체, 목적, 연도, 내용적 정확성, 제작 기법의 과학성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토분쟁 지역에 관해 재판에 제출되는 고지도들은 서로 모순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고지도는 국제재판에서 영토의 권원(權原)을 확립하는 법적 효과가 있는 문서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고지도의 증거가치가 낮다는 것은 사법(司法)절차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영유권이 항상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2006년에 이미 우리 정부는 동해에서의 해양관할권에 관한 한일 간의 갈등이 UN 해양법 협약상의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되지 못하도록 적용배제선언을 한 바 있다. 즉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해양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는 모든 영유권 문제를 법적 분쟁 또는 사법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을 뜻한다.

<마>

한국과 일본 간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 이슈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논쟁이다. 2024년 1월에도 일본 외무상이 연례 외교 연설에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함으로써 망언을 지속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너무나도 당연한 대한민국 영토를 몇 가지 주장을 가지고 분쟁지역으로 바꾸고, 세계 여론을 왜곡된 방향으로 형성하려 시도하고 있다. 독도가 어느 나라의 영토인지에 관해 ChatGPT 4.0에 물어본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ChatGPT는 우선 한국의 입장에 관해 다음과 같이 답한다. 첫째, 삼국사기, 세종실록지리지, 조선시대 지도 등 여러 역사적 기록에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표기된 사례가 한국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근거이다. 둘째, 근대 이후 행정권 행사 측면에서도 1952년 평화선 선언, 1954년 독도 내 경찰 배치와 주민 거주 등의 실효적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역시 그 근거가 된다. 셋째,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하면 일본이 표기한 영토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그 근거이다. 다음으로 일본의 주장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한다. 일본은 17세기 초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고, 1905년 독도를 편입하여 '다케시마(竹島)'로 명명했으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즉 ChatGPT는 한국이 역사적·법적 사실 및 현재의 실효적 지배를 근거로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보고 있는 반면, 일본은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반박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며, 이 이슈가 여전히 양국 간 역사적·정치적 요인에 따라 논쟁 중에

있음을 시사하였다.


ChatGPT 4o mini

please explain which country Dokdo belongs to based on records and official data

Dokdo, also known as the Liancourt Rocks, is a group of small islets located in the Sea of Japan. The territorial dispute over Dokdo is primarily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Here's a breakdown of the claims based on records and official data:

South Korea's Position

1. **Historical Records**:
   - Historical texts such as the *Samguk Sagi* (Chronicles of the Three Kingdoms) and the *Sejong Sillok Jiriji* (Geographical Compilation of King Sejong) reference the island as part of Korean territory, dating back to the Silla Kingdom in the 6th century.
   - Korea's historical maps have consistently included Dokdo as part of its territory.
2. **Post-World War II Developments**:
   - In 1945, after Japan's defeat in World War II, Korea regained independence. In 1952, the South Korean government declared the "Peace Line," which included Dokdo within its maritime boundary.
   - South Korea has maintained administrative control over the islets since 1954, establishing a police detachment there.
3. **Legal Framework**:
   - South Korea argues that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1951) did not explicitly cede sovereignty over Dokdo to Japan and maintains that Japan's claims are based on outdated and invalid treaties.

Japan's Position

1. **Historical Claims**:
   - Japan claims that it incorporated Dokdo (then known as Takeshima) into its territory in 1905, asserting it was uninhabited at that time.
   - Japanese officials cite various historical documents to support their claim, stating that Dokdo was recognized as Japanese territory until the end of World War II.
2. **Legal Claims**:
   - Japan argues that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does not specify that Dokdo is part of Korean territory, claiming it as part of its own territory based on historical usage.

Current Situation

- **Administrative Control**: South Korea currently administers Dokdo and maintains a small police presence and facilities for visitors.
- **International Respons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largely does not take a formal stance on the territorial dispute, often encouraging bilateral dialogue.

Conclusion

Based on historical records, administrative control, and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s, South Korea asserts sovereignty over Dokdo, while Japan maintains its claims. The situation remains a sensitive and contentious issue between the two nations.

[그림 4] ChatGPT 4.0 검색 결과

문제 1 제시문 <가>에 기술된 ㉠의 특징을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제시문 <나>의 두 사례가 가진 공통점을 서술하시오. (900±100자)

문제 2 제시문 <마>의 현상을 설명하고 이를 제시문 <다>와 <라>에 근거하여 진단한 후, 그것을 바탕으로 제시문 <마>의 현상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서술하시오.

(900±100자)

제 2 강 2025학년도 기출문제-오전 대학발표 해설

1. 출제 의도

○ 영토는 국민, 주권과 함께 국가의 주요 구성 요소임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국민으로서 영토에 대한 뚜렷한 인식을 지니고, 국제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토분쟁의 논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바른 사고의 정립이 필요하다. ChatGPT 등은 발생하는 정보들을 입수하여 지속적으로 알고리즘을 생산해, 때로는 잘못된 정보를 확산시킬 수도 있다. 역사적 근거와 지도자료 등을 토대로 한국의 영토를 분명하게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대한민국의 영토가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하는 논리적 사고를 하게 하는 데 출제 의도가 있다.

2. 문항 해설

[문제 1]은 영토가 지니는 의미 및 특징을 토대로 영토분쟁을 살펴보고, 기초적 문해력, 분석적 사고 및 유사 사안을 통한 유추적 사고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 제시문 <가>는 역사적 기록과 한국 헌법을 토대로 영토의 중요성과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즉, 영토는 국민, 주권과 함께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국민의 국적 및 생활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조선시대 기록에서부터 헌법에 이르기까지 영토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으로서 영토에 대한 뚜렷한 인식을 지니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로부터 영토가 규범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국민 즉 주권자의 인식에 의하여 파악될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 제시문 <나>의 두 가지 사례는 대표적인 국제 영토분쟁의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과거 한 민족이었던 국가들이 해체되며 벌어진 영토분쟁이며, 카슈미르 분쟁의 경우 인도령임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슬람교도로 발생한 종교·영토 분쟁이다. 두 사례의 발생 원인에 관해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답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요구된다.

제시문 <가>를 통해 영토의 중요성 및 특징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국민으로서 영토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있어야 하며, 그것이 영토의 범위를 파악하는데 핵심적인 요소임을 기술한다. 그리고 제시문 <나>의 두 사례 모두에서 영토분쟁이 각 주권자의 인식 차이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공통점을 찾아 서술하여야 한다.

[문제 2]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며, 각 부분의 취지와 평가 요소는 다음과 같다.

○ 문제의 취지

(1) 제시문 <마>에 나타난 현상을 설명하는 것

제시문 <마>에서는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가 현재 국제사회에서 분쟁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 기술되어 있다. 그에 관한 대표적인 예시로서 일본의 지속되는 영유권 관련 발언, 맹목적인 주장의 학습효과에 따른 ChatGPT 알고리즘의 모호한 반응 등이 제시된다. 분쟁지역이 아님에도 분쟁지역으로 인식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는 외교적·정치적 관계를 고려하여 그것을 방임하고 있다는 점을 적절하게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해당 발문의 취지이다.

(2) 위 현상을 제시문 <다>와 <라>의 내용에 근거하여 진단하는 것

제시문 <다>에서는 두 가지가 기술되고 있다. 하나는 영토주권 또는 영유권 주장에서 지도가 가지는 정치적 기능에 관한 설명이고, 또 하나는 현재 일본이 자국의 지도를 통해 주장하는 것과 모순되는 점이 기록된 고지도 자료의 제시이다. 제시문 <라>에서는 국제재판에서 고지도는 증거로서 가치가 낮지만, 그것은 단지 사법절차에서 증거로서의 의미일 뿐이며 영토 문제가 항상 재판을 통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기술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각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그것들을 근거로 제시문 <마>의 현상을 진단해야 하는데 이 현상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이유 없이 분쟁지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에 따르는 결과이므로, 제시문 <다>를 근거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논증하고 제시문 <라>를 근거로 이미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는 국제재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일본의 의도 및 국제사회의 오인에 따른 잘못된 현상임을 진단하도록 하는 것이 해당 발문의 취지이다.

(3) 위 진단을 바탕으로 제시문 <마>의 현상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

위 진단에 따르면 적어도 두 가지가 도출된다. 하나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점이고, 또 하나는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니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중간 결론을 각각 바탕으로 하여 서술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해당 발문의 취지이다. 논거만 충실하다면 서술자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대응 방안이 제시될 수 있으나, 국제재판 등의 사법적 수단을 제시할 수는 없다.

○ 답안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및 평가 요소

- (1)부분: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즉 제시문 <마>의 사례를 바탕으로 일반화된 현상을 도출하여야 한다. 일본 정부의 발언이나 ChatGPT의 반응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므로, 그 자체가 분석의 대상이 되거나 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 (2)부분: 제시문 <다>에 근거하여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논증하여야 한다. 가령 일본의 고지도와 현재 일본의 지도 사이에 나타나는 모순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제시문 <라>에 근거하여 독도 영유권 문제는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논증하여야 한다. 이로부터 제시문 <마>의 현상이 왜곡된 것이라는 점을 중간 결론으로 도출하여야 한다.
- (3)부분: 대응 방안은 논리적·합리적이어야 하며, (1)부분 및 (2)부분의 서술과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 즉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점을 전제로 하여야 함과 동시에, 독도 영유권 문제가 국제재판을 통하여 해결될 수 없다는 점도 전제로 하여야 한다. 가령 외교력 강화, 실효적 지배력의 유지 또는 강화, 정보 주도권의 확보를 통한 국제사회 인식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겠으나, 그에 대한 논거를 분명하고 충실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대응 방안 자체를 평가하기보다는 그 방안이 도출되는 과정의 논리성(예컨대, '대응 방안의 제시 – 그에 대한 논거 – 예상되는 한계점 또는 부작용 –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수단 제시' 등의 논증 과정)을 평가 요소로 삼아야 한다.

3.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문제 1	제시문 <가>에서 설명한 영토의 특징을 적절히 파악해 기술하였는가?	20
	제시문 <나>에서 제시한 두 가지 사례의 공통점을 제시문 <가>를 토대로 서술하였는가?	20
	논술 내용의 정합성, 정확한 단어 선택 및 문장 간 연결이 논리적인가?	10
문제 2	제시문 <마>에 나타난 사례들로부터 최근의 현상을 일반화하여 설명하고 있는가?	30

	제시문 <다>의 내용으로부터 현상을 적절하게 분석하고 있는가?	
	제시문 <라>의 관점에서 현상을 적절하게 분석하고 있는가?	
	우리나라의 독도 영유권에 관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고 있는가?	10
	제시문 <라>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가?	
	논술 내용의 정합성, 정확한 단어 선택 및 문장 간 연결이 논리적인가?	10

[문제 1]의 답안 평가는 다음 부분으로 구성되고, 각 부분의 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다.

첫째, 제시문 <가>에서 설명한 영토의 특징에 대해 적절히 파악하여 기술한다. (20점)

① 제시문 <가>에서 영토의 개념, 중요성에 관해 정확히 이해하고 설명한다.

② 제시문 <가>에 제시된 역사적 기록 및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의 인식이 영토 개념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한다.

둘째, 제시문 <나>에서 제시한 두 가지 사례의 공통점을 제시문 <가>를 토대로 서술한다. (20점)

① 두 사례에서 영토분쟁이 발생·전개된 원인을 이해한다.

② 제시문 <가>의 영토 개념이 지닌 특징을 통하여 제시문 <나>의 두 사례가 가진 공통점을 도출하고 그것을 적절히 서술한다.

셋째, 논술 내용의 정합성, 정확한 단어 선택 및 문장 간 연결이 논리적인가? (10점)

▶ 앞에서 제시한 내용과 조건에 의거하여, [문제 1]의 답안은 다음과 같이 6등급으로 평가한다.

- 1등급: 위의 2가지 모두 정확히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2등급: 위의 2가지 모두 수행했으나,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3등급: 위의 2가지 중 1가지를 정확히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4등급: 위의 2가지 중 1가지를 수행했으나,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5등급: 위의 2가지 중 0가지를 수행하였으나 일부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6등급: 위의 2가지 중 0가지를 수행하고,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글자 수에 제한(900±100자)이 있으므로, 800자 미만의 경우 아래와 같이 하향 평가한다.

700자~799자 : 1등급 하향 600자~699자 : 2등급 하향

600자 미만 : 6등급 부여 백지답안 : 7등급 부여

[문제 2]의 답안 평가는 다음 부분으로 구성되고, 각 부분의 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다.

첫째, 제시문 <마>에서 제시하고 있는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설명함은 물론, 그 현상을 제시문 <다>와 <라>의 내용을 근거로 진단한다. (30점)

① 제시문 <마>에 나타난 사례들(일본의 주장, ChatGPT의 반응)로부터 독도 영유권에 대한 최근의 현상을 일반화하여 설명하고 있는가? (10점)

② 제시문 <다>에서 기술하는 지도의 기능 및 일본의 고지도 자료로부터 현상을 적절하게 분석하고 있는가? (10점)
③ 제시문 <라>에서 제시하는 국제재판의 관점에서 현상을 적절하게 분석하고 있는가? (10점)

둘째, 제시문 <다>와 <라>에 따라 진단한 결과를 근거로 제시문 <마>의 현상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서술한다. (10점)
① 우리나라의 독도 영유권에 관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고 있는가? (5점)
② 제시문 <라>에 따라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사법적 해결 방안의 부적합성을 이해하고, 그것으로부터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가? (5점)

셋째, 논술 내용의 정합성, 정확한 단어 선택 및 문장 간 연결이 논리적인가? (10점)

▶ 앞에서 제시한 내용과 조건에 의거하여, [문제 2]의 답안은 다음과 같이 6등급으로 평가한다.
- 1등급: 위의 2가지 모두 정확히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2등급: 위의 2가지 모두 수행했으나,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3등급: 위의 2가지 중 1가지를 정확히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4등급: 위의 2가지 중 1가지를 수행했으나,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5등급: 위의 2가지 중 0가지를 수행하였으나 일부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6등급: 위의 2가지 중 0가지를 수행하고,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글자 수에 제한(900±100자)이 있으므로, 800자 미만의 경우 아래와 같이 하향 평가한다.

700자~799자	: 1등급 하향	600자~699자	: 2등급 하향
600자 미만	: 6등급 부여	백지답안	: 7등급 부여

○ 대학발표 예시답안

[문제 1]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영토가 필요하다. 영토는 국민들의 생활을 위한 물리적 터전임과 동시에 정치, 문화, 언어, 종교적 기반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공유하는 정체성이나 민족감정은 영토로부터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토주권의 확보는 국가의 존립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제시문 〈가〉는 영토의 개념에 관해 이와 같이 설명하면서도,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어떤 나라의 영토 범위나 경계가 주권자의 인식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제시문 〈가〉에서는 조선시대 우리 영토에 대한 선조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데, 주권자인 국민의 인식을 기준으로 현재 대한민국 영토의 구체적 범위 역시 해석할 수 있다.

제시문 〈나〉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카슈미르 분쟁은 국가 간 영토분쟁의 대표적인 예시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의 경우 같은 민족적 근간을 공유하나 구소련 해체 이후 우크라이나가 서방과의 우호 관계를 확대해 온 것을 원인으로 벌어진 분쟁이다. 반면 카

슈미르 분쟁의 경우 카슈미르 지역이 인도령임에도 불구하고 이슬람교도로 구성됨에 따른 종교적 이유를 원인으로 분쟁이 발생한 지역이다. 그 분쟁이 민족, 역사 또는 종교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표면적으로는 각각 다른 사례로 볼 수 있지만, 영토주권 관점에서 두 사례는 공통점이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민족적 정통성에 따라 동일한 정치체제 및 지정학적 이점을 공유해야 한다는 러시아의 영토 인식과 독자적 체제로 분리되는 지역은 다른 영토라는 우크라이나의 영토 인식이 충돌하여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카슈미르 분쟁은, 인도의 행정력이 미치는 지역은 인도의 영토라는 인식과 이슬람교를 믿는 지역은 같은 영토에 속한다는 파키스탄의 인식이 충돌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두 사례 모두 영토가 주권자의 인식에 따르는 개념이라는 특징으로부터 분쟁이 발생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다. (986자)

[문제 2]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는 독도의 영유권이 분쟁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제시문 〈마〉는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준다. 일본은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국제사회에서는 외교적·정치적 관계를 고려하여 그것을 방임하고 있다. 그 결과 독도는 영토분쟁지역이 아님에도 그렇게 인식되고 있다. ChatGPT의 반응은 그러한 상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제시문 〈다〉에서는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표시된 일본의 고지도를 확인할 수 있다. 지도는 영토주권의 주장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쓰일 수 있으나, 일본이 자국에게 유리하게 작성한 현재의 지도와 고지도에서 확인되는 역사적 사실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점은 그러한 수단으로서의 설득력을 약화한다. 이는 일본의 주장에 근거가 없으며,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는 증명에도 이미 실패한 것을 뜻한다. 따라서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옳고 그름의 판단, 즉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만일 국제재판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면 일본의 고지도는 증거로써 활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처음부터 국제재판의 대상이 아니다. 제시문 〈라〉에서는 우리 정부가 이미 오래전에 그와 같이 선언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관해 의도적으로 분쟁을 유발한 결과 분쟁지역으로 인식되는 현상은 사실이 왜곡된 것에 다름아니다.

독도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실효적 지배력을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 우리는 다른 영토, 가령 경기도에 관하여 그것이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친다면 영토주권도 보장된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토 찬탈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이 지속될 수 있다. 그러나 독도가 우리의 지배영역 아래에 있음을 일관적으로 보여주는 것 외에, 그러한 주장에 반응하여 다툼으로 나아감으로써 주권에 관한 문제를 다른 사람이 결정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외부의 제3자가 인정해 주어야 그것이 우리의 영토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993자)

2026 성신여대 파이널

제 3 강 2025학년도 기출문제 2

※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가>

영국의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는 1976년『이기적 유전자(The Selfish Gene)』를 출간하였다. 이 책에서 리처드 도킨스는 생물 진화의 주체는 유전자이고, 생물들은 모두 유전자의 자기복제 속에서 만들어진 기계적 존재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기적 유전자에서 이기적이라는 말은 다른 이의 자원을 사용해서 자기복제를 늘리는 행위이고, 이타적이라는 말은 자신의 자원을 사용해서 다른 이의 자기복제를 늘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언뜻 보기에 진화론적 관점에서 이타적 유전자는 자연 선택되기 어려운 것이다. 이기적이라는 단어가 지닌 부정적 뉘앙스는 도덕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이타적 행위에 대한 상반된 의미로 오해되기도 한다. 진화생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기적 유전자인 개체들 사이에서 어떻게 이타적 행동이 관찰되고 협력이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리처드 도킨스의『이기적 유전자』에서 ㉠'호혜적 이타주의(reciprocal altruism)'는 내가 다른 개체를 도우면, 언젠가는 그 개체도 나를 도울 것이라는 신뢰에 기반한 행동과 잘 연관된다. 진화론자들은 호혜적 이타주의를 "내가 네 등을 긁어줄테니, 다음에는 네가 내 등을 긁어다오"라는 말로 설명하기도 한다.

로버트 액설로드(Robert Axelrod)의『협력의 진화(The Evolution of Cooperation)』에서는 생물계에서도 적당한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호혜주의를 기반으로 한 협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팃포탯(Tit-for-Tat, 이하 TFT)'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TFT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으로 대응하는 전략이다. 기본적으로 TFT는 우선 협력으로 시작하고 그 이후부터는 상대가 바로 직전에 선택한 대로 맞대응한다. 즉, 상대가 협력하면 자신도 협력하고, 상대방이 배신하면 자신도 배신하는 방식이다. 로버트 액설로드가 ㉢'반복적 죄수의 딜레마(Iterated Prisoner's Dilemma)' 상황에서 최적의 전략이 무엇인지 찾아내기 위해 개최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대회에서, 이 전략은 두 차례 1위를 차지하여 그 유용성을 입증한 바 있다.

TFT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게임이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게임이어야 하며, 반복 게임에 참여하는 참가자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상대방 역시 그럴 것임을 인지하여야 한다. 또한 참여자는 자신이 이전에 상호작용했던 상대방이 누구인지 정확히 변별할 수 있고 과거의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기억할 수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또한 게임에서 자신이 내리는 협력 또는 배반의 선택은 상대방에게 명료하게 전달되며, 상대방의 선택 역시 자신에게 명료하게 전달될 것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A와 B 두 경기자는 협력과 배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표 1> 참조). 이때 A와 B는 상대방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협력과 배반 중 선택을 해야 하며, 상대방이 어떤 선택을 하든 상관없이 배반이 협력보다 더 많은 보수(payoff)를 받는다. 여기서 딜레마는 두 참가자 모두 배반을 하면 모두 협력을 선택할 때보다 적은 보수를 얻는다는 데 있다.

아래 <표 1>에서 두 경기자가 협력하면 '상호협력에 대한 보상(reward for mutual cooperation)'을 받는다. 이 예에서 보상(R)은 3점이다. 한편 한 경기자가 협력하고 다른 경기자가 배반을 선택하면, 배반을 선택한 경기자는 '배반의 유혹(temptation to defect)'으로 5점을 얻고, 협력을 선택한 경기자는 '머저리의 빈손(sucker's payoff)'으로 0점을 얻는다. 두 경기자 모두 배반을 선택했을 때는 '상호배반에 대한 처벌(punishment for mutual defection)'로 두 경기자 모두 1점을 얻는다.

<표 1> 죄수의 딜레마

		A 경기자	
		협력	배반
B 경기자	협력	R=3, R=3 상호협력에 대한 보상	S=0, T=5 머저리의 빈손, 배반의 유혹
	배반	T=5, S=0 배반의 유혹, 머저리의 빈손	P=1, P=1 상호배반에 대한 처벌

출처:『협력의 진화』

만일 경기가 단 한 번이라면 경기자는 상대방이 어떤 선택을 하든 배반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반면 반복적 죄수의 딜레마에서는 두 경기자가 협력하거나 배반하는 선택을 반복하면서, 각 라운드에서 경기자의 선택은 이전 라운드에서의 상호작용에 따라 결정된다. 두 경기자가 앞으로도 계속 게임을 할 가능성이 높으면 각 경기자는 현재 게임에서 배신을 선택할 경우, 상대방이 다음 라운드에서 보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게 된다. 따라서 즉각적인 배반으로 얻을 수 있는 단기적인 보상을 추구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협력을 지속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나>

① 무리 지어 생활하는 흡혈박쥐는 밤에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흡혈박쥐는 주로 동물의 살갗에 상처를 내고 흘러나온 피를 빨아먹고 산다. 이들은 먹이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아 피를 빨아먹을 기회가 있을 때 배가 찰 때까지 실컷 먹는다. 운 나쁘게도 굶주린 채 돌아오는 개체가 있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먹잇감을 발견한 개체는 여분의 피까지 잔뜩 빨아먹고 오는 경향이 있다. 미국 메릴랜드 대학 생물학 교수인 제럴드 윌킨슨(Gerald

Wilkinson)은 먹잇감을 발견한 흡혈박쥐가 그렇지 못한 굶주린 동료에게 자신이 먹은 피를 토해내는 식으로 나눠주는 것을 발견했다. 제럴드 윌킨슨이 목격한 110회 중 77회는 어미가 새끼를 먹인 경우였고, 다른 다수의 경우 또한 혈연관계인 개체 간에 피를 나눠 준 경우였다. 그러나 무리에서 같이 생활하는 친족이 아닌 흡혈박쥐 사이에서도 먹이를 주는 행위가 발견되었다. 이 경우 개체들은 자주 잠을 같이 자는 잠자리 친구들로 서로 반복적으로 상호작용할 기회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

—『이기적 유전자』 재구성

② 암수한몸인 농어의 성별은 수정 시 염색체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모든 개체는 암수 양쪽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물고기는 한 번의 산란 시 알이나 정자 중 하나만 방출한다. 이들은 일부일처 관계를 형성하고 암수의 역할을 교대로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경우, 개체는 수컷의 역할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개체 입장에서 수컷 역할이 에너지 소비가 적기 때문이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농어는 상당히 엄격한 교대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 경우 협력이란 자기가 암컷의 역할을 할 차례가 왔을 때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가 암컷의 역할을 할 차례가 됐을 때 수컷 역할을 하려는 것은 배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보복의 대상이 된다. 상대방은 다음에 자신이 암컷의 역할을 해야 할 차례가 왔을 때 암컷의 역할을 거부하거나 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이기적 유전자』 재구성

③ 검은머리갈매기는 커다란 군락을 지어 둥지를 짓고 생활한다. 이때 각 둥지 사이는 불과 수 미터밖에 안 된다. 검은머리갈매기 군락에서는 이웃이 먹이를 찾으러 둥지를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둥지를 습격해 이웃의 어린 새끼를 잡아먹는 개체를 흔히 볼 수 있다. 갓 부화한 새끼 혼자 둥지에 남아있을 경우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포식자에게 먹히기 쉽다. 이 경우 이웃의 어린 새끼를 잡아먹은 검은머리갈매기는 먹이를 잡으러 나가는 수고를 하지 않고도 풍부한 영양을 섭취함과 동시에 자기 둥지도 지키는 결과를 얻는다.

—『이기적 유전자』 재구성

<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대한 국가적 대응의 경우를 가정해 보자. A 국가와 B 국가는 기존의 방식대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현행유지'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고, '탄소중립' 목표를 책임 있게 달성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현행유지를 선택할 경우,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외면하는 것이고, 탄소중립을 선택할 경우,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다. 아래 <표 2>에서 두 국가는 현행유지를 선택하거나, 탄소중립을 선택할

수 있다. 두 국가가 모두 탄소중립을 선택한다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동참으로 동일한 6점을 획득하지만, 두 국가 모두 현행유지를 선택한다면 현재 기후변화 위기 극복에 전혀 기여하는 바가 없어 모두 0점 처리된다. 한 국가만이 현행유지를 선택하는 경우는 자국 시장의 번영과 풍요를 추구하여 이윤을 확보(9점)할 수 있다. 반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선택한 국가는 환경과 사회, 구조적 체계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동안 이익 환수의 기회가 미루어지면서 상대적 손실(-3점)을 입는다. 두 국가가 동일한 조건에서, 즉각적인 선택을 할 때에는 현행유지가 유리한 전략이겠지만, 선택의 기회가 반복적으로 주어질 경우 여러 차례의 상호작용 결과 두 국가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다. 여기에는 탄소중립이라는 가치 실현을 위해 두 국가가 협력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일 것이라는 상호 신뢰에 기반한 호혜적 이타주의가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표 2> 기후변화 대응 게임

		A 국가	
		탄소중립	현행유지
B 국가	탄소중립	(6, 6)	(-3, 9)
	현행유지	(9, -3)	(0, 0)

출처: 양채열, 2021, '사회적 딜레마와 ESG' 재구성

<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극단적인 이상기후에 의한 재난은 재해에 취약한 약소국가와 아프리카 국가들에 집중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우 적어 기후변화 유발에 대한 책임이 적은 저소득 국가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재난과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인명 피해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기후위기조차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산업화와 급격한 경제성장은 자원의 고갈과 환경오염을 초래하였고, 이는 지속적인 발전과 균등하고 안전한 기후 환경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기후위기는 인류가 처한 최대의 위협이자 엄중한 과제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인 IPCC(International Panel of Climate Change)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화 이전 대비 210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는 2010년 대비 45% 수준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는 순제로(net-zero) 배출, 즉 '탄소중립'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1997년 제3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를 통해 교토의정서를 채택함으로써,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및 공동이행제도를 도입하여, 온실가스 비율을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

련하였다. 그러나 미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의 불참으로 인해 공동의 협약에서 정한 목표에 이르지 못하였다. 2012년 제18차 당사국총회를 통해 제2차 교토의정서 공약 기간을 2020년까지로 연장하였지만, 이때도 미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제2차 공약에 불참을 선언하면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의 의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전 지구적 이행 및 인류의 공동과제인 기후위기 대응에 선진국들이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결국, 제22차 당사국총회에서 각국은 세부지침에 따른 탄소중립 목표치를 설정하는 데 동의하였고, 마침내 2021년 제26차 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의 세부이행 규칙을 완성하였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와 재생에너지 조기 정착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청정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강조되고 있다. 미국, EU 등 주요국들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제고가 진행되고 있고, 한국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달성 목표치를 2030년까지 30.2%, 2050년까지 70%로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글로벌 이니셔티브가 바로 RE100(Renewable Energy 100%) 캠페인이다. 이는 사용하는 전력의 100%가 재생에너지로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기술력과 충분한 비용을 지닌 애플과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의 자발적인 실천이 전제가 된다. 선진국은 유수한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을 각국에 지원하고, 탄소중립의 글로벌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비용 구축을 선도해야 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지속가능한 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에 동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요구이기도 하다.

문제 1 제시문 <가>의 ㉡과 ㉢의 관계를 설명하고, 제시문 <나>의 사례를 활용하여, 제시문 <가>의 ㉢과 유사한 상황에서 ㉠이 갖는 역할을 서술하시오. (900±100자)

문제 2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제시문 <다>의 가상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표 2>를 활용하여 도출하고, 제시문 <라>의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서술하시오.

(900±100자)

제 3 강 2025학년도 기출문제-오후 대학발표 해설

1. 출제 의도

○ 산업화 이후 경쟁은 급격한 경제성장의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화석연료에 의존한 제조업 대량생산과 유통은 자원고갈과 환경오염 문제를 낳았고, 선진국의 확장은 후진국의 상대적인 빈곤과 차등을 심화시켰다. 기후 위기라는 인류 최대의 위기를 맞아,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에 협력해야 한다. 선진국은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을 유발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소극적 자세로 국제협약에 불참하거나, 온실가스 저배출 국가나 물리적, 환경적으로 취약한 국가와 그 책임을 나누려고 하고 있다. 팃포탯(Tit-for-Tat) 전략은 호혜적 이타주의가 작동하여 협력이 최선의 전략임을 잘 보여준다. 동물 행동학이 보여주는 사례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게임 이론 등을 토대로 인류가 당면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2. 문항 해설

[문제 1]은 제시문 <가>에 제시된 ㉡'팃포탯'과 ㉢'반복적 죄수의 딜레마'의 관계를 설명하고, 제시문 <나>에 소개된 동물 사례들을 활용하여 ㉢'반복적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 적용한 후, 적용한 사례에서 ㉠'호혜적 이타주의'의 역할을 논리적으로 서술할 것이 요구된다. 이 문제는 상기 주요 개념들을 토대로 기초적 문해력, 분석적 사고 및 유사 사안을 통한 유추적 사고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제시문 <가>는 '반복적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최적 전략의 하나로 알려진 '팃포탯'전략의 개요 및 기본 전제를 소개하고 있다. 한편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 한 번 치러질 경우와 반복적으로 치러지는 경우의 차이에 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제시문 <가>에서는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와 로버트 액설로드의 『협력의 진화』에서 이기적 유전자를 갖고 있는 개체들이 이타적 행위를 하는 것을 설명하는 데 활용하고 있는 '호혜적 이타주의'의 개념 및 시사점에 관해서도 다루고 있다. 제시문 <나>는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에 소개된 동물의 이타적 행동 사례 및 이기적 행동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답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요구된다. 제시문 <가>를 통해 ㉡ '팃포탯'이 ㉢ '반복적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상대방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유용한 전략의 하나임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제시문 <나>의 ① 혹은 ②를 통해 동물들 사이에서 관찰되는 이타적 행동이 ㉠'호혜적 이타주의'를 통해 설명될 수 있고, 이는 결국 이기적 유전자의 자기복제를 가능케 하는 것임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 2] 제시문 <다>의 <표 2>는 두 국가를 가상으로 설정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선택의 결과를 점수화하여 제시하였다. 국제사회의 요구에 동참할 것인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협력적 요구를 외면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제시문 <가>가 의미하는 호혜적 이타주의의 의미를 인지하고, 두 국가가 우선적으로는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지만, 반복적 경험을 통해 결국 협력이 배신보다 유리한 전략이라고 판단할 것임을 파악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변동과 기후변화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바람직한 자세가 무엇인지 제시문을 통해 사고해야 한다.

제시문 <다>는 가상의 경우를 만들어, 제시문 <가>의 죄수의 딜레마를 응용하여 각각의 선택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였다. 처음 선택에서는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가장 좋은 점수를 받는 전략을 택할 것이다.

제시문 <가>의 원리를 이해하고, 결국 반복적 죄수의 딜레마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국제사회는 협력의 이행으로 당면한 문제를 극복해야 함을 파악한다.

제시문 <라>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제시하고 있다. 선진국은 산업화 이후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우월한 입지를 차지했으나, 여전히 국제사회의 협력에 소극적이고 오히려 후진국이 이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선진국이 주도적으로 협력구조에 동참하고 호혜적 지원으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3.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문제 1	제시문 <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팃포탯'과 ㉢'반복적 죄수의 딜레마'의 개념을 이해하고 두 개념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서술	15
	<나>에 제시된 적합한 사례를 활용하여 <가>에 제시된 ㉠'호혜적 이타주의'가 ㉢'반복적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명확하게 서술	20
	논술 내용의 정합성, 정확한 단어 선택 및 문장 간 연결이 논리적인가?	15
문제 2	・<다>의 가상 사례에서 두 나라의 선택에 따른 보상 점수를 설명(10) ・<다>의 <표 2>의 결과를 활용하여 이에 따른 결과적 상황을 서술(10)	20
	・<다>의 두 나라의 선택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을 때 가장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문을 활용하여 서술(5)	5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요구되는 바를 <라>지문을 통해 이해하고 이를 요약(5) ・선진국이 선도적으로 협력에 동참해야 함을 파악하여 서술(5)	10
	・RE100 등을 실천할 수 있는 선진국 기업의 자발적이고 선도적인 실천을 지문을 활용하여 요약 서술(5) ・비용과 기술지원이 필요한 저개발 국가에 대한 지원과 협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바람직한 협력 구조에 대해 논리적으로 서술(5)	10
	・배점 기준의 비율과 유사한 문단 구성 ・완성도 있는 문장 기술	5

[문제 1] 배점 50점

문제 1번의 답안은 크게 다음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제시문 <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팃포탯'과 ㉢ '반복적 죄수의 딜레마' 각각의 개념을 이해하고 둘 사이의 관계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술한다. 이때 한 번뿐인 죄수의 딜레마 게임과 '반복적 죄수의 딜레마' 사이의 차이점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둘째, 제시문 <가>의 ㉢'반복적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처럼 반복적인 상호작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개체 간에 장기적으로 협력을 지속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을 제시문 <나>의 사례를 활용하여 설명한다.

※ 제시문 <나>의 ① 혹은 ②의 사례를 선택하여 기술하는 것이 필요함. ③의 사례를 선택한 경우, 이타적 행동과 상반되는 경우이므로 정밀한 논리를 구성하여 기술하지 않는 이상 감점 대상임.

하나 이상의 사례를 선택하여 서술할 수 있으나 설명이 불충분한 경우 감점 대상임.

셋째, 적용된 사례에서 제시문 <가>의 ㉠'호혜적 이타주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시문 <가>에 소개된 개념들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서술한다.

▶ 앞에서 제시한 내용과 조건에 의거하여, 답안은 다음과 같이 6등급으로 평가한다.
- 1등급: 위의 3가지를 모두 정확히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2등급: 위의 3가지를 모두 수행했으나,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3등급: 위의 3가지 중 2가지를 정확히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4등급: 위의 3가지 중 2가지를 수행하고,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5등급: 위의 3가지 중 1가지를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6등급: 위의 3가지 중 1가지를 수행하고,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글자 수에 제한(900자±100자)이 있으므로, 800자 미만의 경우 아래와 같이 하향 평가한다.

700자~799자	: 1등급 하향	600자~699자	: 2등급 하향
600자 미만	: 6등급 부여	백지답안	: 7등급 부여

[문제 2] 배점 50점

문제 2번의 답안은 크게 다음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제시문 <다>가 제시한 <표 2>를 보고 각각의 점수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설명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은 선택의 결과를 간략히 서술한다. 그리고 <가>의 지문에서 활용된 반복적 게임의 결과는 결국 호혜적 이타주의에 따라 협력해야 최선의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음을 파악해야 한다. 처음에는 가장 좋은 점수를 확보하기 위한 선택을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화하는 국제사회의 문제점과 각국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호혜적 이타주의에 기반한 국제협력 이행에 동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파악한다.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국제협력 지침 이행에 동참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임을 시사점으로 파악해 내고 이를 논리적으로 서술한다.

둘째, <라>의 제시문을 읽고 선진국이 주도하여 경제성장과 시장경제의 풍요를 경험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후진국 혹은 물리적· 환경적으로 취약한 국가들이 차별되었음을 파악한다. 선진국 주도의 산업화에 따라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이 심화하였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저개발국가와 분담하게 된 상황을 파악한다. 즉, 선진국은 산업화 과정 동안 환경 저감에 영향을 미친 만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과 노력에서도 선도적으로 그 책무를 이행해야 함을 이해한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모든 국가는 탄소중립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고 각국이 정한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 자발적 이행을 할 필요가 있음을 이해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국은 선도적으로 애플과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비용을 활용하여, RE100 등 탄소중립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 환경 자원을 저개발국가에 지원해야 함에 대해 논리적으로 서술한다.

▶ 앞에서 제시한 내용과 조건에 의거하여, 답안은 다음과 같이 6등급으로 평가한다.
- 1등급: 위의 3가지를 모두 정확히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2등급: 위의 3가지를 모두 수행했으나,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3등급: 위의 3가지 중 2가지를 정확히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4등급: 위의 3가지 중 2가지를 수행하고,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5등급: 위의 3가지 중 1가지를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6등급: 위의 3가지 중 1가지를 수행하고,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글자 수에 제한(900자±100자)이 있으므로, 800자 미만의 경우 아래와 같이 하향 평가한다.

700자~799자	: 1등급 하향	600자~699자	: 2등급 하향
600자 미만	: 6등급 부여	백지답안	: 7등급 부여

○ 대학발표 예시답안

[문제 1]

제시문 〈가〉에 소개된 ㉠'팃포탯' 전략은 ㉡ '반복적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최적의 전략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 전략은 처음에는 협력을 선택하고 그 이후부터는 협력과 배반 중 상대방이 바로 직전에 선택한 행동을 그대로 따라 하는 전략이다. '팃포탯'은 '반복적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최적의 전략을 찾기 위해 개최된 컴퓨터 시뮬레이션 대회에서 두 차례 우승함으로써 그 유용성을 입증한 바 있다. 이 전략은 상대방이 협력하면 계속 협력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얻게 되지만, 배신을 선택한다면 즉각 보복하여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함으로써 상대방이 배신을 선택하는 대신 협력을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한 번뿐인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는 〈표 1〉에서처럼 A와 B는 상대가 어떤 선택을 하든 상관없이 배반을 선택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이지만, 반복되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는 장기적으로 협력을 지속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한편 제시문 〈나〉에 소개된 흡혈박쥐의 경우 무리를 지어 생활하면서 동료에게 자신이 먹은 피를 나눠줘 협력하는 것과 사냥에 실패하고 돌아온 동료의 굶주림을 외면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반복적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 참여하는 경기자와 유사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 사례는 동물들 사이에서도 적절한 조건만 갖추어진다면 상호성을 기반으로 한 협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흡혈박쥐의 이타적 행동은 '호혜적 이타주의'를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 흡혈박쥐는 동물의 피를 먹고 사는데 항상 먹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먹은 피를 같이 생활하는 무리의 굶주린 다른 개체에 나눠주는 행동은 개체 입장에서 즉각적인 이득은 기대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자신의 생존과 번식에 이로울 수 있다. 따라서 '반복적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처럼 반복적인 상호작용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호혜성에 기반한 이타적 행동이 결국 개체의 입장에서 생존에 유리한 전략일 수 있다. (992자)

[문제 2]

제시문 〈가〉는 호혜적 이타주의를 기반으로 한 협력이 최선의 전략임을 TFT를 활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다〉의 〈표 2〉를 보면, A 국가와 B 국가 중 한 국가만 현행유지를 선택했을 때, 그 국가는 가장 큰 점수인 9점을 얻는다. 이때 탄소중립을 선택한 국가는 상대적으로 -3점을 얻는다. 두 국가가 서로 다른 선택을 했을 경우, 〈가〉의 〈표 1〉과 마찬가지로, 배반에 해당하는 현행유지가 협력에 해당하는 탄소중립보다 더 많은 점수를 받는다. 선택의 기회가 한 번만 주어진다면 두 국가는 모두 현행유지에서 얻을 수 있는 9점을 기대하며, 탄소중립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딜레마는 역시, 두 국가 모두 현행유지를 선택할 때 얻을 수 있는 점수는 두 국가가 모두 탄소중립을 선택하여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적다는 것이다. 만약 두 국가가 현행유지와 탄소중립의 선택을 반복 실행한다면, 이전의 선택에서 이루어진 상호작용을 파악하며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할 것이다. 만약 A 국가가 현행유지를 선택한다면, 다음 선택에서 B 국가는 이에 보복을 결정할 것이다. 두 국가는 즉각적인 선택의 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단기적 보상을 추구하기보다는, 반복적 상호작용에서 탄소중립에 협력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라〉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의해 인류는 풍요와 시장경제의 이익을 경험하였지만,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의 심화로 기후변화라는 인류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국제사회는 교토의정서 채택과 파리협정 등을 통해 전 세계의 탄소중립 목표치 달성에 협력적 이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산업화와 경제 부흥을 먼저 경험한 선진국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환경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가들에 그 책임을 분담시키고 있다. 선진국은 RE100 등 환경기술개발과 비용의 투자가 가능한 글로벌 기업들을 통해 저개발국가를 지원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적 동행을 선도해야 한다. (993자)

제 4 강 2025학년도 모의논술

※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가> 아주 근본적 수준에서 주택은 인간 존재를 위한 기본적 요구 중 하나이다.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피신처가 되고, 쉬며 재생산을 하는 삶의 장소라는 점 이외에 주택은 훨씬 광범위한 의미를 지닌다. 현대 사회에서 주택은 대부분 가구의 가장 큰 단일 지출 품목이고, 중요한 투자의 가능성을 지닌다. 주택은 점유의 개념에 근거하여 임대와 자가 주택으로 구분되고, 민간 소유와 공공 소유, 시장 또는 비시장 양도에 기초하여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루어진다. 여기서 양도는 가격 결정 메커니즘을 말하고 대부분이 민간 시장(임대와 자가가 모두 포함)에서 사고, 팔고 임대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즉 주택은 사적으로 소유되고 시장을 통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하나의 경제 상품 중 하나이다. 경제적 효율성에 기초하여 국가의 시장 개입이 최소한으로 제약될 수도 있는 것이다. 공공 비시장 주택은 주택 시장에서 아주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산업화와 도시화가 성숙하게 이루어진 국가의 사회주택, 비영리 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 주택 등이 이에 포함된다. 주택은 보건, 교육 서비스와 같이 사회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다루어지는데, 주택이 지닌 사회재, 집합재적 성격을 고려하고 사회 민주적 체제하에서 시민의 권리를 옹호한다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가 주택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주택은 인간 보호의 근원적 속성을 지닌 만큼, 공중위생, 주택 과밀문제, 높은 임대료, 주거환경 악화 등의 문제까지 폭넓게 다루어 주택 최저기준을 설정해야 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주택은 사회산업이나 사회발전과 맥을 같이 함으로써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과의 격차를 줄이고 도시 노동자 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시장 메커니즘만으로는 저소득층에게까지 수요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주택보조금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더욱이 한국과 같이 주택 시장이 지역적 소득 계층별로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경우 정부의 역할이 더 강조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시민의 권리와 사회서비스로서의 주택을 인식하고 임대자와 임차자의 상관에서 세입자 권리를 보호하고 주택복지적 발상으로 양적 질적 요구를 함께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지닌 시장경제하에서의 상품성은 복지서비스의 개념보다 경제적 가치의 개념이 크게 형성되어 있다. 아래의 표가 설명하는 바와 같이 주택은 수요재보다 소요재의 성격이 강조되어야 하고,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하는 권리재의 기능을 우선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막상 시장에서는 공급자와 수요자, 그리고 임차인과 임대인은 자기의 이익이 우선이 된 경쟁관계이고 경제적 효과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밖에 없다.

공급과정	주택소요(housing needs)	주택수요(housing demand)
공급원리	인간의 기본권 보장	경쟁 원리 추구
공급대상	저소득층, 무주택자, 도시영세민	모든 소득계층 (중고소득층이 주)
주택점유형태	임대 우선, 부분 분양	분양과 임대
공급자 vs 수요자	공급자와 수혜자는 협동관계 기관간 수혜대상자간은 경쟁관계	기업간 공급자와 소비자간 경쟁관계
정부의 역할	직접적 지원과 보조	간접 금융과 세제지원

주택은 단일 상품으로 그 가격이 매우 비싸고 심지어 중고 상품임에도 지역 효과에 영향을 받아 가격이 더욱 상승하여 주택을 팔았을 때 실현되는 경제학적 교환가치가 큰 특성이 있다. 특히 지리적 부동성과 내구성은 주택에 대한 이해를 복잡하게 하여, 유휴자금이 넉넉한 고소득층과 일부 중산층들까지 주택에 대한 투자를 부의 축적의 수단으로 삼고 권리재(의식주 중 하나로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 재화)로써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하는 주택의 배분 형평성을 저해시키기도 한다. 부동산에 대한 현명한 투자는 자산 구축에 크게 이바지한다. 부동산은 움직여 옮길 수 없는 부동적이고 내구성 강한 주택을 포함한 재산, 토지나 건물, 수목 등을 일컫고 경제적 가치가 핵심이다. 하지만 주택을 부동산과 동일어로 취급할 수는 없다. 주택은 '거주' 또는 '주거'에 집중하여야 한다. 소득 창출의 기회를 주택에 대한 투기를 통해 얻고자 하는 오랜 한국 사회의 정서, 불완전한 주택정책, 주택 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한 시민 사회의 불안감 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집은 '사는 것(buy)'으로 단순히 인식할 수 없는, '사는(dwell, 혹은 live) 곳'이 되어야 한다. 민간 시장에서 거래되는 수요상품(demand)이기 전에 주택을 소요재, 권리재로 인식하는 국민적 정서 함양이 필요하다.

<나> 1960년대 이후 서울의 도시화가 급격히 전개됨에 따라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고자 강남을 개발했고, 그 시기 수백 원이었던 토지 가격이 순식간에 수천 원이 되었고, 1970년대 수십만 원에 이루면서 십년 간 천배가 상승했다. 이후 명문 고등학교의 대거 강남으로의 이전, 8학군 형성, 88 올림픽을 계기로 잠실이 개발되면서 강남-서초-송파로 강남지역의 영토 확장, 법원과 검찰청의 서초동 이전, 서초동 예술의 전당 개관, 삼성동 개발 등 도시 내 신도시 건설(한강을 건너 강북의 도시화 산업화가 강남으로 확대)을 경험한 후 이 지역의 토지 가격은 백만 배쯤 상승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수천만 원 차이에 지나지 않던 아파트 가격은 십억 원의 편차를 낳게 되었고, 그 시기 강남을 선택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박탈감에 화를 내고 더욱이 그런 기회조차 얻기 힘든 20대, 30대 세대는 경제적 소외감에 분노한다. 부동

산은 지리적 효과에 매우 민감하여 지역적 격차가 늘 존재한다. 현재 고금리, 고환율에서 우리 경제 상황이 매우 부담스럽다. 외환보유고를 풀어 환율을 방어하다 IMF를 맞은 끔찍한 기억이 있어 정부가 환율에 개입하기는 매우 조심스럽다. 정부의 정책은 한국 돈의 값어치가 국제 시장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지 않을 딱 그 범위 안에서만 운영되어야 하는데, 이중 부동산 정책은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의 가장 큰 부분 중 하나이다. 국내 거시경제 정책의 범위 안에서 부동산 정책이 시행되기 때문에, 경기 불황 속에서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금리를 올릴 수는 없다. 이전 세대는 대출을 통해 집을 갖고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정도의 경제 상황에서 살았지만, 현재는 경제력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2·30대가 대출로 집을 사고 이자와 원금에 대한 부담을 극복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2015년 이후 꾸준히 한국은행은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경고해 왔다.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자영업 대출과 신용대출을 규제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자를 유예해주거나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배려해준다. 대신 주택 담보 대출과 전세 대출을 규제한다. 한국 경제 성장률은 1~2%인데, 부채 증가율은 5% 안팎이다. 거대한 규모의 부채 중 대부분은 주택 담보 대출이다. 한국처럼 만기 일시 상환 비중이 높은 나라는 극히 드물다. 소득보다 빚으로, 그것도 빚은 이자만 내고 원금은 나중으로 미룬다. 한국 가계 자산은 80%가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산의 대부분이 빚이다. 부동산, 그야말로 부동, 움직이기 어려운 자산이다. 금융자산이 별로 없는 대출자가 은행에 빚을 갚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원금 상환은 연기하고 이자만 내는 것, 또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 나가는 것, 아니면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해서 빚을 갚는 것이다. 주택 관련한 대출을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기 위해 소비를 줄여야 한다. 소비가 위축되니 경기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금융기관이 주택담보 대출의 원리금 균등분할 비율을 갑자기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게 되면 그야말로 가계는 순식간에 궁핍해진다. 이미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정책과 일본의 거품 경제에서도 금융위기의 최대 원인이 주택 관련 부동산 문제였음을 경험한 바 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다시 급등했다. 가격 상승의 원인은 금리 인하, 부동산 정책 실패, 분양 아파트 감소 등에서 그 원인을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상품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금리 인상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니다. 금리가 내리면 수요가 증가하고 오히려 집값이 오르게 된다. 공급도 마찬가지다.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이 늘면 가격이 하락한다.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수요의 증가 혹은 공급의 감소 둘 중 하나가 원인이다. 현재 아파트 가격 상승의 원인은 거래량에 있다. 수요의 증가가 가격 상승을 불러온 것이다. 주택 수요는 다른 재화와 달리 유일하게 실제 사용하는 수요와 투자하는 수요가 동시에 존재한다. 부동산은 어떤 때는 실수요가 증가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투자수요가 증가하기도 하는데, 2020년에는 전년도인 2019년에 비해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이때 수요의 특성이 단기간 변동 수요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면, 결국 실수요보다 투자에 목적을 둔 수요였을

것이란 분석이 가능하다. 그야말로 전국 기준 갭 투자 즉,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건수가 2019년 5만 건에서 2020년 11만 7,000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한국의 자가 점유비율은 2020년 기준 전국 57%의 비율을 보이고, 서울은 43.5%에 불과하다. 그런데 자가 보유비율은 전국 61.3%로 자가 점유율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며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수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래의 표가 말해주는 통계도 이상하다. 서울 가구수는 그대로인데 주택수가 증가한 상황에서 오히려 보급률은 줄었다. 아마도 주택을 가지고 있는 가구가 주택을 더 사들인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 있다.

구분	2017년			2021년		
	가구수	주택수	보급률(%)	가구수	주택수	보급률(%)
전국	19,673.9	20,313.4	103.3	21,448.5	21,917.2	102.2
수도권	9,496.5	9,335.5	98.3	10,521.1	10,183.9	96.8
지방	10,117.4	10,978.0	107.9	10,927.4	11,733.2	107.4
서울	3,813.3	3,671.5	96.3	3,813.3	3,811.9	94.2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환란 이후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때 강남에 미분양 사태가 일어난 바 있었는데, 이때 회사에서는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해 분양했고, 이때 누군가는 아파트를 샀다. 기회를 찾아 적절한 투자를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2021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때 최고점에 전세를 끼고 매입한 사람들이 있다. 이는 분명한 투기이다. 아파트 가격 상승기류에 맞춰 더 오를 것을 기대한 전형적인 투기인 것이다. 그리고 이는 주택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이러한 분위기는 영혼이라도 팔아 지금이라도 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리를 부추긴다. 생산활동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여 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투자라고 할 때, 거래 대상의 가치변화에 주목하여 그 성격과 위험을 잘 알고 일정부분의 손실까지 고려하며 투자를 진행한다. 얼마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개발예정지역의 토지를 사들여 크게 사회의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개발 예정지는 농지였는데 공사 직원들이 농사를 지을 것이라는 예측도 어렵지만, 신도시 개발 예정지라는 점을 보면 아마도 수용보상금이나 다른 토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수익을 기대하여 내부의 미공개 정보를 불법 활용한 행위라 짐작할 수 있다. 결국 이들 직원들은 직위 해제되었다. 합리적 분석과 판단 없이 시세 차액에만 목적을 두고 수익을 노리는 행위는 투기이다. 투기 행위는 주택뿐 아니라 다른 상품이나 유가 증권 등에서도 이뤄지지만, 주택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는 본인의 자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주변까지 연쇄적 현상을 일으키는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부동산 투기가 사회에 악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수요자가 많다는 것, 이에 따라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이 집 마련의 기회를 뺏긴다는 것이다. 또한 투기는 토지의 가격과 평가가 낮은 미성숙지 등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당장 필요하지 않으면서 과도하게

구입하고 방치함에 따라 자기나 타인 누구에게도 당장 기여하지 못한다. 한국의 주택 문제는 사람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지리적 가치가 주택과 토지의 가격을 형성하기 때문에 집에 대한 투자도 서울 등 대도시에 집중한다. 이는 시장 가격의 변동에 따른 매매 차익이 다른 어떤 상품보다도, 그리고 어떤 지역보다도 크기 때문에 거의 도박에 가까운 비정상적 규모의 이익을 취득할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공급이 부족하여 서울과 특정 대도시들에 주택 부족 문제가 지속되거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다. 주택 시장에서는 수요가 중요하고, 특히 물건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을 지닌 유효수요가 중요하다. 누군가가 당장 집이 필요하지 않아도 집값을 올리기 위해 높은 가격의 집을 여러 채 사는 동안, 실제 집이 필요한 수요자는 점점 멀어져가는 집값에 구매력이 위축된다. 다주택자들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재편되어야만 한다.

<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 논할 때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사례로는 일본의 이코노믹 버블(economic bubble)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subprime mortgage crisis)를 들 수 있다.

1987년 일본 정부는 플라자합의 채택 이후 엔화 강세로 인한 일본 기업들이 입을 무역수지에의 타격을 고려하여 대폭적인 금융완화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경기 침체를 대비하기 위해 내수 확대를 위한 금리 자유화 등 금리 인하를 추진하였으며, 1989년 초까지 초저금리 시대를 맞게 된다. 이 시기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서 부동산에 대한 가격 상승을 기대하게 했고, 토지 가격이 급상승하며 자산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기존 주택정책 틀에 맞춘 공급량을 유지하는 주택공급 정책 기조를 견지했으며, 주택 가격 등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조치로 조세(토지세)와 '부동산 관련 융자의 총량규제'와 같은 금융 규제 강화를 선택하여 버블을 안정화시키려 노력했다. 하지만 이코노믹 버블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자산 디플레이션이 발생한 이후 오히려 10년 장기불황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2000년대 초반 미국에서도 얼어붙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저금리와 주택소유장려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저금리로 인해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는 곧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자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subprime mortgage)이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란 주택담보대출상품의 일종으로 저신용-저소득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을 의미한다. 신용도가 낮은 고객을 대상으로 하기에 높은 위험도로 인해 금리가 2~3% 정도 높으며 초기 2년 정도는 미끼 금리 형식으로 낮은 고정금리를 적용하다 나머지 기간에는 높은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형태를 취한다. 서브프라임 신용고객들은 자산이 부족해도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사는 것이 오히려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생각하였을 때 이득이었던 것이다. 이는 곧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자 미

국 정부는 무섭게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고정금리를 0.02%에서 5.25%까지 올리게 되었고, 서브프라임 등급의 대출자들은 높은 금리로 인해 대출금 상환을 하지 못하고 주택을 압류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게 되었다. 아래의 표는 미국 주택담보대출시장의 대출종류별 잔액 추이의 비율(%) 분포이다. 차압된 집의 매물이 쏟아지자 부동산의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연쇄적인 작용으로 관련 기업, 은행 및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부실자산의 증가는 경제 대공황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연도	프라임모기지대출	서브프라임모기지대출	기타
2002년	75.4	3.4	21.2
2003년	78.7	5.3	17
2004년	74.5	11.5	14
2005년	74.2	13.4	11.4
2006년	76.6	13.7	9.7

문제 1 <가>의 지문이 말하는 주택의 특성을 열거하고, <나> 지문이 설명하는 한국 주택 시장에 적용하여 한국 부동산이 지향해야 할 건전한 전략 방안을 제시하시오.

(800~1,000자)

문제 2 <다>의 금융 위기를 몰고 온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일본 버블경제가 <나>가 설명하고 있는 한국의 주택문제에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지 논술하시오. (900±1,000자)

제 4 강 2025학년도 모의논술 대학발표 해설

1. 출제 의도

① 이번 인문계열 논술고사는 지난 5년간의 문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번 시험에서는 고등학교 <세계지리>, <한국지리>,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경제> 등의 다양한 교과에서 배운 지식들을 실제 삶에서 직면하는 구체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응용하게끔 함으로써, 논리적 분석, 비판적 평가, 창의적 응용 능력을 포괄하는 종합적 고차 사고 역량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특히 하나의 문제 사례를 두 가지 다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사례와 제시문을 배치하고 문항을 제시함으로써 논의의 폭과 깊이를 갖춘 종합적 문제 해결 역량을 점검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② 고등학생 수준의 인문적 소양과 사회현상에 관심을 두고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학생이라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사례와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내용 및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자료들로 제시문을 구성하였다.

③ 이번 논술고사는 '주택문제'라는 사회현상에 초점을 두고 한국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부동산 투기와 불균형 등의 사회 문제에 접근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응시자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서술하도록 구성하였다. 첫 번째 문제는 한국의 주택문제를 이해하는 것이다. 주택이라는 상품이 지닌 일반 상품과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시장경제 하의 경제적 가치보다 인권과 관련된 복지 개념이 강조되어야 함을 제시문에서 파악하여 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도록 함으로써 논리적 분석력과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문제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태를 미국과 일본 등의 금융 위기 사례를 근거로 어떻게 미래 예측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보도록 하였다. 미국, 일본이 사례에서 얻은 교훈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투기가 투자와는 다른 개념임을 이해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투기를 통한 거래량의 상승은 실제 집이 없는 무주택자의 주택 소유 기회를 박탈하는 사회의 악한 현상임을 비판적 사고에 기반하여 판단하는 역량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문제 1]과 [문제 2]가 서로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동일한 사례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 만큼 각 문제가 요구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맞게 각각의 논지를 전개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2. 제시문 해설

- 제시문 <가>는 주택이 시장경제 하의 상품이기는 하지만, 일반 수요재와는 차이가 있는 특성을 설명한다. 집은 일반 상품이기 이전에 사람들의 거주가 우선이 된 사는 곳이 되어야 한다. 산업화와 도시화에 의해 주택이기 이전에 사람들의 거주가 우선이 된 사는 곳이 되어야 한다. 산업화와 도시화에 의해 주택이 부족한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지리적 효과에 의해 집이 부족함은 물론, 수요의 증대로 주택 가격이 폭등하였다. 저소득층과 무주택자들은 집을 구입하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고소득층이나 일부 중산층까지도 집을 수익의 수단으로 여러 채 소유하며 경제적 불균형을 낳고 있다. 집이 권리재로 인식이 되어, 경제적 경쟁 원리를 추구하기보다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사회환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 제시문 <나>는 투자와 투기의 차이를 설명하며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는 투기 행태를 비판한다. 이미 제시문 <가>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주택을 부동산으로만 취급하여 소득 창출의 기회를 찾으려는 사회환경은 저소득층과 무주택자들의 인간의 기본권마저 박탈하는 행태이다. 부동산은 움직이기 어려운 부동 자산이고, 바로 현금으로 환원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음으로 해서, 경제 환경이 저조해지거나 어려워지면 주택이 경제 환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도박을 하듯이 대출 등으로 자금을 끌어보아 집을 여러 채 구입한 사람들과 이에 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들은 연쇄 도산이 되고 거시적 국가 경제가 심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다주택자들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 시장은 국가의 책임하에 관리가 되어야 한다.

• 제시문 <다>는 일본과 미국 사례를 통해 주택 시장의 수요와 공급 변화로 인한 부동산 투기 현상이 어떻게 금융 위기로 이어지게 되는지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특히 경제성장을 위해 초저금리 시대를 맞게 된 이후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자산 가격의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무리한 부동산 투기는 결국 이후 디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면 개인의 파산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 및 금융기관의 부실화로도 연결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사례를 통해 국내 부동산 시장 투기 현상의 해결점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문항 해설

❶ [문제 1]

본 문제는 제시문 <가>와 <나>로부터 주택이 지닌 특성과 주택문제를 이해하고, 부동산에 의해 변동하는 경제 상황을 수험생 자신의 관점에서 비판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에 대한 사회적 환경은 어떤 처방이 적절한지 자신의 견해를 설득력 있게 이끌어낼 것을 요구한다. 수험생이 작성한 답안 구성의 체계성과 내용의 완결성 및 문장 표현력을 통해서 응시자의 이해력, 논리적·비판적・창의적 사고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본 문제의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제시문 <가>와 <나>에서 소개한 주택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제시문 <나>가 설명하고 있는 투자와 투기를 분명히 판단하여 사회적 분위기와 국가의 책임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제시를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가>와 <나>의 주택으로 인해 저소득층이나 무주택자들이 다주택자들과 경제적 상황에서 양극화를 이루게 되는 사회현상을 볼 때, <가>의 지문이 설명하는 인권에 기반하여 무주택자들에게도 균등한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이 바로 서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는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❷ [문제 2]

<나>의 내용의 사례인 <다>의 경험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일본과 미국의 부동산 투기로 인한 결과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문제에 대해 수험생은 <나>의 지문이 설명하는 주택 투기의 행태에서 주택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려는 생각이 사회적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 <다> 지문을 통해 경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다> 사례가 보여준 경제 환란의 경험이,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지를 지적하고, <나>의 지문이 설명하고 있는 상황을 설득력 있게 비판해야 한다.

4. 채점 기준

문항	배점	세부 내용
문제 1	15	· 제시문 <가>가 제시하는 주택의 특성을 적절히 파악해 기술하였는가?
	15	· 제시문 <나> 설명하는 주택이라는 상품에 대한 투자와 투기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하였는가? 주택이라는 상품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로 인한 사적 문제 상황에 대한 평가를 비판적으로 적절히 검토하였는가?
	15	· 제시문 <가>에서 설명한 주택문제를 <나>의 사회 상황의 관점에서 볼 때, 주택의 시장에서의 기능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떠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어야 하는지 이해하였는가?
	5	· 정확한 어법과 표현을 사용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분량을 지켜서 논술하였는가?

문제 2	15	· 제시문 <다>의 해외사례에서 부동산 투자는 경제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리하고 기술하였는가?
	20	· 제시문 <다>의 경험을 한국 주택 시장과 사회적 환경에 적응할 때 어떠한 우려를 예측할 수 있는지 <가>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주택의 특성과 <나> 지문의 상황을 토대로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서술하였는가?
	10	· 미국과 일본의 부동산 문제가 경제적 환란으로 이어진 상황을 이해하고 이러한 경험이 한국 사회에 주는 경고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기술하였는가? 또한 미국과 일본 등의 경험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논리적으로 서술하였는가?
	5	· 정확한 어법과 표현을 사용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분량을 지켜서 논술하였는가?

[문제 1]의 답안은 다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제시문 <가> 주택의 특성과 문제를 적절히 파악해 기술하기

둘째, <나>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명확히 이해하고 기술하기

셋째, <나>의 상황에 의해 이루어질 경제적 파장과 사회 문제를 비판하고 <가>가 제시하고 있는 주택문제에 적용하여 논리적으로 기술하기

첫째 부분(15점, 답안 수준별 점수차 3점)

- 제시문 <가>에서 주택이 지닌 특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시장경제하의 상품이지만 다르게 다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기술한다.
- 제시문이 설명하는 주택문제는 무엇인지 파악하기
- 주택이 지닌 권리재로서의 성격을 논리적으로 기술한다.

둘째 부분(15점, 답안 수준별 점수차 3점)

- <나>에서 설명된 투기와 투자의 차이를 명확히 검토한다.
- 주택에 대한 투기가 어떠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파악한다.
- 한국의 주택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검토한다.

셋째 부분(15점, 답안 수준별 점수차 3점)

- <나>에서 제시된 주택문제가 부동산과 동일어로 다루어지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기술한다.
- <나>의 주택 투기 상황을 제시문을 근거로 자신의 논리적 판단을 명확히 제시한다.
- <나>의 투기 상황은 사회 경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명히 검토하고 <가>에서 말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문제 2]의 답안은 다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제시문 <다>의 사례에서의 문제를 파악하고 잘 요약한다.

둘째, <다>의 사례는 <나>의 한국 상황에 대해 어떠한 경고가 되는지는 주택 투기 상황을 비판한다.

셋째, 비판에 근거해 이미 일본과 미국의 경험은 어떠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는지 자신의 견해를 논술한다.

첫째 부분(15점, 세 근거 요약 답안 각각의 수준별 점수차 3점)

- <다> 미국 사례를 검토하고 그 배경이 무엇인지 요약한다.

- 일본의 이코노믹 버블의 배경을 검토하고 미국과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지 논리적으로 서술한다.
- 부동산 관련 문제가 경제적 환란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분명히 인식하고 이에 대해 논의한다.

둘째 부분(20점, 근거 비판 답안 각각의 수준별 점수차 4점)

- <나>에서 투기와 투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명확히 이해한다.
- 한국 상황의 문제점을 미국과 일본의 사례에 적용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 부동산 투기의 결과가 경제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바에 대해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제시한다.
- 미국과 일본 사례를 적용하여 현재 한국 부동산 투기에 대해 어떠한 경고를 하고 있는지 비판적 사고로 검토한다.

셋째 부분(10점, 답안 수준별 점수차 2점)

- <다>의 사례가 보여준 경제적 상황의 폐해는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이며,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에 주는 경고가 무엇인지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피력

▶ 앞에서 제시한 내용과 조건에 의거하여, 답안은 다음과 같이 6등급으로 평가한다.

[문제 1]의 네 부분 각각의 점수와 정확한 어법과 표현 점수(5점, 답안 수준별 점수차 1점) 및 [문제 2]의 세 부분 각각의 점수와 정확한 어법과 표현 점수(5점, 답안 수준별 점수차 1점)를 모두 합산하여 답안은 다음과 같이 6등급으로 평가한다.

1등급:	95점 이상	2등급:	90점 이상	3등급:	85점 이상
4등급:	75점 이상	5등급:	60점 이상	6등급:	60점 미만

※ 각 문제별로 글자 수에 제한(900자±100자)이 있으므로, 800자 미만의 경우 각 문제별로 아래와 같이 감점한다.

700자~799자:	5점 감점	600자~699자:	10점 감점
600자 미만:	6등급	백지 답안:	7등급

○ 대학발표 예시답안

[문제 1]

주택은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피신처가 되고, 쉬며 재생산을 하는 삶의 장소이다. 현대 사회에서 주택은 대부분 가구의 가장 큰 단일 지출 품목이고, 중요한 투자의 가능성을 지닌다. 주택은 사적으로 소유되고 시장을 통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하나의 경제 상품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나, 주택이 지니고 있는 속성으로 인해 사회 복지적 개념에서 주택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공공 영역에서의 주택은 사회주택, 비영리 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 주택 등이 포함되는데, 주택의 사회재, 집합재적 성격을 고려하여 사회 민주적 체제하에서 시민의 권리가 우선 옹호되어야 한다. 주택은 단일 상품으로 그 가격이 매우 비싸고 심지어 중고 상품임에도 지역 효과에 영향을 받아 가격이 더욱 상승하여 주택을 팔았을 때 실현되는 경제학적 교환가치가 큰 특성이 있다. 특히 지리적 부동성과 내구성은 주택에 대한 이해를 복잡하게 하여, 유휴자금이 넉넉한 고소득층과 일부 중산층들까지 주택에 대한 투자를 부의 축적의 수단으로 삼는다. 생산활동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여 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투자라고 할 때, 합리적 분석과 판단 없이 시세 차액에만 목적을 두고 수익을 노리는 행위는 투기이다. 특정 지역의 주택을 여러 채 구입하면서 비정상적 이윤을 남기고, 실제 집이 필요한 사람의 구매력을 위축시키는 것은 사회민주주의 체제에서 악한 행위라 비판할 수 있다. 집은 권리재로써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한다. 집은 소요재이고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는 인식에서 저소득층과 무주택자들이 우선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을 기대하여 여러 채 집을 소유하고 이를 통해 재산을 증식하는 투기자들이 주택 시장을 교란시킬 수 없이 이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인간 보호의 근원적 속성을 지닌 만큼, 공중위생, 주택과밀문제, 높은 임대료, 주거환경 악화 등의 문제까지 폭넓게 다루어 주택 최저기준을 설정해야 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960자)

[문제 2]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금융기관들과 부자들의 구매 욕구가 본격화되면서, 부채담보부증권 시장이 확대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의 확대, 이후 잇따른 미국 부동산 버블로부터 시작된 최악의 금융 위기였다. 일본의 이코노믹 버블은 1986년부터 1991년 사이에 있었던 일본의 거품 경제 시기를 뜻한다. 일본의 자산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서,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투자 과잉, 무분별한 통화 공급, 신용 팽창 등의 상황이 이어졌다. 저금리와 대규모 경제 대책으로 인해 한창 경상 흑자가 이루어지면서, 집을 구매했다가 몇 년 뒤에 판매하면 그 차액만큼을 얻을 수 있고, 대출이자를 한참 상회하기 때문에 시중에 풀린 돈이 주택 투기에 몰려들었다. 은행들은 마구잡이로 주택 담보 대출을 내줘서 이 현상을 부채질했다. 더 나아가서 대출 채권을 증권 형태로 다른 금융기관이나 투자자에게 판매했다. 결과적으로 버블이 붕괴됐을 때 대출자와 대출업체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기업, 투자은행, 금융기관에 이르기까지 연쇄적인 위기로 확산되었다. 경기가 활성화되어 금융기관과 부자들의 부동산 투기가 주택 가격을 폭등하게 한 미국과 일본의 사례와는 조금 차이가 있으나, 이들 사례가 주는 교훈은 실수요가 아닌 주택에 대한 투기는 이후 경기가 저조해졌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고,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주택문제는 무주택자가 집을 가질 기회가 축소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주택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주택자들의 투기에 의해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실제 주택 시장에서 구매력 있는 상품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특히 주택 가격이 단기에 크게 변동이 되는 것은 수요에 의한 것이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투자수요이다. 미국과 일본 등의 경제 위기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주택에 대한 투기는 자기나 타인 누구에게도 기여하는 바가 없다. 주택 등에 대한 부동산 투기는 경기 침체 시 금융과 건설, 시장 등 관련된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며 큰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다. (1,000자)

○ 선생님 예시답안

[문제 1]

주택의 특성은 근본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택은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피신처가 되고, 쉬며 재생산을 하는 삶의 장소이다. 주택은 안정감과 소속감을 제공하며, 공중위생과 주거 환경의 질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주택은 권리재, 사회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서비스의 대상이 된다. 한편, 주택은 대부분 가구의 가장 큰 지출 항목이자 중요한 투자 자산이며 시장을 통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경제상품이다. 이처럼 주택은 수요재의 성격이 강해 저소득층은 기본적인 주거의 안정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나)는 한국 주택 시장의 극심한 불균형 상황을 보여준다. 서울의 급격한 도시화와 강남 개발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 그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는 주택문제가 시장의 원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주택은 단일 상품으로 그 가격이 비싸고 경제학적 교환가치가 큰 특성이 있다. 그러다 보니 자금이 넉넉한 고소득층과 일부 중산층들까지 주택에 대한 투자를 부의 축적의 수단으로 삼는다. 문제는 특정 지역의 주택을 여러 채 구입하면서 비정상적 이윤을 남기는 다주택자들의 투기 수요가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고,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택을 단순한 경제 상품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인식하는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실수요 중심의 주택 시장을 재편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주택이 인간 보호의 근원적 속성을 지닌 만큼, 공중위생, 주택과밀문제, 높은 임대료, 주거환경 악화 등의 문제까지 폭넓게 다루어 주택 최저기준을 설정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을 기대하여 여러 채 집을 소유하고 이를 통해 재산을 증식하는 투기자들이 주택 시장을 교란시킬 수 없도록 이에 대한 적절한 개입 정책이 필요하다. (971자)

[문제 2]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일본의 경제 버블 사례는 과도한 투기 수요가 국가 전체에 심각한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1980년대 후반 일본은 엔화 강세로 인해 무역수지에 타격을 입자 이를 완화하기 위해 대폭적인 금융완화 정책을 펼쳤다. 금리를 인하하자 부동산 투기 수요가 증가하여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동시에 자산 가격이 폭등했다. 일본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조세와 금융 규제를 강화했지만, 결국 버블이 터지면서 장기적인 경제 불황을 겪게 되었다. 2000년대 초반 미국은 저금리와 주택 소유 장려 정책을 통해 부동산 수요를 증가시켰다. 특히 저신용-저소득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이 급증하며, 저금리를 바탕으로 투기 수요가 몰리게 되자 부동산 가격이 더욱 상승했다. 많은 사람들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했지만, 금리가 상승하면서 대출금 상환을 하지 못하고 결국 많은 주택이 압류되었다.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초래되었으며, 이는 경제 대공황으로 이어졌다.

이들 사례가 주는 교훈은 실수요가 아닌 주택에 대한 투기는 이후 경기가 저조해졌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고,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무주택자가 집을 가질 기회가 축소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이는 주택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주택자들의 투기에 의해 주택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실제 주택 시장에서 구매력 있는 상품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물론, 소유 자산으로써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은 개인 선택의 영역이자 자연스러운 시장의 원리에 따르는 일이다. 하지만, 정상적인 투자와 엄청난 시세 차액을 노리는 투기는 구분되어야 한다. 미국과 일본 등의 경제 위기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주택에 대한 투기는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큰 위기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적 권리 보호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 (998자)

2026 성신여대 파이널

제 5 강 2024학년도 기출문제 1

※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가> [그림 1]은 트롤리 딜레마와 육교 딜레마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트롤리 딜레마와 육교 딜레마 상황에 대해 아래와 같은 질문을 받았다.

[그림 1] 트롤리 딜레마와 육교 딜레마

트롤리 딜레마 실험 : 고장 난 트롤리가 선로 위를 달리고 있다. 이대로 계속 돌진하면 선로에서 피할 틈이 없는 다섯 명이 치여 죽게 된다. 이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로 변환기를 당겨서 선로를 바꾸는 것이다. 그런데 선로를 바꾸면 다섯 사람 대신 옆 선로에 있는 한 사람이 죽게 된다. 선로 변환기를 당겨야 할까?

육교 딜레마 실험 : 질주하는 트롤리가 선로에 있는 다섯 명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당신이 선로 위에 있는 육교에 서 있고 당신 옆에는 덩치가 큰 사람이 서 있다. 다섯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을 다리에서 밀어서 선로 위로 떨어뜨리는 것이다. 그 사람은 죽겠지만, 그의 몸이 트롤리를 지연시켜서 다섯 명의 목숨을 살리게 된다. 이 경우에 그 사람을 밀어서 떨어뜨려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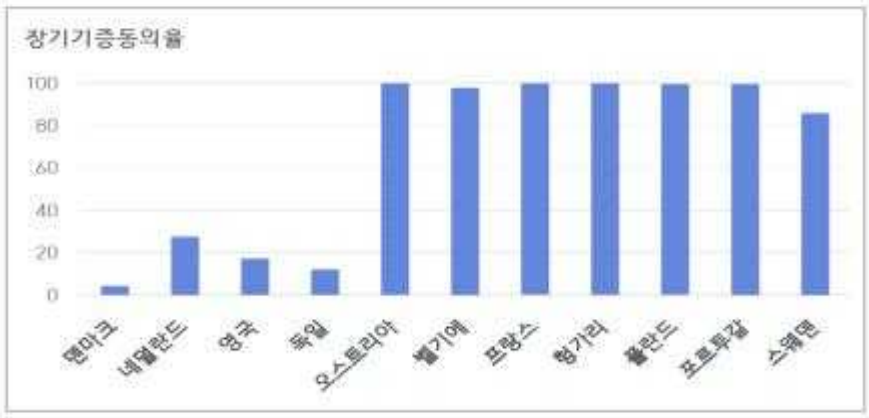
<나> 실험심리학자 그린(J. D. Greene)과 동료들은 트롤리 딜레마와 육교 딜레마에 대한 사람들의 도덕 판단 및 그와 관련한 뇌 반응을 fMRI(기능성 자기공명영상)를 활용하여 연구하였다. 트롤리 딜레마 실험에서는 전체 피험자의 85%가 선로를 바꾸는 것이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하다고 반응했으며, 다수가 판단의 근거로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라'는 원리를 들었다. 반면, 육교 딜레마 실험에서는 12%의 사람들만이 덩치 큰 사람을 아래로 미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하다고 반응했으며, 도덕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다

수는 판단의 근거로서 '인간을 단지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원리를 들었다. 트롤리 딜레마를 접한 피험자들의 뇌는 작업 기억과 같은 이성적 추론 기능과 관련된 뇌 영역이 활성화되었고, 정서를 담당하는 뇌 영역은 덜 활성화되었다. 반면, 육교 딜레마에서는 정서와 관련된 뇌 영역이 더욱 활성화되었고, 이성적 추론과 관련된 뇌 영역은 덜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의무론적 판단과 결과론적 판단이 각각 다른 사고 유형에서 연유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뇌 실험을 토대로 한 이러한 해석은 ㉠**의무론적 판단이 이성의 산물이라는 전통적인 관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 복잡한 뇌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심리학자들과 신경과학자들은 두 가지 유형의 사고방식, 즉 직관적인 사고방식과 추론적인 사고방식으로 구분한다. 전자를 '자동 시스템', 후자를 '숙고 시스템'이라 명할 수 있는데, 자동 시스템은 주로 감정에서 연유한 반응, 숙고 시스템은 주로 이성에서 연유한 반응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종종 '너무 많은 생각이나 심사숙고가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은 '직관적 판단을 믿고 그대로 밀고 나가는 편이 더 낫다'는 생각으로 자동 시스템에 과도하게 의존해서 실수나 오류를 저지르기도 한다. 다시 말해, 성가신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빠르게 선택하고 판단을 내리는데, 강한 직관으로 도출된 결과는 과신을 부추기기도 한다. 반면, 숙고 시스템은 신중하며 추론적이다. 상황이 복잡하고 여러 이해 당사자가 얽혀있어 공리주의적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숙고적이고 추론적인 사고가 이루어진다. 숙고 시스템은 직관적 판단에 의해 발생한 실수나 오류를 교정해 주거나 속도를 늦추고 대안을 생각하게끔 하기 때문에 자동 시스템보다 현명하거나 선할 수도 있다. 또한 숙고 시스템은 자동 시스템이 판단을 내리면 그러한 판단을 이성적으로 사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다.

<라> 넛지는 '팔꿈치로 옆구리를 슬쩍 찌르다', '넌지시 암시하다' 등의 의미로서, 강제나 지시에 의한 억압보다는 자연스러운 상황을 만들어 사람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을 말한다. 최근 공공정책 분야에서 사람들의 올바른 선택과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넛지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제한적 합리성을 지닌 개인이 공공선(common good)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선택과 행동을 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넛지는 개인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개입(유도 또는 간섭)한다는 측면에서 개입주의(paternalism)적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개인에게 선택의 옵션을 제공하고 특정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자유주의적 속성도 지니고 있다.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를 표방하는 이러한 넛지는 분명 공공선 획득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 수단이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옵트-인(opt-in)과 옵트-아웃(opt-out) 방식으로 구성되는 디폴트 규칙**은 규칙 설계자가 원하는 옵션을 자동적으로 채택되게끔 하는 메커니즘이다. 특정 옵션을 선택하면, 개

인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이상 지속해서 그 옵션에 대한 선택이 유지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디폴트 넛지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해 활용되기도 한다. 장기기증 프로그램이나 노후 보장 연금 프로그램에 디폴트 규칙을 활용한다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림 2]는 디폴트 방식에 따른 유럽의 국가별 장기기증 동의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처럼 넛지를 옹호하는 이들은 온건한 개입을 통해 사람들의 바람직한 선택을 유도하면 개인의 후생이나 공공의 이익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림 2] 디폴트 방식 차이에 따른 국가별 장기기증 동의율

그러나 온건한 개입주의를 받아들일 경우, 그것이 점차 강경한 개입주의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온건한 개입이 점차 노골적인 조작이나 개입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넛지의 도입은 국가가 개인의 삶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빅 브라더'로 나아가는 미끄러운 비탈길(slippery slope)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온건한 경고 문구로부터 시작된 계도적인 담배 디자인이 점차 혐오스러운 디자인으로 바뀌고, 뒤이어 담배에 대한 높은 세금 부과와 공공장소에서의 금연 조치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 단적인 예이다. 권력을 지닌 사람들은 대중의 선택을 프레이밍하고 대중의 결정을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조작하는 기술에 매우 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설계자 자신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넛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선택 설계자들은 나름의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특정한 의도를 가진 넛지는 결국 사람들을 특정한 방향으로 조종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 옵트 인(opt-in) : 특정 사안에 대해 모두가 자동으로 부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하는 사람에 한하여 동의 처리하는 방식.
* 옵트 아웃(opt-out) : 특정 사안에 대해 모두가 자동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에 한하여 부동의 처리하는 방식.

<마> "오늘 오후에는 무엇을 공부하지?" 국장이 물었다. "지금은 기초 계급의식 학습시간입니다." 보모가 답했다. 길게 줄지어 선 간이침대에는 80명의 아이들이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다. 모든 베개 밑에서 작은 웅얼거림이 들려왔다. "알파 아이들은 회색 옷을 입어요. 그들은 너무나 무서울 정도로 총명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열심히 일합니다. 나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베타라는 것이 굉장히 기쁩니다. 대신 우리는 감마나 델타보다 훨씬 나아요. 감마들은 어리석어요. 그들은 모두 초록색 옷을 입어요. 델타 아이들은 황갈색 옷을 입습니다. 난 델타 아이들하고는 놀고 싶지 않아요. 앱실론은 더 형편없죠. 그들은 너무 우매해서..." 국장이 견습생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이 아이들은 잠이 깨기 전에 저 말을 4~50번 거듭해서 듣고 목요일, 토요일에도 또 듣는다. 일주일에 세 번 120번씩 30개월 동안 듣게 된다. 최면 학습은 도덕화, 사회화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 마침내 아이의 마음은 이러한 암시와 하나가 되고, 암시의 총체는 아이의 이성이 된다. 뿐만 아니라, 어른의 이성도 역시 평생 동안 줄곧 이러한 암시들의 지배를 받는다. 판단하고 갈망하고 결정하는 이성은 바로 이런 암시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암시들은 우리들이 제시하는 암시다!" 국장은 의기양양해서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다. "국가에서 마련한 암시들이라는 뜻이다!"

- 올더스 헉슬리, 『멋진 신세계』 中

문제 1 제시문 <가>의 두 가지 딜레마 상황에 대한 인간의 도덕 판단을 제시문 <나>, <다>를 토대로 분석하고, ㉠의 내용을 제시문 <다>를 활용하여 서술하시오. (900±100자)

문제 2 [그림 2]의 결과를 ㉡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제시문 <라>를 토대로 제시문 <마>의 제목 『멋진 신세계』의 역설적 의미를 논하시오. (900±100자)

제 5 강 2024학년도 기출문제 -오전 대학발표 해설

1. 출제 의도

① 2024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계열 논술고사는 수험생들의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글쓰기 역량을 측정하고자 했다. 문제 구성은 고등학교 도덕과, 사회과, 국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개념과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한 주제와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한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답할 수 있도록 했다.

②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최대한 반영하여『국어』,『문학』,『화법과 작문』,『생활과 윤리』,『윤리와 사상』,『통합사회』,『경제』등에서 다루는 주제인 트롤리 딜레마, 의무론, 결과론, 이성과 감정, 넛지, 자유주의, 개입주의,『멋진 신세계』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문제로 구성했다.

③ 다양한 종류의 글에서 발췌한 제시문을 읽고, 이를 주어진 시간 내에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 개념을 구체적인 사례에 합당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여 수험생의 독해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논리적 표현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시문 내용을 비교, 분석, 적용, 평가함을 넘어 종합적인 사고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여 완결된 답안을 작성하도록 문제를 출제했다.

2. 문항 해설

<제시문 요약>

제시문 <가>는 도덕적 추론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아보기 위한 두 가지 가설적 상황(트롤리 딜레마와 육교 딜레마)을 보여주는 지문이다. 트롤리 딜레마 상황에서 선로 변환기를 당기는 선택과 육교 딜레마 상황에서 덩치 큰 사람을 밀쳐 떨어뜨리는 선택은 둘 다 한 사람을 희생해 더 큰 인명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선택이지만, 누군가를 밀어뜨리는 것은 전차의 방향을 바꾸어 누군가를 죽게 하는 것보다 덜 정당해 보인다. 즉, 트롤리 딜레마 상황의 경우 가능하면 많은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공리주의적 원칙이, 육교 딜레마 상황의 경우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의무론적 원칙이 각각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시문 <나>는 제시문 <가>에서 소개된 두 딜레마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도덕 판단 및 관련된 뇌 반응을 fMRI(자기공명영상장치)를 활용한 연구 결과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지문이다. 트롤리 딜레마 실험에서는 85% 피험자가 선로를 바꾸는 것이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하다고 반응했으며, 그 판단의 근거로서 공리주의 원리를 들고 있음을 설명한다. 또한, 피험자들의 뇌는 이성적 추론 기능과 관련된 뇌 영역이 활성화되었음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육교 딜레마 실험에서는 88% 피험자가 덩치 큰 사람을 밀어 떨어뜨리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허용 불가능하다고 반응했고, 그 판단의 근거로서 의무론적 원리를 들고 있음을 설명한다. 이 경우, 피험자들의 뇌는 정서와 관련된 뇌 영역이 더욱 활성화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결과론적 판단과 의무론적 판단이 각각 다른 사고 유형에서 연유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것은 실천 이성을 기본으로 한 의무론적 판단이라는 전통적 관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제시문 <다>는 심리학자들과 신경과학자들이 뇌 기능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두 가지 유형의 사고방식(자동 시스템과 숙고 시스템)에 관한 지문이다. 자동 시스템은 주로 감정에서 연유하는 반응(직관적인 사고방식)을, 숙고 시스템은 이성에서 연유하는 반응(추론적인 사고방식)임을 설명하고 있다. 자동 시스템은 빠르게 선택하고 판단을 내리지만 숙고 시스템은 신중하며 추론적이기 때문에, 직관적 판단으로 인해 발생한 실수나 오류를 교정해 주거나 직관적 판단 속도를 늦추어 대안을 생각하게끔 하는 등의 역할을 숙고 시스템이 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또한, 자동 시스템의 판단을 이성적으로 사후 정당화하는 역할도 감당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제시문 <라>는 리처드 탈러와 캐스 선스타인(Richard H. Thaler, Cass R. Sunstein)의『넛지: 똑똑한 선택을 이끄는 힘 (Nudge: Improving Decisions about Health, Wealth, and Happiness)』(2008)의 발췌문을 재구성한 것이다. 이 책은 "선택 설계학"이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사람들이 보다 건강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넛지를 가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다. 본 제시문에서는 넛지의 사전적 의미를 소개하며 최근 공공정책 분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넛지"가 사용되는지 설명한다. 즉, 넛지는 주로 한 개인이 공공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율적 수단으로 사용되는데, 선택 (비록 그것이 올바른 선택일지언정)을 하도록 개입한다는 측면에서 개입주의적 속성을 갖고 있지만, 특정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자유주의적 속성 또한 지니고 있다. [그림 2]는 유럽의 국가별 장기기증 동의율을 나타낸 것으로, "옵트-인" 혹은 "옵트-아웃" 중 어떤 방식을 선택했는가에 따라 국가별 장기기증 동의율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보여준 그림이다. 마지막으로, 넛지의 효용가치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론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는 극도의 개입주의적 간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근거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제시문 <마>는 올더스 헉슬리의『멋진 신세계(Brave New World)』(1932)의 발췌문을 재구성한 것이다. 26세기 런던을 배경으로 하는 이 책은 미래를 모든 구성원들이 행복과 만족을 만끽하는 질서정연하고 조화로운 유토피아로 묘사한다. 어머니의 이야기 속 "멋진 신세계"를 선망하며 성장한 외부인 존으로 인해 이곳의 행복은 결국 개인의 자유의지(free will)를 철저하게 박탈하여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임이 밝혀진다. 헉슬리의 작품은 근대에서 현대로 진입하며 과학, 기술의 영역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 20세기 초 서구사회에서 과연 진보의 의미는 무엇인지 되짚어보고, 무차별적인 과학 숭배가 인간을 기술의 노예로 전락시키지는 않을지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파시즘, 나치즘 등 전체주의적 세력을 확장해나가던 1930년대 유럽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표하기도 한다. 본 제시문은 "부화-습성 훈련국(Central London Hatchery and Conditioning Centre)"에서 수면교육을 통해 어린아이들에게 계급의식을 주입하는 현장을 견학하는 학생 수련생들의 모습과 수면교육의 목적과 효과에 대해 이들에게 설명하는 훈련국장의 연설을 제시해준다.

<문항 해설>

❶ [문제 1]의 논제는 도덕적 판단이 내려져야 하는 두 가지 딜레마 상황에서 각각 어떤 도덕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을지 그리고 적용될 수 있는 원칙들이 서로 충돌할 경우 어떤 선택이 내려질 수 있을지를 도덕 과학적 접근에 관한 제시문 <나>와 <다>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제시문 <나>와 <다>의 과학적 접근 방식에 따라 인간의 도덕 판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트롤리 딜레마 상황 : 피험자들의 이성적 추론 기능과 관련된 뇌 영역 활성화, 숙고 시스템 사고방식 작동,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라'는 공리주의적 원리 적용, 선로를 바꾸는 것이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하다고 반응
- 육교 딜레마 상황 : 피험자들의 정서와 관련된 뇌 영역 활성화, 자동 시스템 사고방식 작동, '인간을 단지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의무론적 원리 적용, 덩치 큰 사람을 아래로 미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하지 않다고 반응
- 상기와 같은 도덕 과학적 접근에 따른 실험과 심리학, 신경과학자들의 연구는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이성과 감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것은 의무론적 판단의 근거를 실천 이성을 토대로 설명하고 있는 전통적인 관점에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답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요구된다. 제시문 <가>에서 소개된 두 도덕적 딜레마 상황들이 지닌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둘 다 한 사람을 희생해 더 큰 인명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전차의 방향을 바꾸는 것과 누군가를 밀어뜨리는 것은

도덕적 정당성의 측면에서 같지 않다. 그렇다면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서 실제로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제시문 <나>의 실험 결과를 통해 확인하고, 선택의 근거로 사용된 원리와 해당 실험 피험자들의 활성화된 뇌 영역을 실수 없이 연관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을 제시문 <다>의 '자동 시스템', '숙고 시스템'과 연관하여 논리적 오류 없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후자가 전자에 의해 발생한 실수나 오류를 교정해 주고 전자에 의한 판단을 이성적으로 사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사용하여, 제시문 <나>의 뇌 실험 결과는 의무론적 판단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에 이의를 제기함을 명시할 수 있어야 한다.

❷ [문제 2]는 제시문 <라>에서 설명하는 디폴트 넛지의 의미와 대표적 디폴트 규칙인 옵트-인(opt-in)과 옵트-아웃(opt-out) 방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요구한다. 디폴트 넛지는 대개 공공선 획득을 위해 규칙 설계자가 원하는 옵션이 자동적으로 채택되게끔 하는 메커니즘으로, 개인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이상 그 옵션에 대한 선택이 유지되는 방식으로 공공정책에서 활용될 수 있다. [그림 2]는 디폴트 방식 차이에 따른 유럽의 국가별 장기기증 동의율을 나타내는 그림으로, 덴마크를 포함한 4개국과 스웨덴 외 6개 국가의 동의율 간 큰 격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시문의 내용을 토대로 이러한 격차는 각각 옵트-인 방식을 채택했는가 아니면 옵트-아웃 방식을 채택했는가에 의해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제시문에 포함된 각 방식에 대한 정의에 의하면, 옵트-인은 '특정 사안에 대해 모두가 자동으로 부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하는 사람에 한하여 동의 처리하는 방식'이고, 옵트-아웃은 '특정 사안에 대해 모두가 자동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에 한하여 부동의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를 [그림 2]에 적용하면, 동의율이 낮은 덴마크를 포함한 4개국의 경우, 옵트-인 방식을 채택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즉, 장기기증 부동의가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고, 장기기증을 희망하면 동의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동의율이 낮은 것임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반면, 스웨덴 외 6개 국가의 경우, 장기기증에 대한 동의가 디폴트 세팅이 된 옵트-아웃 방식을 선택하여 동의율이 높은 것임을 유추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제시문 <라>는 넛지의 개념, 공공정책 분야에서 넛지의 활용도, 그리고 넛지에 대한 우려의 이유 등이 다뤄지는데, 제시문 <라>의 마지막 문단에서 설명하는 넛지의 악용 가능성과 제시문 <마>의 연결성을 파악해야 한다. 제시문 <마>는 "부화-습성 훈련국(Central London Hatchery and Conditioning Centre)"에서 수면교육을 통해 어린아이들에게 계급의식을 주입하는 현장을 견학하는 학생 수련생들의 모습과 수면교육의 목적과 효과에 대해 이들에게 설명하는 훈련국장의 연설을 보여준다. 국장은 수면교육을 통해 기초 계급의식을 주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모든 구성원이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고 부정적인 감정을 전혀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26세기의 런던을 유토피아, 즉 "멋진 신세계"라고 단언한다. 그러나 개인의 의식 형성과정에 긴밀하게 개입하여 국가의 지배계급이 "마련한 암시"가 개인이 "판단하고 갈망하고 결정하는 이성"을 구성하는 유일한 제공원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제시문 <마>는 넛지가 단순한 암시가 아닌 "대중의 선택을 프레이밍하고 대중의 결정을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조작"하는 방향으로 악용되는 단적인 예가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 답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요구된다. 제시문 <라>를 통해, 디폴트 넛지의 두 가지 규칙 — 옵트-인과 옵트-아웃 —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통해 [그림 2]의 국가별 장기기증 동의율의 차이를 분석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또한, 제시문 <라>에서 넛지에 대한 우려가 무엇이며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제시문 <마>와 연결시킬 수 있는 핵심적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개입', '간섭' 등의 키워드나 권력자가 "대중의 선택을 프레이밍하고 대중의 결정을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조작"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려낼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마>는 수면학습(혹은 최면학습)을 통해 기초 계급의식을 주입하는 장면임을 이해해야 하고, 제시문 <라>와 연결시킬 수 있는 핵심적 내용 — 즉, '암시' 등의 키워드나 "암시의 총체는 [개인]의 이성"을 구성하는데, 개인이 "판단

하고, 갈망하고 결정하는" 이성을 구성하는 암시가 "국가가 마련한 암시"라는 점을 파악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제시문에서 그리는 미래사회는 멋지지도 않고 이상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아닌 20세기 초 전체주의 국가의 모습을 재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목은 역설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3. 채점 기준

[문제 1] 배점 50점

영역	세부내용	배점
이해력과 분석력	- 트롤리 딜레마에 대한 결과론적 판단을 이성적 추론 중심 사고의 유형으로 분석하였는가? - 육교 딜레마에 대한 의무론적 판단을 정서적 직관 중심 사고의 유형으로 분석하였는가?	20
적용 및 종합력	- 의무론적 판단에 대한 전통적 규범윤리학의 관점을 정확하게 서술하였는가? - 제시문의 실험이 함의하는 의무론적 판단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서술하였는가?	20
논리적 표현력	- 논술 내용의 정합성, 정확한 단어 선택 및 문장 간 연결이 논리적인가?	10

[문제 1]의 답안은 다음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트롤리 딜레마, 육교 딜레마 상황에 대한 인간의 도덕 판단을 제시문 <나>, <다>를 토대로 분석하여 논술한다.

둘째, 제시문 <나>의 실험 결과가 의무론에 대한 전통적 관점과 배치되는 이유를 제시문 <다>를 활용하여 논술한다.

[문제 1]

1-① 트롤리 딜레마에 대한 결과론적 판단을 이성적 추론 중심 사고의 유형으로 분석한다.

1-② 육교 딜레마에 대한 의무론적 판단을 정서적 직관 중심 사고의 유형으로 분석한다.

2-① 의무론적 판단에 대한 전통적 규범윤리학의 관점을 정확하게 서술한다.

2-② 제시문의 실험이 함의하는 의무론적 판단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서술한다.

▶ 앞에서 제시한 내용과 조건에 의거하여, 답안은 다음과 같이 6등급으로 평가한다.

- 1등급: 위의 2가지 모두 정확히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2등급: 위의 2가지 모두 수행했으나,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3등급: 위의 2가지 중 1가지를 정확히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4등급: 위의 2가지 중 1가지를 수행했으나,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5등급: 위의 2가지 중 0가지를 수행하였으나 일부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6등급: 위의 2가지 중 0가지를 수행하고,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글자수에 제한(900자±100자)이 있으므로, 800자 미만의 경우 아래와 같이 하향 평가한다.

700자~799자 : 1등급 하향 600자~699자 : 2등급 하향

600자 미만 : 6등급 부여 백지답안 : 7등급 부여

[문제 2] 배점: 50점

영역	채점 기준	배점
이해력	- 제시문 <라>에 나타난 디폴트 넛지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였는가? - 옵트-인, 옵트-아웃 방식을 통해 [그림 2]를 정확히 분석하였는가?	20
비판적 사고력과 종합력	- 제시문 <라>에 나타난 넛지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제시문 <마>에 나타난 사회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는가? - 제시문 <마>에서 묘사하는 사회를 지칭하는 제목의 모순성을 정확히 분석하여 서술하였는가?	20
논리적 표현력	- 논술 내용의 정합성, 정확한 단어 선택 및 문장 간 연결이 논리적인가?	10

[문제 2]의 답안은 다음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제시문 <라>의 [그림 2]의 결과를 디폴트 규칙(옵트-인, 옵트-아웃)을 활용, 분석하여 논술한다.

둘째, 제시문 <라>를 토대로 제시문 <마>의 제목『멋진 신세계』의 역설적 의미를 논술한다.

[문제 2]

1-① 제시문 <라>에 나타난 디폴트 넛지 개념과 원리를 정확히 파악하여 요약한다.

1-② 디폴트 규칙(옵트-인, 옵트-아웃)을 통해 [그림 2]를 정확히 분석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2-① 넛지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제시문 <마>에 나타난 사회의 특성을 연결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한다. : 제시문 <라>에서 개입, 간섭, 권력자에 의한 대중의 선택 프레이밍, 대중의 결정을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조작, 제시문 <마>에서 암시, 암시의 총체는 개인의 이성을 구성한다는 내용, 개인의 이성은 국가가 마련한 암시라는 내용 등

2-② 제시문 <마>에서 묘사하는 사회를 지칭하는 제목의 모순성을 정확히 분석하여 서술한다. : 국가가 개인의 선택이나 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사회는 개인의 자유의지를 억압하는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사회이므로 이상적이거나 멋진 신세계가 될 수 없으며, 결국 제목은 디스토피아를 멋진 신세계로 표현하여 역설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을 논리적으로 서술한다.

▶ 앞에서 제시한 내용과 조건에 의거하여, 답안은 다음과 같이 6등급으로 평가한다.

- 1등급: 위의 2가지 모두 정확히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2등급: 위의 2가지 모두 수행했으나,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3등급: 위의 2가지 중 1가지를 정확히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4등급: 위의 2가지 중 1가지를 수행했으나,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5등급: 위의 2가지 중 0가지를 수행하였으나 일부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6등급: 위의 2가지 중 0가지를 수행하고,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글자수에 제한(900자±100자)이 있으므로, 800자 미만의 경우 아래와 같이 하향 평가한다.

700자~799자 : 1등급 하향 600자~699자 : 2등급 하향

600자 미만 : 6등급 부여 백지답안 : 7등급 부여

○ 대학발표 예시답안

[문제 1]

제시문 〈가〉에서는 트롤리 딜레마와 육교 딜레마가 제시되어 있다. 먼저, 트롤리 딜레마에 대해 85%의 사람들은 선로를 변경하여 5명을 구하고 1명을 희생시키는 판단을 내렸다. 이러한 판단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라는 유용성의 원리에 근거하였다는 점에서 결과론적 판단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론적 판단 과정에서는 이성적 추론 기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활성화되었는데, 이는 결과론적 판단이 인간의 두 가지 사고 유형 중 주로 숙고 시스템에 의해 도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결과론적 판단은 감정보다는 이성에 기반하며 복잡한 상황에서 신중한 추론을 통해 산출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육교 딜레마에 대해서는 12%의 사람들만이 덩치가 큰 한 사람을 희생하여 5명을 구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즉, 대다수는 그러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인간을 단지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정언명령에 근거하였다는 점에서 의무론적 판단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무론적 판단 과정에서는 정서와 관련된 뇌 영역이 활성화되었는데, 이는 의무론적 판단이 인간의 두 가지 사고 유형 중 주로 자동 시스템에 의해 도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무론적 판단은 이성보다는 감정에 기반하며 신속한 직관적 판단을 통해 산출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실험 결과와 해석은 의무론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통적 규범윤리학에서는 의무론적 판단이 이성적 추론의 산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칸트는 실천 이성을 통해 보편적 도덕법칙을 단지 그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전통적 의무론의 관점에서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생각하고 그것을 스스로의 의지로 행하는 것은 실천 이성의 산물이다. 그러나 제시문 〈나〉의 실험에서는 의무론적 판단이 실제로는 이성적 사고의 산물이 아닌 정서적 직관의 산물이라고 해석함으로써 의무론이 이성의 산물이라고 여겼던 전통적 관점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990자)

[문제 2]

〔그림 2〕는 디폴트 방식의 차이에 따른 국가별 장기기증 동의율을 나타내고 있다.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독일 사람들의 장기기증 동의율은 매우 낮은 반면,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헝가리, 폴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사람들의 장기기증 동의율은 매우 높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장기기증 동의에 관한 선택 방식의 차이를 통해 분석할 수 있다.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독일에서는 장기기증에 동의하지 않음을 기본 디폴트 값으로 설정하되, 장기기증을 원하는 사람들이 적극적 동의 의사를 표명하도록 하는 '선택 가입(opt-in)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헝가리, 폴란드, 포르투갈, 스웨덴은 장기기증에 동의하는 것을 기본 디폴트 값으로 설정하되, 장기기증을 원하지 않는 국민은 거부 의사를 표명하도록 하는 '선택 탈퇴(opt-out)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디폴트 규칙을 활용한 일종의 넛지 전략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넛지는 사람들의 현상 유지 편향을 이용하여 장기기증 동의율을 높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넛지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선택을 유도하여 공공선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부의 온건한 개입이 점차 미끄러운 비탈길을 타고 내려가 극심한 개입이나 강압으로 바뀔 수 있다는 위험성도 지닌다. 정부의 강한 개입은 시민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할 필요가 있다. 사회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 권력 집단이 정교하게 선택 설계를 가한다면 시민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권력 집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은밀하게 조종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제시문 〈마〉에서 엿볼 수 있는데, 제시문의 '멋진 신세계'에서는 국가에 의해 은밀하게 조종되고 지배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제시문 〈마〉에서 사람들은 지능에서부터 생각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국가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사람들은 고착화된 계급의 상태로 통제되고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등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결국, 전체 사회의 안정과 행복을 추구하는 '멋진 신세계'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억압과 통제, 삶의 의미와 목적의 상실, 전체를 위한 소수의 희생 등으로 구축된 디스토피아의 역설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1,000자)

2026 성신여대 파이널

제 6 강 2024학년도 기출문제 2

※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가>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은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로부터 어떻게 행동을 취할지를 배우고 이러한 학습에 기반하여 텍스트, 이미지, 영상, 혹은 컴퓨터 코드 등의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학습을 위해 주로 인터넷에서 수집된 거대한 양의 데이터를 이용하고, 어떤 주어진 대상이 있을 때 그 옆에 무엇이 오는 것이 가장 그럴듯한지 판단하여 결과를 제시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예로 '챗GPT(ChatGPT)'를 들 수 있다. GPT는 '생성형 사전 훈련 트랜스포머(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다. 2022년 11월 오픈AI(OpenAI)가 공개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챗봇인 챗GPT는 공개 두 달 만에 1억 명의 이용자를 돌파하여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1억 명이 넘는 서비스 이용자를 확보하였다. 이전의 생성형 AI와 다르게 챗GPT는 인간의 피드백을 통한 강화학습을 바탕으로 인간과의 개방형 대화에서 자연스러운 응답을 더 잘 생성하고 비윤리적인 발언이나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말이 등장하는 빈도를 낮출 수 있었다.

대규모 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이하 LLM)을 기반으로 한 생성형 AI의 한 종류인 챗GPT는 정보 검색, 문서 요약, 프로그래밍, 언어 번역 및 교정, 콘텐츠 생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성능을 보이며 우리 사회 최대 화두의 하나로 급부상하였다. 이러한 챗GPT 열풍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와 같은 거대 글로벌 기술 기업들뿐 아니라 각국 정부 및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로 하여금 인공지능 관련 정책 전반을 재점검하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챗GPT를 포함한 생성형 AI는 창작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생성형 AI 모델 자체가 갖는 한계나 위험성에 대한 논의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세계적 언어학자인 노엄 촘스키 교수는 최근 그의 동료들과 함께 뉴욕 타임스에 '챗GPT의 거짓 약속(The False Promise of ChatGPT)'이라는 글을 공동으로 기고했다. 그들은 챗GPT 열풍을 진단하면서,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이 적은 양의 정보로도 작동하고 데이터 간 상관관계를 추론하고 설명하는 등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인간의 뇌를 추월하는 순간이 도래하는 날은 아직 한참 멀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들은 이러한 AI 프로그램들은 도덕적 사고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고 보았다.

LLM에 기반해 가장 그럴듯한 말을 내놓도록 학습된 생성형 AI는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대답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제시하는 등 ㉠환각(hallucination) 이슈를 낳고 있다. 생성형 AI와 관련하여서는 환각 이슈 외에도 악성 코드나 텍스트를 삽입하거나 교묘한 질문 등

을 통해 인공지능이 규칙을 벗어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보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한편, AI 관련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확산하는 가운데 국제적 관련 규범이나 검증 가능한 규제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AI 기술 선진국과 기업들은 계속하여 우월한 지위를 누리기 위해 경쟁할 것이 우려되고 있다. 2023년 5월 30일, AI 연구의 선구자인 제프리 힌턴, 오픈AI 대표인 샘 알트먼, 구글 딥마인드 대표인 데미스 하사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등을 포함한 수백 명의 인공지능 연구자 및 유명 기업가들은 AI의 위험성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성명서에 서명하였다. 해당 성명서는 “AI로 인한 멸종 위험을 완화하는 것은 전염병 및 핵전쟁과 같은 다른 사회적 규모의 위험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나>

① 2023년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챗GPT를 통해 도출한 답변이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챗GPT에 의해 생성된 답변의 신뢰성은 학습 데이터의 완성도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학습 데이터의 완성도 수준에 대해서는 적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으며, 학습에 활용된 데이터의 출처도 별도로 관리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해당 보고서는 챗GPT가 사전에 학습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은 답변을 하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 보고서는 챗GPT의 경우 생성물에 대한 판별기술이 없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답변을 사실인 것처럼 제시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한다. 2023년 5월 CNN과 뉴욕 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30년 경력의 미국 변호사가 챗GPT를 활용해 판례를 검색한 후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그중 일부 판례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사례도 있다.

② AI가 도출한 결론은 편향성을 갖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러한 편향성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AI가 학습한 데이터 자체가 부족한 경우, AI는 편향된 결과를 도출하기도 한다. 한편, 학습 데이터 자체가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데이터가 담고 있는 정보가 다양하지 않은 경우, AI는 편향된 결과를 도출하기도 한다. 또한, AI의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편견이 반영되는 경우, AI는 이러한 편견이 반영된 결과를 도출하기도 한다.

③ ‘콘텐츠 팜(content farms)’은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가짜 뉴스(fake news)’를 양산하고 이를 배포하는 사이트를 의미한다. 이러한 콘텐츠 팜은 전통적 언론 기관으로 가장한 뉴스 사이트를 통해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생성된 가짜 뉴스를 마치 속보인 것처럼 배포한다. 콘텐츠 팜은 특정 국가의 대통령이 사망하였다는 허위사실이나 선정적인 가상의 사안을 실제

상황에 대한 속보인 것처럼 배포하기도 한다. 이러한 콘텐츠 팜은 다양한 언어를 기반으로 여러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 콘텐츠 팜은 기사 클릭 수에 상응하여 발생하는 광고 수익을 주된 수입원으로 한다.

<다> 1859년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On the Origin of Species)」이 발표되고, 유기체와 환경의 관계를 진화론적 사고로 이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었다. 영국의 경제학자인 허버트 스펜서가 사회 발전의 진화과정을 설명하면서 쓴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단어가 다윈의 진화론을 해석하는 의미로 전도되어 20세기 후반까지도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었다. 본래 다윈이 유전, 경쟁, 그리고 자연선택의 개념으로 진화를 해석하면서 가장 주목한 지점은 ㉡'변이의 다양성'이다. 이것은 외부요인에 의한 환경 변이나 유전자 변화와 같은 돌연변이를 통해 같은 종에서 성별, 나이와 관계없이 모양과 성질이 다른 개체가 존재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열등한 유전자는 사라져가고 우수한 유전자만 남는다면 개체 안의 우수한 유전자들 사이에서 변이의 발생이 줄어들다가 어쩌면 변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변이가 없다면 진화를 설명하기 어렵다.

지리학에서는 다윈의 진화론을 도시의 발달에 적용하여 산업화에 의한 도시와 비도시 간의 차별적 성장을 설명하였다. 지리학은 산업화의 지역적 선택, 시장과 자본을 확대하기 유리한 유전자적 조건의 승계, 그리고 도시화로 인한 경제성장의 성취를 진화론을 통해 설명하였다. 자연조건의 압력 아래 유리한 유전자를 지닌 개체가 더 잘 살아남아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진화론을 산업화에 의한 도시 진화에 적용한 것이다. 산업화의 성과로 획득한 자본과 이를 수용하는 도시가 가장 우월하거나 강한 형질을 지닌 유전자라고 여겨진 바 있다. 그러나 과도한 도시 개발은 생태계 교란, 자원의 고갈, 그리고 기후변화의 위기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인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새로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도시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비도시가 도시에 비해 열등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기능보다 환경을 우선하고 농촌 경관과 공존하는 새로운 도시 모형을 논의하며 2차 세계대전 직후의 공동체형 도시 환경으로 회귀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진화는 다양함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때로는 앞으로, 때로는 회귀하며, 최적의 선택을 통해 변이해 나가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라> 미국의 언어학자인 비오리카 마리안은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인해 소수어가 주도적인 언어에 의해 축출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인간의 창의성과 사고의 다양성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진단은 LLM에 기반한 생성형 AI가 사용인구가 많은 언어를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고 활용되는 현상에 기인한다. 국제적 분쟁, 내전, 자연재해 등에 의해서 언어가 소멸하기도 하지만, 영향력이 강한 언어의 사용 빈도 증가로 인해 영향력이 적은 언어가 소멸하기도 한다. 후자의 맥락에서 생성형 AI의 등장이 언

어 소멸의 속도를 부추길 것이라 예상되기도 한다.

AI는 자원과 기술력이 집중된 선진국들에서 개발되기 유리하다. 실례로, 미국은 세계의 인재를 흡수하는 대학, 혁신 기술을 신속하고 확산적으로 수익화할 수 있는 기업 생태계,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AI 기술 발전을 주도하며 AI 산업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마> 1975년 캘리포니아의 아실로마에서 유전학자들이 모여 DNA 재조합 실험이 갖는 위험성에 대해 윤리적 성찰을 촉구하였다. 이들은 미국 국립보건원이 재조합 실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까지 6개월간 모든 실험을 멈춘 바 있다. 그 결과 생명공학은 인류 공동의 기준을 가질 수 있었다. '전형으로부터의 일탈 또는 편향'으로 해석되던 변이가 다윈에 의해 ㉢진화의 원동력으로 재조명되었듯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남는 개체군은 유전적 변이를 풍부하게 지닌 것들이다. 어떤 선택으로 다양한 유전자의 변이를 이룰 수 있는지 공동의 가치를 고민해야 한다. 혁신의 변이 생성은 자연의 변이 생성과 마찬가지로 즉흥적으로 발생하지는 않는다. 생성형 AI 시대의 초입에서 모두가 '무엇을', '어떻게'라는 질문에 몰두하고 있지만, '왜'와 '어디로'라는 질문도 던져야 한다.

문제 1 제시문 <가>에 제시된 ㉠의 의미를 간략히 설명한 후, <나>의 제시문들을 활용하여 그 발생 원인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나>의 제시문들을 활용하여 ㉠에 대처하는 개인의 바람직한 자세에 관해 서술하시오. (900±100자)

문제 2 제시문 <다>의 ㉡과 제시문 <마>의 ㉢의 의미를 간략히 설명하고, 이를 활용하여 제시문 <라>의 상황을 진단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의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논술하시오. (900±100자)

제 6 강 2024학년도 기출문제-오후 대학발표 해설

1. 출제 의도

① 2024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계열 논술고사는 수험생들의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글쓰기 역량을 측정하고자 했다. 문제 구성은 고등학교 사회과, 도덕과,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한 주제와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한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답할 수 있도록 했다.

②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반영하여『국어』,『독서』,『화법과 작문』,『언어와 매체』,『통합사회』,『경제』,『사회·문화』,『세계지리』,『세계사』,『생활과 윤리』,『윤리와 사상』,『정치와 법』,『통합 과학』,『생명 과학 I, II』등에서 다루는 주제인 과학 발달, 4차산업혁명 이후 AI 등의 신기술 개발과 확대, 인간 사회의 진화와 다양성, 생태계의 건강한 보전 등에 대해 국제사회와 윤리적 진화 등을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문제로 구성했다.

③ 다양한 종류의 글에서 발췌한 제시문을 읽고, 이를 주어진 시간 내에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 개념을 구체적인 사례에 합당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여 수험생의 독해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논리적 표현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시문 내용을 비교, 분석, 적용, 평가함을 넘어 종합적인 사고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여 완결된 답안을 작성하도록 문제를 출제했다.

2. 문항 해설

<제시문 요약>

제시문 <가>는 생성형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에 대한 정의와 생성형 인공지능의 대표적 예인 챗GPT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또한, 제시문 <가>는 생성형 AI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분야를 소개하면서 생성형 AI 모델이 갖는 한계 및 AI에 대한 사회의 우려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의 한계와 관련하여 환각(hallucination) 이슈를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가>는 [문제 1]과 [문제 2]를 풀기 위한 배경지식 및 논의의 맥락을 제공하는 제시문이다.

제시문 <나>는 생성형 AI가 갖는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환각(hallucination) 현상의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환각 현상을 낳게 하는 원인 중의 하나인 데이터 편향성, 그리고 생성형 AI를 이용한 '가짜 뉴스'의 사례도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나>에 소개된 실제 사례나 지문은 환각 현상을 포함하여 생성형 AI를 둘러싼 문제점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이 AI가 학습한 데이터가 가진 다양한 한계에서 기인하고 이러한 한계는 결국 그러한 데이터를 만들어 낸 사회 구조의 산물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제시문이다. 가짜 뉴스 관련 제시문의 경우, 생성형 AI 활용과 관련된 개인의 바람직한 자세를 유추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자료이다.

제시문 <다>는 20세기 후반까지도 영국의 경제학자인 허버트 스펜서가 진화과정을 설명하면서 쓴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단어가 다윈의 진화론을 대표하는 것으로 호도되었던 점을 지적하면서 본래 다윈이 진화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적한 개념은 '변이의 다양성'임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다윈의 '변이의 다양성' 개념이 지리학에서 산업화에 의한 도시 진화에 대한 해석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진화와 진보는 다른 개념이며, 진화에는 다양함이 공존하고 때로는 앞으로, 때로는 회귀하며, 최적의 선택을 통해 변이해 나가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제시문 <라>는 대규모 언어모델에 기반한 생성형 AI의 확산이 사용인구가 많은 일부 언어를 중심으로 데이터 학습 및 활용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소수 언어의 소멸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지

적하고 있다. 이는 결국 인간의 창의성과 사고의 다양성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제시문 <라>는 AI 기술 개발이 미국과 같이 자원과 기술력이 집중된 일부 선진국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제시문 <마>는 과거 인류가 DNA 재조합 기술과 관련된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 전 6개월간 모든 실험을 멈춘 사례를 제시하면서 AI 시대에도 기술 개발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인류 공동의 가치와 기준을 정립해 나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시문 <마>는 생성형 AI를 포함한 AI 기술과 관련하여 우리가 왜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생성형 AI를 포함한 AI 기술 개발의 방향성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과 같은 규범적 질문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문항 해설>

❶ [문제 1]은 생성형 AI와 관련된 환각 이슈를 토대로 기초적 문해력, 분석적 사고, 비판적 사고 및 유사 사안을 통한 유추적 사고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 제시문 <가>는 AI와 관련된 다양한 한계와 위험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의 생성형 AI의 환각 이슈를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나>의 ①과 ②는 생성형 AI를 통해 환각 이슈가 발생하게 되는 다양한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나>의 ③은 생성형 AI의 환각 이슈에 대하여 개인들이 바람직하게 대처하는 방향성을 유추할 수 있는 제시문의 역할을 담당한다.

○ 답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요구된다. 제시문 <가>를 통해 대규모 언어기반 생성형 AI의 문제점으로 환각 이슈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제시문 <나>의 ①과 ②를 통해 생성형 AI의 환각이 학습 데이터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에 기술적 문제와 사회구조적 배경이 반영된 것임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나>의 ③을 통해 생성형 AI 관련 환각 이슈에 대해 개인이 대처하는 바람직한 자세로, 비판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❷ [문제 2]는 제시문 <다>의 ㉡과 제시문 <마>의 ㉢이 제시문 <라>의 상황을 진단할 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설명하고, 제시문 <가>의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논술하는 문제이다.

- 제시문 <다>는 다윈의 진화론의 주 논점인 '변이의 다양성'이 '진화의 원동력'이라는 관점으로 세계 혁신의 상황을 진단하고 있다. 진화는 적자생존이나 약육강식이 아닌 다양한 요소들이 공존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하게 적응해 나감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둔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도시의 진화를 사례로 상정하여 다양한 '변이'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 <라>는 선진국이 주도하는 AI 기술 개발의 현상 및 이로 인한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제시문 <마>는 윤리적 관점에서 인류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답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요구된다. 제시문 <다>의 '다양한 변이'는 '진화의 원동력'인데, 적자생존 혹은 약육강식이 아닌 최적의 조건을 선택하여 가장 안전한 진화를 이루어가야 함을 이해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도시화의 진화사례를 활용하여 제시문 <라>가 말하는 문제에 접근하고, 다양성의 인정과 오랜 경험을 통해 공존하며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함께 진화해가는 건강한 생태계의 보전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서술해야 한다. 또한 제시문 <마>의 사례를 통해 윤리적 합의를 가지고 인류는 공동의 가치를 우선하여 '왜' 선진국 기술 개발을 받아들이고 동참해야 하는지, 과연 선진국이 주도하는 기술 개발과 활용은 인류 발전과 환경에 긍정적인지 혹은 무엇을 우려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서술해야 한다. <가> 제시문이 설명하고 있는 AI 기술과 특히 챗GPT의 위험성 등을 이해하고, 신기술의 검증 없는 확산 이전에 국제 규범과 표준을 마련

하고 이러한 환경의 변화가 인류 전체에 균열을 초래하지 않도록 고민해야 함을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3. 채점 기준

[문제 1] 배점 50점

영역	채점 기준	배점
이해력	- 제시문 <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성형 AI와 관련된 '환각' 이슈를 이해하고 이를 간략하게 서술한다.	15
비판적 분석력과 창의적 사고력	- 제시문 <나>를 분석하고 적합한 제시문을 활용하여 제시문 <가>에 기술된 '환각'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서술한다. - 제시문 <나>를 분석하고 적합한 제시문을 활용하여 '환각' 이슈가 존재하는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개인의 바람직한 자세에 관해 서술한다.	25
논리적 표현력	- 논술 내용의 정합성, 정확한 단어 선택 및 문장 간 논리적 연결성이 요구된다.	10

※ 출제 문항의 특성상, 챗GPT가 생성형 AI의 한 예임을 이해하고, 생성형 AI는 AI의 한 종류임을 명확히 이해한 후, '환각' 이슈를 생성형 AI와 연관 지어 기술할 것이 요구됨.

[문제 1]의 답안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제시문 <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성형 AI의 '환각' 이슈를 이해하고 이를 간략하게 서술한다.

둘째, 제시문 <나>를 분석하고 적합한 제시문을 활용하여 제시문 <가>에 기술된 '환각'이 발생하는 원인을 종합적으로 서술한다. '환각' 현상이 생성형 AI가 갖는 기술적 한계에서 기인함을 서술한 후, 이러한 기술적 한계가 생성형 AI가 학습한 데이터에서 비롯한 것임을 함께 기술한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의 한계는 이를 생산한 사회 구조상의 차별이나 편견 등을 반영하고 있음을 기술한다.

셋째, 제시문 <나>를 분석하고 적합한 제시문을 활용하여 '환각' 이슈가 존재하는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개인의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 논리적으로 서술한다.

▶ 앞에서 제시한 내용과 조건에 의거하여, 답안은 다음과 같이 6등급으로 평가한다.

- 1등급: 위의 3가지를 모두 정확히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2등급: 위의 3가지를 모두 수행했으나,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3등급: 위의 3가지 중 2가지를 정확히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4등급: 위의 3가지 중 2가지를 수행하고,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5등급: 위의 3가지 중 1가지를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6등급: 위의 3가지 중 1가지를 수행하고,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글자수에 제한(900자±100자)이 있으므로, 800자 미만의 경우 아래와 같이 하향 평가한다.

700자~799자	: 1등급 하향	600자~699자	: 2등급 하향
600자 미만	: 6등급 부여	백지답안	: 7등급 부여

[문제 2] 배점: 50점

영역	채점 기준	배점
이해력	- 제시문 <다>의 ㉡의 의미를 파악하고 서술한다. - 제시문 <마>의 ㉢의 의미를 파악하고 서술한다. - 제시문 <다>의 ㉡과 제시문 <마>의 ㉢의 관계를 이해하고 서술한다.	15
비판적 분석력과 창의적 사고력	- 제시문 <다>에서 언급된 다윈의 진화론의 핵심 개념 및 주장을 다른 맥락에 적용하여 서술한다. - 제시문 <라>의 상황을 진단하고 제시문 <다>의 ㉡과 제시문 <마>의 ㉢의 개념을 이러한 상황에 적용하여 서술한다. - 제시문 <가>의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논리적으로 서술한다.	25
논리적 표현력	- 논술 내용의 정합성, 정확한 단어 선택 및 문장 간 논리적 연결성이 요구된다.	10

[문제 2]의 답안은 다음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제시문 <다>의 ㉡의 의미와 제시문 <마>의 ㉢의 의미를 기술하고, 두 개념 사의의 관계에 대해 기술한다. 다양한 유전자들이 서로 공존하고 최적의 상황을 선택해 가는 상황에서 변이가 이루어져 진화과정이 형성됨을 이해하고, 제시문 <다>에서 언급된 다윈의 진화론의 핵심 개념 및 주장을 생성형 AI의 맥락에 적용한다. 이때 제시문 <다>에 제시된 도시의 진화와 관련된 사례를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제시문 <다>의 ㉡과 제시문 <마>의 ㉢을 활용하여 AI 기술 개발이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사용인구가 많은 언어를 중심으로 데이터 학습과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비판적으로 서술한다.

셋째, 생성형 AI를 포함한 AI 이슈에 대해 논하면서, AI 기술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여 서술한다. AI 기술 개발에 있어 왜 이러한 기술 개발이 필요한지 그리고 인류 공동의 가치 차원에서 그 방향성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수반되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논술한다. 이때, 제시문 <마>의 사례를 활용할 수 있다.

▶ 앞에서 제시한 내용과 조건에 의거하여, 답안은 다음과 같이 6등급으로 평가한다.

- 1등급: 위의 3가지를 모두 정확히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2등급: 위의 3가지를 모두 수행했으나,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3등급: 위의 3가지 중 2가지를 정확히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4등급: 위의 3가지 중 2가지를 수행하고,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5등급: 위의 3가지 중 1가지를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6등급: 위의 3가지 중 1가지를 수행하고,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글자수에 제한(900자±100자)이 있으므로, 800자 미만의 경우 아래와 같이 하향 평가한다.

700자~799자	: 1등급 하향	600자~699자	: 2등급 하향
600자 미만	: 6등급 부여	백지답안	: 7등급 부여

○ 대학발표 예시답안

[문제 1]

최근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한계와 위험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규모 언어모델을 기반으로 한 생성형 AI와 관련하여 지적되는 환각이 그 대표적 예이다. 환각은 생성형 AI가 거짓된 정보를 올바른 정보인 것처럼 대답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마치 존재하는 정보인 것처럼 대답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30년 경력의 미국 변호사가 챗GPT를 활용하여 검색한 판례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이 중 일부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 판례임이 밝혀진 사례가 환각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규모 언어모델을 활용한 생성형 AI의 한계인 환각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생성형 AI가 아직 학습하지 못한 데이터와 관련된 질문을 받는 경우 환각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생성형 AI가 데이터 학습을 하였으나 그 내용이 다양하지 못한 경우와 같이 학습 데이터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에도 환각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한편, 기존의 사회적 구조를 반영한 사회적 차별 내지 편견이 학습 데이터에 반영되어 대규모 언어모델을 활용한 생성형 AI가 환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학습 데이터의 출처 관리가 명확하게 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학습 데이터의 완성도와 관련된 적정한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도 학습 데이터의 완성도가 확보되지 못하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생성물에 대한 판별 기술이 없다는 점 또한 환각 현상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콘텐츠 팜을 통해 유통되는 가짜 뉴스들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오늘날 독자들에게는 인터넷상의 각종 뉴스에 대해 어떠한 뉴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역량은 생성형 AI의 사용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요구된다. 대규모 언어모델에 기반한 생성형 AI는 환각 이슈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를 사용하려는 개인은 그 결과물을 비판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평가하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937자)

[문제 2]

다윈은 종의 기원을 통해 다양한 유전자의 변이가 진화의 원동력이라고 설명하였다. 산업화로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도시는 우월한 유전자로 여겨졌을 것이다. 도시의 과도한 확대의 결과 인류는 자원의 고갈과 기후변화라는 위협적 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의 압력에서 일부 도시학자들은 2차 세계대전 직후의 도시 모습을 최적의 조건이라 선택하고, 그 시기의 도시 모습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였다. 도시의 회귀는 직면한 상황을 극복하고 변이를 시도한 하나의 사례이다.

현재 세계의 많은 국가는 선진국이 주도하는 AI 기술 개발에 영향을 받아 이를 활용한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자원과 기술력은 물론, 영어가 지닌 위상에 의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우월한 유전자의 지위를 획득한 듯, AI 기술 개발과 이로 인한 수익 창출을 주도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와 기업, 그리고 개인들까지 신기술의 활용에 서둘러 진입하려 노력하기 때문에 선진국은 더욱 유리한 입장이 될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소수 언어는 소

멸하고 기술력과 자본이 없는 나라와 기업은 도태하게 될지 모른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AI 기술 개발 과정에도 다양한 견해와 접근이 반영되어야 한다.

AI 기술이 폭발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미래 환경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많은 과학자들은 챗GPT가 개발된 지 일 년도 안 되어 벌써 그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AI 기술 개발과 활용에 대해 개발자들조차 그 위험성을 경고하며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DNA 재조합을 통한 유전자 변이를 우려하며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때까지 실험을 멈춘 사례는 윤리적 대응을 통해 안전한 진화를 이루기 위한 그 시기의 변이 형태였을 것이다. 국제사회의 협의를 통해 국제적 표준과 규범을 설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인류 공동의 가치를 우선으로 한 AI의 윤리적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920자)

○ 선생님 예시답안

[문제 1]

생성형 AI는 이미 인간의 삶 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보 검색, 프로그래밍, 번역 및 교정 등의 분야는 물론, 콘텐츠 생성 등의 창작 분야까지 높은 수준의 성능을 보이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한계와 위험성도 고려해야 한다. 생성형 AI와 관련하여 지적되는 환각이 그 대표적 예이다. 환각은 생성형 AI가 거짓된 정보를 올바른 정보인 것처럼 대답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마치 존재하는 정보인 것처럼 대답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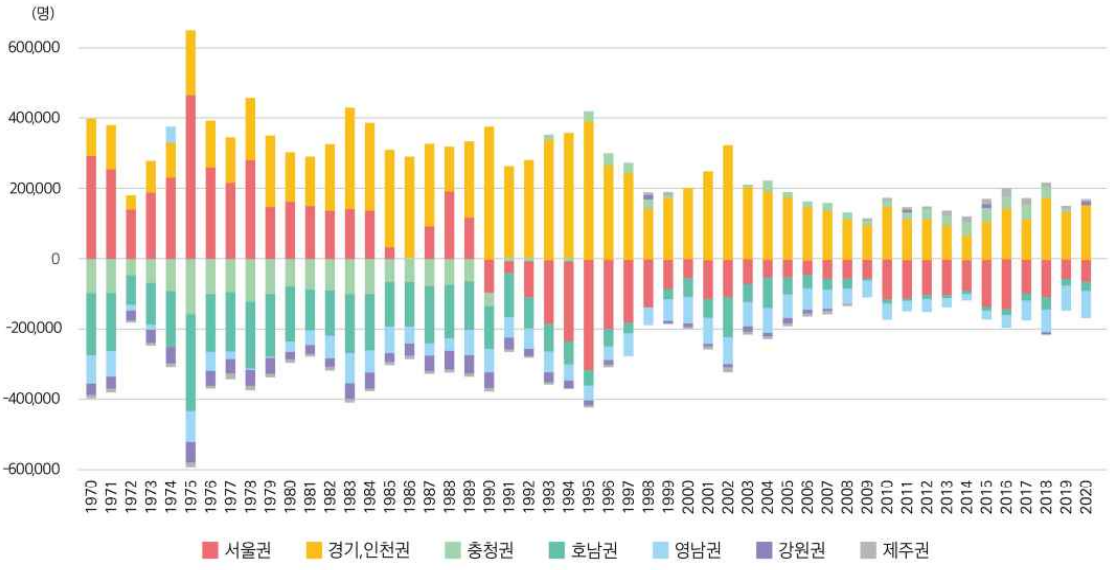
생성형 AI의 한계인 환각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생성형 AI가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생성형 AI는 주로 인터넷에서 수집된 거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한다. 그런데 그 학습 데이터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 AI에서 환각이 발생하고 정보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학습 데이터의 적정한 기준도 없고, 그 출처 관리도 명확하지 않아서 학습 데이터의 완성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생성물에 대한 판별 기술이 없다는 점도 환각 현상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데이터의 편향성도 환각의 원인이 된다. AI가 학습을 했더라도 그 내용이 다양하지 못하거나, 특히 기존의 사회적 구조를 반영한 차별이나 편견이 학습 데이터에 반영된다면, AI 역시 편향된 결과를 도출한다.

콘텐츠 팜을 통해 유통되는 가짜 뉴스들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생성형 AI의 환각 이슈는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개인은 그 결과물을 비판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평가하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먼저 개인들은 기사의 자극적인 내용에만 반응하지 말고 그 출처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정보에 대한 다중 확인을 통해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보편적이고 도적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정보의 편향성도 점검해야 한다. 개개인이 이러한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갖추어야지만, 생성형 AI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긍정적 도구로써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984자)

제 7 강 2024학년도 모의논술

※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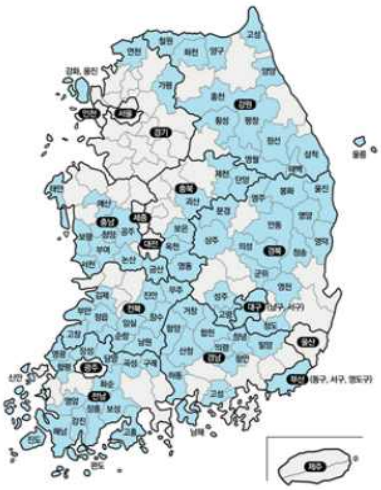
<가> 지방소멸은 인구 변화와 비도시 지역 쇠퇴의 불균형에 대한 위협적 경고이다. 일본 학계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지방소멸'은 자극적 용어 자체가 지닌 파급력과 함께 한국의 지역 격차 문제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국토의 한 지역이 날아가거나 푹 꺼지듯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인구가 0이 되는 것도 아닌데, 과연 지역이 사라져 없어질 수 있을까? 다만, 지방의 인구 과소화가 심화되면서 사회 경제적 환경이 점점 더 악화되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은 1960년대 이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주도한 결과, 서울과 울산, 그리고 행정도시로서의 세종시 등 경제적 생산성이 높은 소수의 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구는 인구 감소와 함께 사회·경제적 활동의 퇴조를 경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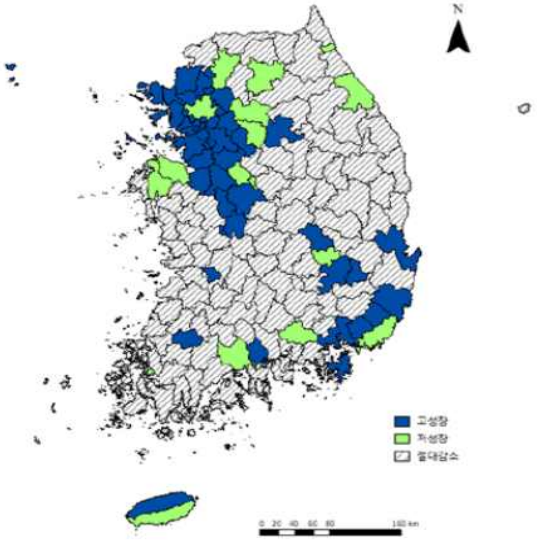
권역별 순이동 추이 1970~2020(인구이동통계연보)

위 그래프의 연도별 인구 이동 추이를 보면 20세기 후반까지 서울과 경기·인천권으로의 순이동이 집중하였고, 이후 서울은 약간의 감소추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경기·인천의 인구 이입 비율은 타 지역에 비해 높다. 신산업 입지와 신도시 개발 등 정책적인 변수가 작용하는 것이다. 아래의 두 지도는 행안부가 지정한 89개의 인구 감소 관심 시군지역과 1975년-2020년간 지역별 인구 이동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두 지도에서 나타내는 현상이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인구 분포의 왜곡을 잘 보여주고 있다. 어떤 한 지역의 인구가 감소한다 해도 국가와 지방정부는 그 지역에 최소한의 하부구조를 유지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지방이 소멸되는 것이 문제라기보다 오히려 소멸되지 않아 문제인 것이다.



지방소멸위기지역, 2020(행안부)



인구변화 1975-2020, (통계청)

대도시, 중핵도시로의 인구 유출에 따른 인구 감소, 고령화의 증대와 젊은 여성 인구의 감소는 지방소멸 위험성의 주요인이다. 한국은 이미 2000년대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다. 평균수명의 증대와 함께, 출산율 감소가 고령화를 가속시킨다. 저출산은 곧 인구 고령화로 직결되고, 고령화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는 다시 저출산으로 이어져 악순환이 계속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사회적 연결성을 약화시키고, 공동체의 유대감이 위축되어 사회적 활동도 저하된다. 인프라 및 공공서비스의 분배에도 영향을 주어 생활 편익과 질이 저하된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더욱 심화된 지역간 격차와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방안으로 행안부와 중기부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하여 행·재정적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한시적이지 않도록 지속적 지원에 대한 명확한 계획과 실현 가능한 현실적 방안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

<나> 지역의 매력도는 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어메니티(amenity)라는 '매력성'의 요소와 함께 사회적 연계성과 견고함을 형성한다. 지방 주민들의 이주 행태는 근린의 매력성, 도시적 매력성, 그리고 환경의 매력성 등에 영향을 받는다. 근린의 매력성은 의료서비스, 주택가격, 교육의 질(초·중·고등학교의 질), 범죄 예방 등과 관련이 있고, 도시적 매력성은 백화점·대형마트 등 잘 갖추어진 상업시설, 대학과 공공서비스의 질, 도서관, 극장, 스포츠 시설 등 문화시설로 이루어진다. 또한, 환경적 매력성은 대기의 질, 상수도 수질, 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 등의 다양한 요인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요인들은 지역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는

특성으로 작용하며 인구 이동에 영향을 미친다. 지역의 매력도는 그 자체로 관광 자원이 되어 일자리 창출, 부동산 가치 상승,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장, 인구 유입으로 인한 수요 증가와 산업 활성화 등의 다양한 효과를 창출한다. 지역의 정체성과 고유의 문화 또는 생활 양식 등이 기반이 된 지역의 매력성은 주민이 중심이 된 관련자들과의 협치에 의해 강화된다.

한국의 인구 분배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의 결과, 서울 대도시권과 이외 지역으로 양분되었다. 지방에서 성장한 각 분야의 우수한 인재들이 서울 혹은 사회 경제적 지위가 강력하게 형성된 대도시 지역으로 유출되는 탓에, 이들이 나고 자란 고장에 그들의 우수한 능력을 기여하는 선순환을 기대하기 어렵다. 애향심을 가지고 지역 공동체와 지속적인 연대를 형성하는 것은 침체된 지역에 활력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기반이 잘 구축된 지역을 향해 떠난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고장을 공동화시킨다.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지역 출신의 인재와 청년들이 떠난 고향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협력을 이루어 공동체 문화 상생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고향에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건의해 왔다. 일본은 2008년부터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고향납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재난 상황과 복구 등의 상황에서 고향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지자체의 세수 지원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 2016년부터는 기업도 기부할 수 있도록 '기업형 고향납세' 제도를 시행하며 최대 90%까지 세액을 공제해 준다. 이런 사례를 통해, 한국은 2021년 고향기부의 모금, 접수, 활용 방안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22년 시행령을 제정, 2023년부터 자치정부별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도'란 일반 국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 외의 자기 고향이나 애착이 가는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중앙정부로부터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한 지방으로부터는 지역특산품이나 관광·레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 등을 답례품으로 받는다. 기부 금액은 연간 500만 원까지인데, 10만 원까지는 전액(100%) 공제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예컨대, 10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전액과 초과분 90만 원의 16.5%인 14만8천 원을 합해 연말에 24만8천 원을 공제받고 100만 원의 30%인 30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덤으로 기부로 기여한 긍지도 생긴다. 이제 막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의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고향세 모금이 시행된 이후 지역에 기금이 투입되면 지역민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질지는 아직 모호하다. 또한, 어떤 동기가 부여되어 누가 기부를 하려는지 기부 참여에 대한 행태도 모호하다. 지자체의 기존 사업의 예산과 고향세 기금이 어떻게 구분되어 활용될지도 뚜렷치 않다. 기본적인 답례품을 종합정보시스템에 구축해 놓아야 하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은 기금을 예상하며 지자체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금액별 핵심 답례품은 어떻게 계획할까? 자칫 도시적 상업시설물의 입지와 대형 문화시설 등을 유치하는데 기금을 충당하면 이후 지역 환경의 변화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내 고향에 대한 추억과 자긍심으로 애

향심이 발현되고, 매력적인 지역에 대한 관심이 유도되어야 고향의 발전에 보탬이 되는 기부의 마음이 열릴 것이다.

<다> 프랑스 파리는 1970년대까지는 도심 내 대형 상업건물이 입지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도시계획차원에서 대규모 상업기능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대규모 상업시설이 입점한 이후 상업가로에는 상업기능의 고급화, 체인화가 현저히 늘어나는 반면에 소규모 상점들이 감소하고 대형 프렌차이즈에 의한 독점적 잠식이 나타나면서 상권의 다양성이 감소하고 상권의 활력도 점차 부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파리시는 2006년 파리도시계획을 수립하여 400여개 특정가로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보호상업가로로 지정하였다. 파리시는 SEMAEST라는 기구를 통해 보호상업가로 안의 상가를 매입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하나 경쟁력이 약한 업종을 중심으로 지역소상공인과 수공업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였다.

독일 라인강변 인구 100만의 쾰른시 서부에 위치한 에렌펠트는 1970년대까지 슬럼화된 지역으로 노동자 계층의 주거지였으나, 2009년 도시재정비 사업이 완료되면서 새로운 도시 이미지와 함께 젊은 계층이 선호하는 커뮤니티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지역의 환경 개선에 따라 주택 임대료가 급등하였고, 주거지역의 상업화 양상도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자 지역주민들은 에렌펠트 공동체 정원을 만들었고, 이동 가능한 상자에 식물을 재배하여 지역 주민 간 공유경제를 실천하였다. 이 운동은 누구나 건축하고 살 수 있는 프로젝트인 레이첼 건축 프로젝트로 발전하였는데, 이 프로젝트는 25,000유로에 25m^2 규모의 주택모듈로 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공동주거단지를 지향한다. 레이첼 프로젝트는 지역주민과 젊은 건축가들의 자율적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정주성을 보호하면서도 도시의 활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문제 1 제시문 <가>에 나타난 '지방소멸'의 용어를 통해 현재 한국 사회의 변화를 설명하고, 제시문 <나>의 '고향사랑기부제' 적용이 한국의 지속적인 국토 균형개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논술하시오. (800~1000자)

문제 2 제시문 <다>에 밑줄 친 ㉠이 가리키는 개념과 의미, 발생 원인을 서술하고, ㉠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해 순서대로 논술하시오. (800~1000자)

제 7 강 2024학년도 모의논술 대학발표 해설

1. 출제 의도

- 올해 인문계열 모의 논술고사는 지난 4년간의 출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번 시험에서는 고등학교 <한국지리>, <세계지리>, <통합사회>, <사회·문화>, <언어와 매체> 등의 다양한 교과에서 배운 지식들을 실제 삶에서 직면하는 구체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응용하게끔 함으로써, 논리적 분석, 비판적 평가, 창의적 응용 능력을 포괄하는 종합적 고차 사고 역량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특히 다양한 형식의 매체 자료에 접근하여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매체 문해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제시문을 배치하고 문항을 제시함으로써 논의의 폭과 깊이를 갖춘 종합적 문제 해결 역량을 점검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사례와 제시문은 고등학생 수준의 인문적 소양과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학생이라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사례와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내용 및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자료들로 구성하였다.
- 올해 인문계열 모의 논술고사 제시문은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시대적 패러다임의 이해와 사회과 교과에서 학습한 국토 경제 개발, 인구의 증가, 분배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여러 교과에서 학습한 내용을 오늘날의 사회 현상과 연계하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변화에 대해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인구의 성별, 연령구조별 구조를 통해 국토개발의 유형과 지역적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 국토 개발 계획과 인프라의 분배 등을 위해 인구자료는 가장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인구구조를 통해 이해하고, 이러한 현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저출산, 경제적 불안 구조 등의 상관성을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인구구조와 분배는 지표상에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인구를 흡인하는 데에는 기능과 집결성이 존재한다. 또한 ,기능과 집결성을 지닌 지역으로 인구를 배출하는 지역들은 이에 상대적인 원인을 지니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로 이루어진 서울 대도시권은 한국이 산업화와 도시화를 경험하면서 거대한 구심력을 지닌 일극 집중지역이 되었고, 이에 반해 서울 대도시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지역의 경제 사회 기반이 낮을수록 큰 규모의 인구를 배출해왔다. 이는 1960년대부터 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국토의 균형을 깨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었고, 이에 따라 지난 50여년의 한국 국토개발은 서울 대도시권의 집중 방지와 지역 분배에 초점을 둔 계획을 꾸준히 제시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대도시권은 도시 기반과 다양한 서비스, 인구 규모에 준한 인프라의 개발과 예산 편성 등으로 다른 지역과의 차등이 더욱 확대되어왔다. 인구의 변화와 지역 간 격차 등에 대한 한국의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기반 시설의 약화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비도시 지역이 지방소멸이라는 위협적 심각성이 대두되는 한국의 불균형적 국토 상황의 문제점을 지문을 통해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지방소멸이 의미하는 바를 지문의 이해를 통해 명확하게 해석하고, 인구 이동, 분배, 출산력의 저감과 고령화의 인구구조 및 변화가 국토개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제시된 그래프와 지도를 읽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또한 재난 등 지역 환경의 악화와 쇠락 상황을 회복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고향기부금 제도를 이미 실시한 일본을 사례로, 한국도 '고향세' 제도를 마련하여 지방소멸의 위기적 상황에 대응하려 하는데, 한국적 상황에서 '고향세'는 적합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제시된 지문을 통해 인구 감소와 인구의 불균형적 변화에 따라 비도시 지역의 쇠퇴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고향세'는 기금 조성의 기회가 될 수 있는지, 고향세의 제도적 의미가 기부자를 모집하여 지역의 재생에 탄력적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다각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현재 실행되기 시작한 한국의 고향세가 지닌 한계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교육, 문화, 다양한 혜택 등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과 대도시를 향해 떠나간 기동성 있는 청장년층 인구가 '고향세 제도'를 기회로 고향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기부금을 통해 표현할 수 있을까? 아직 지자체별 명확한 기부금 활용 계

획을 구성하지 못한 채, 지자체 사업 예산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답례품은 어떻게 계획할 수 있을지, 매년 꾸준히 어느 정도의 기부금을 적립해 낼 수 있을지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고향세 기금에 대해 명확한 활용 계획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가 기부금에 의해 조성된 기금을 기존 도시적 상업 환경을 흉내내는데 사용한다면, 새롭게 조성된 외부 상업시설물 건축에 따라 토지와 건물 임대료가 상승하여 기존의 소규모 혹은 영세형 고유 상점과 노포 등이 내몰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등에 대한 사고를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인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에 따른 문제와 그에 대응하는 파리와 독일의 사례에 대한 제시문의 내용을 파악하여 젠트리피케이션의 개념과 의미를 서술하고, 그것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해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지에 대해 평가한다.

2. 제시문 해설

- 제시문 <가>

한국은 1960년대 산업화와 도시화를 이루면서 극명하게 인구의 서울 일극 집중을 경험하였다. 전쟁 이후 국토 재건과 경제적 환경의 복구를 위해 서울을 일극으로 집중 개발을 하고, 이후 파급효과를 통해 국토를 개발해보자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 이후 서울을 기점으로 전국적 인구의 대규모 이동이 이루어지면서 십여 년의 기간 동안 서울은 흡인지역, 그리고 기타 지역은 배출지역으로 양분되었다. 이후 십여 년의 기간 동안 꾸준히 국토개발정책을 통해 서울 대도시권 억제정책, 분산정책 등으로 국토 균형개발을 추진했으나, 결과는 서울대도시권과 이외 지역으로 인구가 50:50으로 이분화되었다. 이에 따라 결국 서울은 1988년 서울의 교외지역 다섯 곳을 선정하여 주택 신도시를 구축하며 몰려드는 인구를 수용하기로 정책을 전환했다. 그러나 신도시개발 이후 성남의 분당과 안양 등은 100만 도시로 거대화되는 등 오히려 인구 집중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다. 인구의 서울 집중화에 따른 밀집과 주택 문제의 증가, 이와 함께 산업과 교육 행정 서비스 등 대부분 정책과 예산이 서울에 편중되는 현상은 한국의 국토균형개발에 매우 지대한 장애 요인이 되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수도 개발과 정부 기관의 지방 이전 등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으나, 세종시의 빨대 효과라는 또 다른 문제를 생성시켰다. 이렇듯 대도시의 기능과 다양한 서비스, 질 높은 인프라 구축은 지방의 인구를 흡인하고, 기반이 취약하고 대도시에 비해 교육 등 서비스의 환경이 낮은 지역의 인구는 넓은 기회를 찾아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인구의 고른 배분은 국토의 균형 발전에 주요한 요인이다. 한국이 처해있는 불안정한 휴전 상황에서, 국토의 1/11 규모를 지닌 서울 대도시권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이 모여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매우 안보적으로 위험한 상황이다. 그래프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순이동 추이에서 꾸준히 부(-)적 성장을 보이고 있는 지역은 호남권이고, 1990년대부터 서울의 인구가 빠져나가는 대신 경기도의 순이동 정(+)적 성장이 눈에 띄는 것은 신도시개발 이후 서울의 인구가 분산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두 지도를 비교하면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인구 저감지역과 절대 감소지역이 뚜렷이 일치하는 것을 볼 때, 지역의 특별한 기능이 강화되거나 신산업이 유치되거나 하는 등의 이유가 없이는 감소되는 인구를 채울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의 인구 불균형에 대해 지문을 기초로 그래프와 지도 등을 활용하여 설명하고, 지방소멸이라는 용어가 주는 의미를 국토의 균형적 개발과 지속가능성과 연계하여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시문 <나>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한국에서 시도하는 제도적 한계는 무엇인가? 일본은 재난 상황에서의 위급함과 복구를 위한 기금마련을 목적으로 애향심을 가지고 자기 고향에 재난 지원금을 기부하는 형태로 고향세가 시작되었다. 한국의 인구 이동 특성과 더 나은 도시에 대한 동경 등의 특유한 정서가, 정책이 마련되었다고 떠나온 고향에 선뜻 기부하는 환경으로 이어질지 좀 더 고

민이 필요하다. 한국은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로 보낸다'라는 속담이 있을 만큼 서울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보다 큰 기회가 형성되어 있다는 정서가 팽배해 있다. 교육 환경에서도 유수한 대학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농어촌 전형이라는 입시제도를 통해 지방의 우수한 인재를 서울권 대학으로 불러들이는 환경에서 서울 집중성의 분산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 21세기 들어와서 서울의 인구가 경기도로 확산되는 현상이 보이는데, 신도시 개발과 신산업 유치, 그리고 교통로 확대 등으로 서울과의 사회적 거리가 가까워짐에 따라 서울의 기능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지도를 통해 서울이 성장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된 상황을 읽어낼 수 있다. 그러나 행안부가 우려하고 있는 소멸 위기에 처한 심각한 인구 감소지역과 1975년 이후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지역이 뚜렷이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서울에서 물리적 거리가 먼 지역, 특히 그동안 산업 개발과 경제적 기반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은 회복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향세'를 실행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예측이 쉽지 않다. 고향에 기부금을 내는 것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내 고향에 대한 관심과 내 고향에 대한 자긍심 등의 애향심이 전제되어야 한다. 산업 유치 혹은 정책적 판단으로 기능의 배치에 따른 인구 이입의 기회 확대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지역의 인구 감소를 막을 수가 없다. 정부의 지원 또한 인구 규모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구 유출이 심한 지역은 이를 기대하기도 점점 더 힘들어진다. 지방의 소멸 현상은 현실적이지 않지만, 인구가 빠져나감에 따라 정부 지원 예산이 축소되고, 지역 세제 규모가 줄어듦에 따라 지역의 인프라와 각종 사회 경제적 환경이 낙후되는 것은, 남아있는 부양계층을 포함한 사람들에게 상대적 열악감과 박탈감을 심화시키며 지역 불균형의 국토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분명한 계획 없이 기금을 조성했을 때, 이를 활용하기 위해 지자체는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전국적 규모의 프랜차이즈 상점이나 도시적 상업모형을 구축하는 것으로 지역의 경제적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할지 모른다. 결국, 지역 고유의 상점이나 노포, 오랜 기간 잔여해 있는 지역 상권은 정체 없는 외부의 침입으로 파괴되고, 그나마 남아있던 지역 정체성까지 날려버릴 것이다. 21세기 새로운 지역 경쟁력의 화두는 지역 매력도이고, 이에는 지역의 문화와 역사가 기반이 지역의 정체성이다. 창의적 발상으로 지역의 장소감과 매력도를 상승시키면 자연스럽게 관광 자원으로 이어질 것이고, 굳이 도시적 상업시설물이 없어도 사람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고향세 기부금을 모금하기 전에 지역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을 창의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제시문 <다>

제시문 <다>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논문과 신문기사로 지문이 구성되어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어원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인 젠트리(gentry)가 상대적으로 못사는 사람들의 거주지에 파고 들어가 공간을 변화시키는, 즉 '젠트리파이(gentrify)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영국의 도시학자인 루스 글래스가 1960년대 런던의 쇠락한 도심 주거지가 중산층 주거지역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설명한 것에서 유래했는데, 오늘날에도 여러 도시에서 이러한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상권이 발전하고 중산층이 쇠퇴지역에 진입하여 전체적으로 도시에 활력을 가져오는 이러한 현상이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일이 급격하게, 특히 원주민에 대한 이주 대책 없이 이뤄질 때는 대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글래스가 관찰하던 때와 다르게 최근 도시의 젠트리피케이션은 자본의 의도적인 흐름에 의한 경우가 많다. 먼저 쇠퇴한 거리에 자본이 흘러들어 이를 변화시키고 적당히 꾸민다. 곧바로 이곳은 매력적인 곳으로 환골탈태하면서 멋진 곳으로 소문이 난다. 당연히 사람들이 몰려든다. 이제 원주민들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쫓겨난다. 원주민들이 쫓겨나도 임대료는 계속 올라간다. 매력 있고 아기자기한 거리에 거대 프랜차이즈 업종들이 들어오고 커다란 가게를 꾸민다. 결국, 거리의 매력은 사라지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점차 줄어든다. 프랜차이즈로 대표되는 자본은 빠져나가고 거리는 다시 쇠퇴한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는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은 기존 주민시설을 상업지역으로 바꾼 탓에 지역주민들

의 정주성 파괴를 야기할 수 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며 해외의 여러 도시 역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해오고 있다. 제시문 <다>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양상과 이에 대응하는 프랑스 파리와 독일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3. 문항 해설

[문제 1]

[문제 1]은 '지방소멸'의 용어를 통해 현재 한국 사회의 변화를 설명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적용이 한국의 지속적인 국토 균형개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논술하는 것이다. 논술을 위해 '지방소멸'이 의미하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 지문을 통해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한국의 인구 분포가 국토개발 정책에 따라 불균형을 이루게 된 상황을 이해하고, 대도시와 중핵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도시 지역은 인구 감소 현상에 따라 지역이 쇠락하고 지역 간 편차가 악화되고 있다는 국토 현실을 인지한다. 더욱이 고령화 사회에서 저출산은 인구의 왜곡상황을 더욱 심화시키는 인구학적 특성을 이해하고, 경제 사회기반이 약한 지역은 교육, 행정, 정책 등의 서비스의 사각시대에 놓여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국토개발이 지속적이지 않고 불안정한 심각성을 파악하고, 지역 기반이 낙후된 비도시지역의 활성화를 탄력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창의적 대안을 지문의 여러 설명을 통해 도출해야 한다. 지속적인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해 '고향세' 제도 등을 도입하며 지방의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제도가 지닌 한계에 의해 기금의 활용과 납세자 풀의 규모,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 여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기금 활용에 대한 계획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제도의 효율성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실행 가능하고 유익한 제도로 효용성 있는 기금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도 구축 이전에 지역성의 강화와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지역 정체성의 확고한 보전 방안, 지방의 매력도를 상생시킬 수 있는 지방정부의 노력, 그리고 자치 시민들의 참여와 보호 등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문제 2]

[문제 2]는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에 따른 문제와 그에 대응하는 파리와 독일의 사례에 대한 제시문 <다>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젠트리피케이션의 개념과 의미를 서술하고, 그것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해 논술할 것을 요구한다. 먼저, ㉠현상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이는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어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 과정과 원인을 살펴보면, 도시 형성 초기 대부분의 주거지역은 도심에 위치하지만, 이후 도시 규모가 커지고 기존 도심 주거지에 확대되면서 도심은 상업과 업무기능이 확대되고 자동차를 보유한 중산층은 교외로 주거지를 이동한다. 중산층이 떠난 주거지역은 하위 계층의 거처로 사용되면서 노후화되고 이러한 노후화된 공간은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복합 개발이 되는데, 이곳에 다시 중산층이 유입된다. 이렇게 도시가 재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이 몰리고 부동산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기존 거주자 또는 임차인, 소상공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의 긍정적 측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지역에 중산층과 부유층이 유입됨으로써 그 지역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어 지역 경제의 활력을 가져다줄 수 있다. 둘째,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세수가 늘어나 지역의 갱신 효과와 재활성화를 촉진하여 지방정부의 세수입과 재정이 증대될 수 있다. 반면,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 측면으로는 첫째, 구도심 활성화에 따른 임대료와 같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과 소상공인의 주거, 임대 비용 부담이 높아져 다른 지역으로 내몰릴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동체 구성원 간의 갈등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프랜차이즈와 같은 거대 자본이 밀려들기 때문에 지역 특유의 문화적 다양성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4. 평가 기준

문항	배점	세부 내용
문제 1	5	· '지방소멸' 용어의 의미,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활용성 등 용어와 사회 환경 및 지문이 제시하고 있는 용어와 현상을 명확하게 파악하였는가?
	20	· 제시문 '지방소멸'에서 설명하고 있는 한국 인구 이동과 인구구조의 특성이 국토 불균형과 불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대해 지문 내용을 활용하여 잘 파악하고, 그래프와 지도 등을 활용하여 설명력을 높였는가?
	20	· 한국의 고향세가 지닌 제도적 한계를 파악하고, 일본의 사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였는가? · 지역주민의 참여가 우선이고, 고향에 대한 애향심이 발현되고,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역의 매력도 확충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이해하였는가? · 고향세 기금 활용 시 도시적 상업모형을 흉내내며 지역 정체성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하고 있는가?
	5	· 문장의 적절한 구성과 어법으로 논리적 서술이 이루어졌는가?
문제 2	5	· 제시문 <다>의 ㉠개념과 의미를 정확하게 서술하였는가?
	20	· 제시문 <다>의 ㉠현상의 발생 원인을 논리적으로 서술하였는가?
	20	· 제시문 <다>에 나타난 젠트리피케이션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논리적으로 논술하였는가?
	5	· 정확한 어법과 표현을 사용하여 논술하였는가?

○ 대학발표 예시답안

[문제 1]

지도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1975-2020년 간의 인구 성장은 서울과 몇몇 도시에 집중되었고, 행안부는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 대부분 시군지역을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능과 경제적 구조가 잘 갖추어진 지역은 인구를 흡인하는 대신, 지역 기반이 약한 곳의 젊은 인구를 비롯한 사람들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떠나간다. 그래프가 보여주듯이 20세기 후반까지 서울 순이동인구가 가장 높게 증가했는데, 이후 감소하는 추세로 경기도 지역의 신도시 개발과 신산업 이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지방의 우수한 인재들이 교육 문화 등 다양한 기회와 나은 사회경제적 기반이 갖추어진 도시를 향해 이출된 후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아 지방은 공동화되고, 지역소멸이라는 위협적 상황에 이르게 된다. 실제로 지역이 소멸되는 일은 나타날 수 없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필요한 시설물, 교육, 행정, 인프라 환경들이 분배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인구가 감소된 지역은 상대적으로 차별될 수밖에 없다. 사회경제적 환경과 삶의 질이 낙후되는 지자체들이 활성화 전략 지원을 요구하였고, 일본이 실행하고 있는 '고향 기부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일본은 재난 대응의 위급 상황에서 떠나온 고향에 대한 시혜적 마음으로 기부가 형성되기도 한다.

한국에서 고향세 기부 기회가 바로 고향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의한 기부금 납부를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아마 고향의 추억이 애틋하고 자랑스러움이 있는 사람은 기부의 마음을 쉽게 열지 모른다. 지역의 특수한 매력과 근린, 도시, 환경적 어메니티가 충분하다면 전통을 기반으로 한 지역의 정체성 자체가 사람들의 관심과 흥미의 요소가 될 것이다. 지방의 주민이 주체가 된 독특한 생활 양식이나 노포 등의 보전에 고향세가 활용된다면 연대감 형성과 협력 상생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나 자체적 계획 없이 도시형 상업모형을 흉내내는데 기금이 활용된다면, 임대료의 상승이나 지역성의 파괴 등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993자)

[문제 2]

㉠현상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이는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어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 과정과 원인을 살펴보면, 도시 형성 초기 대부분의 주거지역은 도심에 위치하지만, 이후 도시 규모가 커지고 기존 도심 주거지에 확대되면서 도심은 상업과 업무기능이 확대되고 자동차를 보유한 중산층은 교외로 주거지를 이동한다. 중산층이 떠난 주거지역은 하위 계층의 거처로 사용되면서 노후화되고 이러한 노후화된 공간은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복합 개발이 되는데, 이곳에 다시 중산층이 유입된다. 이렇게 도시가 재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이 몰리고 부동산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기존 거주자 또는 임차인, 소상공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의 긍정적 측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지역에 중산층과 부유층이 유입됨으로써 그 지역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어 지역 경제의 활력을 가져다줄 수 있다. 둘째,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세수가 늘어나 지역의 갱신 효과와 재활성화를 촉진하여 지방정부의 세수입과 재정이 증대될 수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 측면으로는 첫째, 구도심 활성화에 따른 임대료와 같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과 소상공인의 주거, 임대 비용 부담이 높아져 다른 지역으로 내몰릴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동체 구성원 간의 갈등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프랜차이즈와 같은 거대 자본이 밀려들기 때문에 지역 특유의 문화적 다양성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801자)

○ 선생님 예시답안

[문제 1]

한국 사회는 인구이동과 인구구조의 특성 때문에 '지방소멸' 현상이 발생하여 국가 전체적인 효율성과 형평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료는 한국의 인구 분포가 왜곡되어 있는 상황을 보여 준다. 1975~2020년 간의 인구 성장은 대도시에 집중되었고, 대부분 시군지역은 감소하고 있다. 이는 기능과 경제적 구조가 잘 갖추어진 지역은 인구를 흡인하는 대신, 지역 기반이 약한 곳의 사람들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떠났기 때문이다. 특히 신도시 개발과 신산업 이전으로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은 가속화 되었다. 지방의 인재들이 다양한 기회와 나은 사회경제적 기반이 갖추어진 도시를 향해 떠난 후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아 지방은 공동화되고, 지역소멸이라는 위협적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또한 고령화와 저출산 등의 인구구조 변화도 지방소멸 위험성의 주요인이다. 젊은 여성 인구의 감소는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지역사회의 인구 고령화는 가속화된다. 이로 인해 공동체의 유대감은 위축되고, 인프라 및 공공서비스에도 악영향을 주어 삶의 질은 저하된다. 이는 지방 인구 감소를 가속화하는 원인이 되어 지방소멸의 악순환은 계속된다. 그러면서도 최소한의 하부구조는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인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낙후되는 지방의 활성화 전략으로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는 한국의 지속적인 국토 균형 개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그 부작용 또한 경계해야 한다. 우선, 지역의 특수한 매력과 근린, 도시, 환경적 어메니티가 충분하다면 전통을 기반으로 한 지역의 정체성 자체가 사람들의 관심과 흥미의 요소가 되어 기부금이 활성화 될 것이다. 그리고 기부금이 지방의 주민이 주체가 된 독특한 생활양식이나 노포 등의 보전에 활용된다면 연대감 형성과 지속 가능한 협력과 상생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도시형 상업모형을 흉내 내는데 기금이 활용된다면, 임대료의 상승이나 지역성의 파괴 등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기금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999자)

2026 성신여대 파이널

제 8 강 2023학년도 기출문제 1

※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가>

국가는 복지 제도를 통해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지만, 이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한계가 나타나기도 한다. 복지 제도를 과도하게 시행하여 복지 제도에 관한 국민의 의존도가 높아지면 사회 전체적으로 근로 의욕이 저하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복지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지 제도의 확대는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국가 재정의 부담은 과도한 조세 징수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국가의 복지 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복지와 증세 관련하여 두 개의 정책안을 비교해 봄으로써 복지 정책을 결정할 때 조세 정책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편의상 한 가상국가의 정부가 복지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과 조세 징수를 통해 얻는 재정이 같은 균형 재정을 달성한다고 가정하고 복지와 증세에 대한 정책으로 A안과 B안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이 국가에서는 인간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으로 1인당 연간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하도록 하자.

A안 : 무소득자에게는 1년에 1,000만 원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소득자에게는 소득의 20%만큼 복지 혜택을 축소한다. 연 소득이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5,000만 원 초과분의 20%를 세금으로 징수한다.

B안 : 복지 혜택으로 모든 국민에게 1년에 1,0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한다. 모든 연 소득에 20%의 단일 세율을 부과한다.

여기서 연 소득은 조세 납부와 복지 혜택 수령 전의 소득이고, 순 혜택은 복지 혜택에서 조세납부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A안은 선별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안으로, 그 재원은 고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통해 조달된다. 소위 '선별 복지와 선별 과세'의 조합이다. 반면 B안은 모든 국민에게 연 1,000만 원의 기본소득이 제공되며, 그 재원도 모든 국민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보편 과세로 조달된다. K씨는 연 소득이 2,000만 원이다. K씨의 경우 A안과 B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 나은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일까?

<나>

가상국가 '좋은 나라'정부가 제안한 노인연금 50만원 인상 정책이 고령층 사이에서 분란이 되고 있다. 노인연금은 정부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이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60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지급하는 안이었다. 그러나 경제 상황과 예산 등 국가 재정을 고려하여 만 60세 이상인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후 계속 증가하여 현재 월 4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노인연금 예산은 도입 초기와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지급액을 월 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데는 추가 소요 재원이 상당할 것으로 추산되지만, 정부는 아직 확실한 재원 마련 대책을 내놓지는 않았다. 이런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 인구 중 노인연금 대상자가 아닌 30%에서는 "왜 70%만 주느냐, 60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지급해야 형평에 맞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노인연금은 '좋은 나라' 정부의 또 다른 노후 대책 연금 제도인 평생연금과 비교해도 문제가 있다. 평생연금은 젊어서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노후에 기본 생활 수단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다. 이 나라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및 경기침체 상황이 심화되면서 보험료 인상, 소득대체율 인하, 연금수급 연령의 상향 조정 등 재정 안정화를 위한 평생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연금이 50만 원으로 인상되면, 평생연금 평균 금액인 60만 원과 별반 차이가 없어진다. 따라서 평생연금을 받는 60세 이상 중 노인연금 대상이 아닌 이들은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서 보험료 내고 평생연금 받는 사람이 바보가 된 것 같다."는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 또한 평생연금을 받으면서 노인연금도 받는 고령층에서도 불만이 나온다. 노인연금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나라에서는 평생연금 수령액이 월 50만 원 이상인 경우 노인연금액이 줄어드는 '평생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노인연금을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이 제도에 대해 평생연금 성실납부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평생연금 연계 감액 제도 폐지나 노인연금의 역할과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

『논어』「계씨」에서 공자는 제자 염유(冉有)에게 말했다. "나라와 집을 소유한 자는 백성의 수가 적음을 걱정하지 말고 백성이 고르지 못함을 근심해야 하며 가난함을 근심하지 말고 편안하지 못함을 근심해야 한다. 고르게 하면 가난함이 없고 조화를 이루면 적음이 없고 편안하면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다." 정치에서 균평(均平)과 균분(均分)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정약용은 정치의 근원을 따져 묻는 『원정(原政)』에서 치우친 붕당을 없애고 공도(公道)를 넓혀 현명하고 능력 있는 자를 우대하는 정치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약용이

말한 공도는 정치의 공정한 길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공정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가 제시한 국가 운영의 청사진은 『경세유표(經世遺表)』라는 유명한 책에 잘 나타난다. 정약용은 토지제도를 말할 때 균전(均田), 균산(均産)의 의미를 비판했다. 농사짓는 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토지를 운영하게 해야지 국가가 일일이 민의 살림을 똑같이 챙길 수 없다는 말이다. "먼저 백성의 살림을 엿보고 부유한 자의 것을 덜어내서 가난한 자에게 보태고자 하니 이것은 이롭지 않은 헛된 일이다." 백성이 자신의 직업을 갖고 능력에 따라 자립하게 해야지 처음부터 국가가 일률적으로 균전·균산을 추구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이것은 과거의 신분제 사회,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분수에 맞는 것이란 무엇인지 되묻게 한다. 아마도 각자의 분수, 각자의 능력에 맞게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유학자들이 생각한 공정의 의미였을 것이다.

<라>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역대 최대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미국 대학교 등록금에 대한 관심이 높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 정부는 현재 대학 재학생을 포함해 2022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을 모두 상환하지 못한 국민들 중 본인의 연 소득이 12만 5,000달러[1](한화 대략 1억 6천 3백만 원, 부부 합산 25만달러)보다 적은 경우 1만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 주기로 했다. 탕감 금액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을 받는 경우 2만달러로 늘어난다. 백악관은 이러한 정책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았다. 학자 대출 문제는 미국 내에서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는 사회적 이슈 중 하나로 꼽힌다. 대학생의 절반이 넘는 55%가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현재 1인당 학자금 대출 평균은 약 3만 7000달러(약 5,180만 원)에 달한다. 사회생활 시작과 함께 이미 몇천만 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조차도 상원의원이 된 2004년이 돼서야 학자금 대출을 모두 갚았다고 한다. 당시 그의 나이 43세였다. 현재 미국의 연평균 사립대 등록금은 3만 8,185달러, 공립대는 2만 2,698달러 수준이다. 대출 금액이 크다 보니 현재 학자금 대출자 5명 중 1명이 50대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갚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이를 바이든 대통령이 탕감해주겠다고 하니 학자금 대출을 아직 상환하지 못한 이들의 입장에서는 반가울 수밖에 없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다. 대학 교육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개인인데 반해 이 비용을 나라에서 부담하는 것이 불공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대출금을 성실하게 모두 상환한 사람들이나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불공평할 수 있다. 또한 충분히 갚을 여력이 있는 국

1) 환율을 $1=1,300원으로 계산함.

민들에게도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것이 정당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벤 새스 상원의원은 “결국 바이든 대통령의 부채 탕감 계획은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화이트칼라 대학생을 위한 돈을 지원하도록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마이클 켈리 하원의원 역시 “배관공과 목수에게 월스트리트 고문과 변호사의 빚을 대신 갚으라고 할 것인가. 불공정할 뿐 아니라 나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문제 1 제시문 [가]의 K씨 사례를 A안과 B안에 각각 적용하여 순 혜택을 평가하고, [나]에 제시된 노인연금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가]를 활용하여 논하시오.

(900±100자)

문제 2 제시문 [다]에서 제시된 공자와 정약용의 관점을 비교·요약하고, [라]의 미국 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밝히고, [라]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공자와 정약용의 관점에서 논하시오. (900±100자)

제 8 강 2023학년도 기출문제-오전 대학발표 해설

1. 출제 의도

○ 이번 인문계열 1교시 논술고사는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국어>, <통합사회>,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경제>, <사회·문화> 등의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는 다양한 주제와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여 실제 삶에서 직면하는 구체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문제 1]은 균형 재정을 이룬다는 가정하에서 복지 정책을 설정할 때 조세 정책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석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출제하였다. 지문에 제시된 정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바탕으로 노인연금과 평생연금의 운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시문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한 뒤,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내용을 종합하여 노인연금의 지급과 관련한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논리적 분석, 비판적 평가, 창의적 응용 능력을 포괄하는 종합적 사고 역량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제 2]는 공정과 정치에 대한 공자와 정약용의 관점을 담은 제시문을 소개하고, 이러한 관점을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적용하여 정책의 찬반 의견을 서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고전에 나타난 공정에 대한 대조적인 관점을 이해하고 이를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학자금 대출 관련 시사 이슈에 적용하여 비판적 분석력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창의적 사고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한 주제와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한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사례와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내용 및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자료들로 제시문을 구성하였다.

2. 문항 해설

○ [문제 1]의 논제는 제시문 <가>를 통해 조세 정책을 판단할 때에 지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A안과 B안이 매우 다르다고 생각했을 듯 하다. 또한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도 달랐을 수 있다. 그러나 A안과 B안의 경제적 실질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연 소득 2,000만 원인 K씨의 경우, 정부로부터 얻는 혜택과 납부하는 세금의 차이인 '순 혜택'이 600만 원으로 두 대안에서 동일하기 때문이다. 복지 정책만 떼어서 보면 A안과 B안이 크게 다르지만, 조세와 지출을 묶어 함께 고려할 경우 두 안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어느 정도 수준의 복지를 지향하는가에 따라 조세 정책의 방향성 혹은 재원 마련에 대한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제시문 <나>는 공적연금에 가입하여 일정 기간 납부한 후 혜택을 받는 평생연금과 달리, 선별적 노인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노인연금의 월지급액이 평생연금과 연계될 경우 축소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제시문 <가>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노인연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별 과세를 통한 선별 복지'와 '보편 과세를 통한 보편 복지' 정책이 서로 유사한 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평생연금과는 독립적으로 운용하고 어떻게 과세에 대한 정책을 마련을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선별 과세 – 선별 복지'를 선호하기도 하고, '보편 복지'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하고 있지만, 재원 마련에 대한 과세 정책에 대한 논의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 답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요구된다.

제시문 <가>에서 조세 정책을 판단할 때에 지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K씨 사례의 분석을 통해 A안과 B안에서 순 혜택이 600만 원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나>에서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도입된 노인연금을 하위 70%에게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평생연금 수급자와 노인연금 수급자 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평생연금과 노인연

금을 동시에 받지만 평생연금 연계 제도로 인해 수급하는 연금의 액수가 낮아지는 노인층의 상대적 불공정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시문 <나>에서 노인연금이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생연금과 독립적으로 노인연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노인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한 조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유추하여 비판적으로 논할 수 있어야 한다.

○ [문제 2]의 논제는 공자와 정약용이 제시한 공정의 개념과 현재 미국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 중 하나인 바이든 정부의 학자금 대출 일시적 탕감 정책을 통합하여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전은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삶을 이해하는 지혜의 정수로써, 현재의 사회 상황을 이해하는 중요한 틀을 제시해준다. 제시문 <다>에 나타난 공자와 정약용이 제시한 공정의 대조적인 개념에 대하여 먼저 파악하고, 이러한 이론적 관점을 적용하여 제시문 <라>에 나타난 바이든 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의 찬반 의견을 분석하고 정책 실행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추가: 공자와 정약용의 관점에 근거하여 찬반 의견을 분석하거나, 자신의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을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방식 모두 정답으로 처리한다.) 제시문 <다>에서 나타난 공자의 관점은 정치가 모든 사람들이 고르게 분배를 받고, 편안하고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공자의 관점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은 모든 국민들에게 고르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지 않았거나 그동안 성실한 노동의 댓가로 학자금 대출을 미리 갚은 사람들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경세유표』에 나타난 정약용의 관점에서 노력에 따른 대우를 공정으로 보았다. 이에 따르면, 개인이 노력과 재능을 발휘해 대학에 입학하였기 때문에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인 경우, 학자금 대출 탕감의 혜택을 주는 것은 정당한 대우이다.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은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의 중요한 근거로 쓰일 수 있다.

○ 답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요구된다.

제시문 <다>를 통해 공정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파악하고 그러한 시각의 근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제시문 <라>에 나타난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의 주요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제시문 <다>에 나타난 두 가지 시각에 기초하여 정책의 정당성,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혹은, 자신의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공정의 시각에서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갖는 효과성과 그 한계성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밝힐 수 있어야 한다. 모두에게 고르게 적용되지 못하는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공자의 관점을, 능력주의 관점에서 이러한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정약용의 관점에 기반하여 정책의 찬반 논란에 대한 근거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여야 한다.

3. 채점 기준

[문제 1] 배점 50점

영역	채점 기준	배점
이해력	* 제시문 <가>의 복지와 과세에 대한 두 안이 궁극적으로는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올바로 이해하였는가?	15
비판적 분석력과 창의적 사고력	* 제시문 <나>에서 노인연금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파악하고 있는가? * 제시문 <나>의 노인연금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가>의 내용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제시하였는가?	25
논리적 표현력	* 논술 내용의 정합성, 정확한 단어 선택 및 문장 간 논리적 연결성	10

[문제 1]의 답안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제시문 <가>에서 복지와 과세 방안을 모두 고려하여 K씨의 사례에 적용하면 순 혜택이 600만 원으로 A안과 B안의 경제적 실질은 동일하다고 파악한다.

둘째, 제시문 <나>에서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도입된 노인연금을 하위 70%에게만 선별적으로 제공하고, 또한 가입자가 재원을 부담하는 공적연금인 평생연금과 연계함으로서, 상위 30%의 평생연금 가입자와 두 연금의 동시 수급자들이 상대적으로 불공정해지는 문제점이 있음을 파악한다.

셋째, 제시문 <나>에서 노인연금이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생연금과 독립적으로 노인연금을 운용해야 하며, 노인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한 조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문 <가>를 통해서 유추한다.

[문제 1]

① 제시문 <가>에서 조세 정책을 판단할 때에 지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파악하고, A안과 B안의 경제적 실질은 동일하다는 것을 파악하여 기술한다.

② 제시문 <나>에서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도입된 노인연금으로 인해 평생연금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겪게 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기술한다.

③ 제시문 <나>에서 노인연금이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문 <가>에 제시된 조세 정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과 평생연금과는 독립적으로 노인연금을 운용하는 방안을 논리적으로 제시한다.

▶ 앞에서 제시한 내용과 조건에 의거하여, 답안은 다음과 같이 6등급으로 평가한다.

- 1등급: 위의 3가지를 모두 정확히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2등급: 위의 3가지를 모두 수행했으나,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3등급: 위의 3가지 중 2가지를 정확히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4등급: 위의 3가지 중 2가지를 수행하고,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5등급: 위의 3가지 중 1가지를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6등급: 위의 3가지 중 1가지를 수행하고,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문제 2] 배점: 50점

영역	채점 기준	배점
이해력	* 제시문 <다>에 나타난 공자와 정약용의 공정에 대한 개념의 차이를 올바로 비교하여 요약하였는가?	15
비판적 분석력과 창의적 사고력	* 공자가 주장한 절대적인 평등의 관점에 기반하여 제시문 <라>에 제시된 바이든 행정부의 등록금 탕감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논리적이고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는가? * 정약용이 주장한 능력주의에 기반하여 제시문 <라>에 제시된 바이든 행정부의 등록금 탕감 정책에 대한 찬성 입장을 논리적이고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는가? * (혹은) 제시문 <라>에 제시된 바이든 행정부의 등록금 탕감 정책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였는가? * 공자와 정약용의 관점에서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창의적으로 제시했는가?	25
논리적 표현력	* 논술 내용의 정합성, 정확한 단어 선택 및 문장 간 논리적 연결성	10

[문제 2]의 답안은 다음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제시문 <다>에서 공자는 한정된 재화일지라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을 주장하며, 정약용은 능력에 따른 차등적 대우를 주장하는 것을 파악한다.

둘째, 제시문 <라>에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가지는 긍정적 효과인 55%가 넘는 대학 졸업생들의 부채 완화와 더불어 대학 비진학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등의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있음을 파악한다. 자원의 균등한 분배를 통해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는 공자의 관점에서 보면 일부 대학 진학자들의 대출을 일괄적으로 탕감해주는 바이든 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은 공정한 정책이 아니다. 특히, 개인의 대학 교육 비용을 공적인 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공자의 관점에서는 불공정에 가깝다. 반면, 노력과 능력에 따른 차등적 대우를 주장하는 정약용의 관점에서는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통해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의 수혜자가 되는 것은 공정하다는 것을 파악한다.

셋째,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공자와 정약용의 관점에서 정책 실행상의 불공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서술한다.

[문제 2]

① 제시문 <다>에서 공자는 한정된 재화일지라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을 주장하며, 정약용은 능력에 따른 차등적 대우를 주장하는 것을 파악하여 요약한다.

② 가안: 제시문 <라>에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가지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비판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서술한다. 나안: 제시문 <라>에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가지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비판을 공자와 정약용의 관점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서술한다.

③ 제시문 <라>에서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의 효과는 살리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한다.

▶ 앞에서 제시한 내용과 조건에 의거하여, 답안은 다음과 같이 6등급으로 평가한다.

- 1등급: 위의 3가지를 모두 정확히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2등급: 위의 3가지를 모두 수행했으나,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3등급: 위의 3가지 중 2가지를 정확히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4등급: 위의 3가지 중 2가지를 수행하고,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5등급: 위의 3가지 중 1가지를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6등급: 위의 3가지 중 1가지를 수행하고,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글자수에 제한(900자±100자)이 있으므로, 800자 미만의 경우 아래와 같이 하향 평가한다.

700자~799자: 1등급 하향,

600자~699자: 2등급 하향,

600자 미만: 6등급 부여,

백지답안: 7등급 부여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함.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 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 대학발표 예시답안

[문제 1]

제시문 〈가〉에 나타난 A안과 B안은 각각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정책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 두 가지 정책은 기본적으로 다르게 보이지만, 연 소득 2,000만 원인 K씨의 사례에 적용해 정부로부터 받는 복지 혜택과 납부하는 세금의 차이인 '순 혜택'만을 따져 보면, 두 가지 안이 모두 순 혜택 600만 원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조세와 지출을 함께 고려하면 A안과 B안에서 모두 소득자에게 동일한 순 혜택이 제공되므로, 두 정책의 차이는 찾을 수 없다.

제시문 〈나〉에는 노인연금 인상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점이 언급되었다. 이 중 가장 큰 문제점은 아직 노인연금 인상을 위한 재원 확충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평생연금 개혁과 비교해 볼 때 이에 대한 논의조차 본격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노인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갈등 문제, 노인연금 수급자와 평생연금 수급자 간 형평성 문제, 평생연금 연계 감액 제도로 인한 노인연금 수급자의 상대적 불공정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은 제시문 〈가〉의 예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라는 정치적, 이념적 논쟁보다는 복지 혜택과 재원 마련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모색해야 한다. 보편 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 보편 복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연금이 60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동일하게 지급되지 못하는 이유는 재정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노인연금 재정이 확보되어 평생연금과 독립적으로 운용된다면, 평생연금과 연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노인연금 수급자 문제도 해결 가능할 것이다. 한편 증세가 어렵다면, 소득 하위 70%의 노인을 위해 노인연금을 50만 원으로 올리는 대신 현재 지급되는 40만 원보다 적은 돈을 모든 노인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아니면 노인연금 수급 대상자의 연령을 60세에서 70세 이상 노인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988자)

[문제 2] 가안

공자는 정치가 백성들이 고르게 자원을 분배받고, 편안하고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는 것으로 보았다. 반면, 정약용은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른 차등적 대우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모든 사람이 자원을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아닌, 능력을 갖춘 사람,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의 자립에 초점을 맞춘다.

나는 미국 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불공정한 정책이므로 반대한다.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다수의 국민들이나 자신의 노동의 대가로 성실하게 모든 부채를 다 갚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공정한 정책이다. 또한 졸업 후에 소득이 높아지는 혜택은 개인이 누리지만, 이들의 학자금 대출은 세금으로 탕감해 주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또한 개인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소득 이하의 대출자에게 모두 같은 금액을 탕감해 주는 것

또한 큰 비용이 들어가는 이 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린다.

이 정책의 부작용을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공자의 관점에 기반하면 탕감의 금액을 낮추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업훈련 비용을 지급해주거나, 이미 모든 학자금 대출을 상환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불해 주는 방식 등이 있다.

둘째, 정약용의 관점에서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1만 달러 혹은 2만 달러를 일괄적으로 탕감해 주는 것 또한 불공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재학생의 경우 개인의 학업성취도에 따라 탕감 금액을 높이거나 졸업생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성실하게 대출을 납부해온 사람에게는 탕감 금액을 높여주는 등 차등적으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 주는 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839자)

[문제 2] 나안

공자는 정치가 백성들이 고르게 자원을 분배받고, 편안하고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는 것으로 보았다. 반면, 정약용은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른 차등적 대우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모든 사람이 자원을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아닌, 능력을 갖춘 사람,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의 자립에 초점을 맞춘다.

미국 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은 공자의 관점에서 보면 불공정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모든 국민들에게 고르게 이익이 돌아가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다수의 국민들이나 자신의 노동의 댓가로 성실하게 모든 부채를 다 갚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공정한 정책이다. 즉, 졸업 후에 소득이 높아지는 혜택은 개인이 누리지만, 이들의 학자금 대출은 세금으로 탕감해주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반면, 이 정책은 정약용의 관점에서 보면 공정하다. 자신의 노력과 재능을 통해 대학에 진학한 사람들 중, 자신의 소득만으로 모든 부채를 갚기 어려운 사람들의 자립을 도와주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 정책의 부작용을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공자의 관점에 기반하면 탕감의 금액을 낮추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업훈련 비용을 지급해주거나, 이미 모든 학자금 대출을 상환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불해 주는 방식 등이 있다.

둘째, 정약용의 관점에서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1만 달러 혹은 2만 달러를 일괄적으로 탕감해 주는 것 또한 불공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재학생의 경우 개인의 학업성취도에 따라 탕감 금액을 높이거나 졸업생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성실하게 대출을 납부해온 사람에게는 탕감 금액을 높여주는 등 차등적으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 주는 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905자)

2026 성신여대 파이널

제 9 강 2023학년도 기출문제 2

※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가> 자원의 무기화가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에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용어는 '온쇼어링(on-shoring)'이다. 생산기지를 자국 내에 두도록 유도하거나 혹은 자국 내 기업에 아웃소싱하는 것을 뜻한다. 기업의 생산 시설을 인건비 등이 비교적 저렴한 국가로 옮기는 '오프쇼어링(off-shoring)'과 반대되는 말이다.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와 함께 자주 언급됐던 '리쇼어링(re-shoring : 생산 시설을 다시 본국으로 이전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이처럼 '온쇼어링' 전략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지만 자국 내에만 생산 시설을 두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최근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 '니어쇼어링(near-shoring : 본국으로의 이전이 어려울 경우 인접 국가로 생산 시설을 옮기는 것)'과'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 동맹 국가들 간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용어는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이들이 보여주는 공통점은 명확하다. 글로벌 기업들에게'그저 싼' 지역이 더 이상 생산기지로서의 매력이 없다는 점이다. 재난 상황 혹은 정치적인 갈등 상황의 위험을 피하는 것이 기업들에는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나> 자유무역을 표방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부작용을 비판하는 이들 사이에서도 상호 연결성을 통해 수많은 혜택을 맛본 인류가 과거와 같은 냉전 체제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지난 수십 년간 세계화를 통해 자리 잡은 고도로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과 시장, 일상의 모습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견고하고, 상호 호혜적이어서 말처럼 쉽게 끊어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은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가 마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결정타가 되었다. 이에 2021년 다보스 포럼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 새로운 형태의 세계화가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그레이트 리셋(great reset)'이 제시됐다. ㉡팬데믹(pandemic)을 교훈으로 삼아 지속 가능성, 회복력을 갖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투자하여 새로운 형태의 세계화 방향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지난 30년간 우리가 경험해 왔던 신자유주의 경제 체계에 근간한 세계화의 양상은 달라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며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철수하는 것에 대해 영국 가디언은 '세계화의 만조(滿潮)는 이미 지났다. 이제 남은 건 물이 얼마나 많이 빠지느냐다'라고 평했다. 소비에트 연방 시절이던 1990년 미국 맥도널드의 모스크바 입점이 세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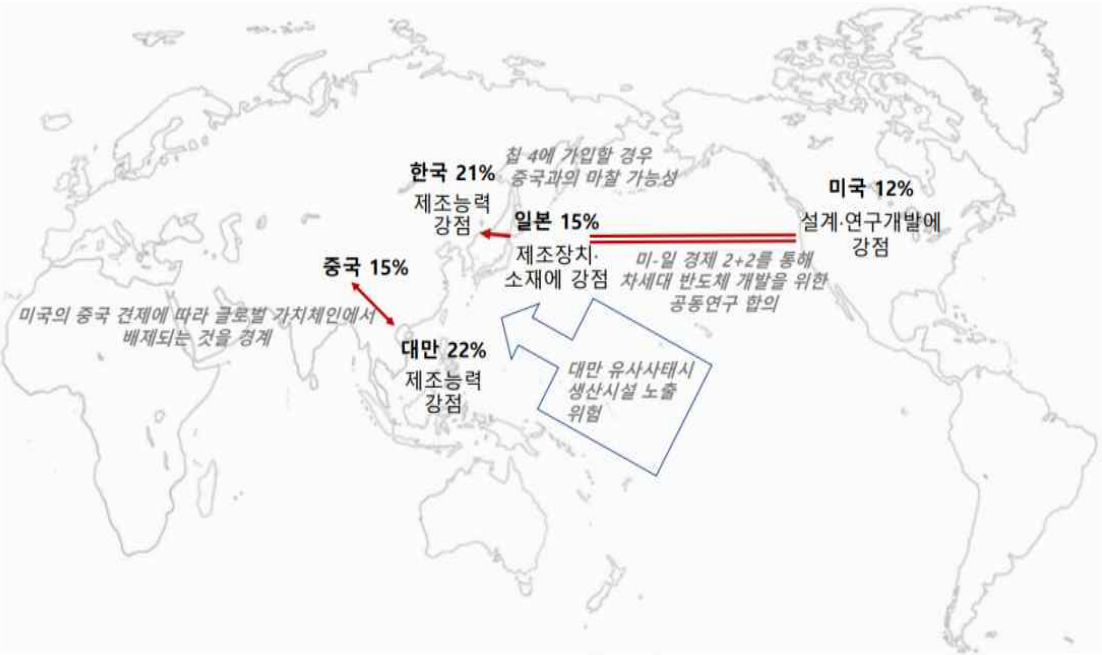
시대의 도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었다면, 맥도널드의 러시아 시장 철수는 거대하고 급격한 탈세계화 흐름을 상징한다. 개방과 자유로운 교역, 다국적 기업으로 대표되는 세계화 패러다임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이미 쇠퇴 중이었다. 서방국가에서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와 트럼프주의(미국 우선주의)로 대변되는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고개를 들었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패권 경쟁으로 번져나갔다. 이런 와중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공한 것은 세계화의 바탕이 된 국제법 존중과 상호 계약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이 무너졌음을 뜻한다. 무엇보다 중국이 불법을 자행한 러시아를 비난하기는커녕 뒤에서 암묵적으로 지원하면서 신냉전 구도를 보이며 세계화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다> 지난 수십 년간 각국 경제는 세계화의 수혜를 크게 입었다. 중국을 비롯한 저임금 국가에 생산설비를 집중하고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생산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었다. 기업의 매출과 이익은 획기적으로 늘었고 증시는 장기 호황을 구가했다. 기술 개발로 생산단가가 하락하면서 물가 상승도 억제됐다. 인플레이션 없는 장기 성장의 골디락스*가 펼쳐진 것이다. 그러나 미·중 무역 전쟁, COVID19 팬데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어지며 개방과 자유로운 교역, 다국적 기업으로 대표되는 세계화 패러다임은 쇠퇴하고 있다. 기존 세계화의 퇴조는 막대한 비용을 수반한다. 그 중 하나가 **㉢인플레이션**이다. 원자재와 식량, 반도체 등의 공급망 경색과 물류대란, 신냉전 양상이 우려되는 대립 구도 속에 전 세계가 촘촘하게 연결됐던 기존의 경제 질서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재화와 서비스의 자유로운 흐름이 막히면 거래 비용이 증가해 가격이 오르고, 일부 국가들이 특정 상품이나 자원을 무기화할 경우 가격 상승 압력은 더욱 강해지게 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순식간에 에너지와 식량 공급, 금융 시스템의 단절을 경험한 세계 각국은 이제 더 높은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제품을 생산·운송할 수 있도록 확실한 우방국들로 공급망을 재편하기 시작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기술이나 원자재를 비우방국가에 의존할 경우 뒤따를 수 있는 위험성을 자각했기 때문이다. 투자은행 JP모건에 의하면 애플은 올해 연말까지 전체 아이폰14 물량의 5%를 인도에서 만들고, 차츰 인도 내 생산을 늘려 2025년에는 전체 아이폰의 25%를 인도산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미·중 갈등의 심화 탓에, 생산과 판매를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온 애플마저 '탈 중국 노선'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구글 역시 스마트폰 신제품 픽셀7 물량 일부를 인도 공장에서 만들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 중심의 서방과 그에 맞서는 중국·러시아를 두 축으로 삼는 **㉣'경제의 블록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골디락스 : 경제가 높은 성장을 이루고 있더라도 물가 상승이 억제되는 상태

<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3월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4자 연합인 '칩 4(Chip4)'를 제안하며 한국의 참여를 요구했다. 아래의 지도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팹리스(설계)의 주도권을 지니고 있는 미국과 함께 파운드리(위탁생산) 강자 대만과 메모리 강자 한국, 주요 기술 국가 중 하나인 일본이 동맹하여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는 2015년 중국이 선언한 '반도체 굴기'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자 반도체 경쟁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칩4와 중국의 지정학적 특성과 전체 반도체 생산에 기여하는 비율>

(출처: 미국반도체산업협회 SIA)

중국은 대만과 일본이 중국에 맞서 '반도체 장벽'을 세우고 있음을 비판하며, 반도체 외교는 현실적인 이해관계의 문제임을 명시하고 한국은 미국의 강압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중국은 한국 반도체의 수출액 중 60%는 홍콩을 포함한 중국이 차지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파운드리 공장이 전무한 미국이 원천 기술 보유국이라는 이유로 반도체 산업에서 세계화된 분업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마> 2022년 5월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법과 합의를 무시하고 국제 질서에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략적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는 대중국 전략을 발표했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 키워드는 '투자, 공조, 경쟁'이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 선언 직전,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을 공식화하였다. 무역, 공급망, 환경, 조세 등 4대 주요 분야에 대한 투자와 파트너 국가들과의 공조를 위해 무역 규범 수립에 무게를 둔 것이다. IPEF의 쿼드(Quad) 성명이 의미하듯 세계는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가치 규범을 공

유하는 공급망과 중국 중심의 사회주의 가치 규범이 중심이 되는 공급망으로 이분화되고 있다. 중국의 동아시아 안보 시스템에 대한 위협은 경제·이데올로기의 문제와 맞물려 미·중 무역갈등과 함께 확대되고 있다. 2016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와 2019년 한일 역사 갈등이 빚어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 등을 볼 때, 경제적 상호의존은 종종 경쟁국과 상대국을 압박하는 무기로 활용된다. 한중 수교 30년이 되었지만 중국과의 신뢰 관계가 온전히 구축되었다고는 보기 힘들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의 80%, 수입품의 64%가 중간재이므로 이에 대한 수출을 통제한다면 중국 역시 피해가 만만치 않다. 중국의 가공무역 비중이 축소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부품 및 반제품을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여 가공 수출하는 형태는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21년 기준, 중국은 한국의 2대 투자대상국이고 한국은 중국의 3대 교역국이다. 한국의 산업용 원자재 수입의 중국 의존도는 G7 국가보다 높은 33.4%(2020년 기준)이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의 제재와 대중국 수출 타격이라는 난제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라고 평했다.

문제 1 제시문 <가> 현상이 발생한 이유를 제시문 <나>의 ㉠과 ㉡을 토대로 분석하고, 제시문 <나>에 나타난 변화가 세계 경제와 국제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문 <다>의 ㉢과 ㉣의 측면에서 논술하시오. (900±100자)

문제 2 제시문 <가>의 국제 정세 속에서 제시문 <라>의 지도처럼 반도체 동맹이 전개될 때 한국의 딜레마는 무엇인지 기술하고, 제시문 <마>의 상황에서 요구되는 한국의 대응 방향을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논술하시오. (900±100자)

제 9 강 2023학년도 기출문제-오후 대학발표 해설

1. 출제 의도

○ 2023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계열 논술고사는 수험생들의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글쓰기 역량을 측정하고자 했다. 문제 구성은 고등학교 사회과,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한 주제와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한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답할 수 있도록 했다.

○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반영하여『국어』,『독서』,『화법과 작문』,『언어와 매체』,『통합사회』,『경제』,『사회·문화』,『세계지리』,『세계사』등에서 다루는 주제인 세계화,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국가 간 갈등, 인플레이션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문제로 구성했다.

○ 다양한 종류의 글에서 발췌한 제시문을 읽고, 이를 주어진 시간 내에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 개념을 구체적인 사례에 합당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여 수험생의 독해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논리적 표현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시문 내용을 비교, 분석, 적용, 평가함을 넘어 종합적인 사고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여 완결된 답안을 작성하도록 문제를 출제했다.

2. 문항 해설

○ [문제 1]은 제시문 <가>에서 다루고 있는 니어쇼어링, 프렌드쇼어링 현상이 발생한 이유를 제시문 <나>에서 제시한 세계화와 팬데믹을 토대로 분석하고, 제시문 <나>에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세계화 혹은 탈세계화로의 변화가 제시문 <다>의 인플레이션과 경제의 블록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술하는 문제이다.

○ 제시문 <가>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공급망 재편 현상을 다룬 신문기사를 발췌.재구성하였으며, 제시문 <나>는 미·중 전쟁과 앞으로의 세계에 대해 다룬 책의 내용을 발췌.재구성하였다. 그리고 제시문 <다>는 세계화의 쇠퇴를 다룬 신문기사를 발췌. 재구성하였다.

○ 답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요구된다. 제시문 <가>를 통해 여러 국가와 글로벌 기업들이 산업 공급망을 본토와 가깝거나 동맹국으로 재편하는 현상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제시문 <나>를 통해 세계화 시대의 국제 무역 및 국제 분업의 특성과 탈세계화 시대의 국제 무역의 특성을 비교하여 팬데믹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여 논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제시문 <다>를 통해 최근 벌어지고 있는 세계화 쇠퇴 현상을 파악하고 이러한 현상이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하며, 자유무역의 기조를 약화하여 이념과 가치 등을 매개로 한 경제의 블록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논술할 수 있어야 한다.

○ [문제 2]는 제시문 <가>에 나타난 공급망 재편 현상을 파악하고, 그것을 토대로 제시문 <라>의 지도를 분석하여 칩4 반도체 동맹 가입에 대한 한국의 딜레마와 대 방안을 논술하는 문제이다.

○ 제시문 <가>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공급망 재편 현상을 다룬 신문기사를 발췌.재구성하였으며, 제시문 <라>는 칩4 반도체 동맹 가입에 대한 한국의 딜레마를 다룬 책과 보고서를 발췌.재구성하였다. 그리고 제시문 <마>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신냉전 구도 형성을 다룬 책의 내용을 발췌.재구성하였다.

○ 답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요구된다. 제시문 <가>를 통해 여러 국가와 글로벌 기업들이 산업 공급망을 본토와 가깝거나 동맹국으로 재편하는 현상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라>를 통해 공급망 재편과 관련한 칩4 반도체 동맹 움직임을 이해하고, 동맹 가입 여부에 대한 한국의 딜레마를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 최대 교류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제시문 <마>를 통해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패권 경쟁 양상을 파악하고,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의 대응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논술할 수 있어야 한다.

3. 채점 기준

[문제 1] 배점 50점

영역	채점 기준	배점
이해력	* 제시문 <가>에서 다루고 있는 니어쇼어링, 프렌드쇼어링 현상의 원인을 제시문 <나>에서 제시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팬데믹을 토대로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있는가?	20
비판적 분석력과 창의적 사고력	* 제시문 <나>에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세계화 혹은 탈세계화로의 변화가 제시문 <다>의 인플레이션과 경제의 블록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있는가?	25
논리적 표현력	* 논리적 표현력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어법에 맞게 서술하였는가?	5

[문제 1]의 답안은 다음의 세 가지 기준으로 평가한다.

첫째, 제시문 <가>에서 다루고 있는 니어쇼어링, 프렌드쇼어링 현상이 <나>에서 제시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팬데믹을 토대로 발생한 것임을 파악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한다. (20점)

① 제시문 <가>에서 다루고 있는 니어쇼어링과 프렌드쇼어링이 세계화의 새로운 국면(탈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들이 선택한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 방안임을 이해하고 있는가? (6점)

② 제시문 <나>를 통해 세계화 시대와 탈세계화 시대의 글로벌 공급망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 차이를 비교하고 있는가? (7점)

③ 펜데믹이 기존 글로벌 공급망에 미친 영향(세계 경제를 이어주던 글로벌 공급망이 마비 - 공급망 병목현상)을 이해하고, 이로 인한 변화(지속 가능성, 회복력을 갖춘 인프라 구축 - 새로운 분업체계로의 재편)를 분석하고 있는가? (7점)

둘째, 제시문 <나>에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세계화 혹은 탈세계화로의 변화가 제시문 <다>의 ㉢ 인플레이션과 ㉣ '경제의 블록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논리적으로 서술한다. (25점)

① 제시문 <나>를 통해 세계화의 쇠퇴 현상을 초래한 이유들을 파악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야기한 급격한 탈세계화 흐름으로 인해 세계화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있는가? (8점)

② 최근 벌어지고 있는 세계화의 쇠퇴와 세계화의 새로운 형태의 세계화가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이해하고, 이로부터 인플레이션의 부작용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고 있는가? (9점)

③ 미국 중심의 서방세계와 그에 맞서는 중국·러시아를 두 축으로 형성되는 신냉전의 구도가 국제정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로 인해 '세계 경제의 블록화'가 촉진될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있는가? (8점)

셋째,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어법에 맞게 서술하였는가? (5점)

앞에서 제시한 내용과 조건에 의거하여, 답안은 다음과 같이 6등급으로 평가한다.

- 1등급: 위의 3가지를 모두 정확히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2등급: 위의 3가지를 모두 수행했으나,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3등급: 위의 3가지 중 2가지를 정확히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4등급: 위의 3가지 중 2가지를 수행하고,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5등급: 위의 3가지 중 1가지를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이 갖춘 경우
- 6등급: 위의 3가지 중 1가지를 수행하고,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글자수에 제한(900자±100자)이 있으므로, 800자 미만의 경우 아래와 같이 하향 평가한다.
700자~799자: 1등급 하향, 6
00자~699자: 2등급 하향,
600자 미만: 6등급 부여, 백지답안: 7등급 부여

[문제 2] 배점: 50점

영역	채점 기준	배점
이해력	* 제시문 <가>의 세계 경제환경의 새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이를 배경으로 '칩 4'의 의미를 해석하였는가?	5
비판적 분석력과 창의적 사고력	*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동맹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딜레마는 무엇인지 논리적으로 서술하였는가?	20
	* 균형적 외교 노선 구축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는가? 한국의 역할과 대응 방향에 대한 견해를 설득력 있게 논술하였는가?	20
논리적 표현력	* 논리적 표현력 정확한 어법과 표현을 사용하여 서술하고, 딜레마와 대응 방향에 대한 안배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5

[문제 2]의 답안은 다음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제시문 <가>에서 문제가 된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배경으로 전개되는 <라> 제시문의'칩4' 동맹의 의미를 파악해 기술하기 (5점)

① 기존의 세계화와 차별되는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망 재구축에 관련된 사항의 이해 (2점)

② 지정학적 가치 부상에 대한 이해 (온쇼어링 등이 강조되고 있는 현상) (3점)

둘째, 제시문 <라>의 사례와 같이 한국이 미국과 동맹 연대를 이룰 때 예상되는 중국의 반응을 예측하고, 이를 통해 한국이 처한 딜레마를 기술하기 (20점)

① 세계화 시기 미국의 다국적 기업의 분업을 통한 경제적 이득을 획득하였으나, 중국의 성장에 따라 미국의 경제적 입지가 축소되는 바를 우려하여 새로운 전략을 구성하는 상황에 대한 이해 (5점)

②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과 '칩4'를 형성하는 미국의 의도와 이를 통해 한국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성과를 예측하고 기술 (5점)

③ 한국이 미국과 반도체 산업 등 경제 동맹에 참여할 경우 중국의 입장 (5점)

④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적 입장을 결정할 수 없는 딜레마 (5점)

셋째, 제시문 <마>의 제시문에 나오는 'IPEF' 가입 등 일련의 공조 체계 연대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어떻게 관련이 되어있는지를 설명하고, 이 가운데 균형 있는 외교의 노선을 어떻게 구축해야 하

는지 한국의 입장과 대응 방향을 논리적으로 서술하기 (20점)

① 한국이'칩4'에 이어 'IPEF'에 가입할 때 예상되는 국제 정세의 서술 (5점)

② 미국과의 동맹은 지정학적 가치가 부상하는 가운데 상이한 입장으로 비쳐질 수 있음을 지도를 읽어 기술; 중국이 경제적 압박으로 한국의 미국과의 동맹을 통제하려 하지만 중국 역시 수출입 비중이 한국과 상당한 비중을 지니고 있음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의 예측 (5점)

③ 미국과 중국의 자국 이익을 우선으로 한 패권 다툼에서 한국은 중견국으로서 위치를 굳건히 해야 함에 대해 기술 (5점)

④ 균형적인 외교를 구축하고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역할과 책임, 기여 등에 대한 가치적 노선을 공고히 해야함을 기술 (5점)

넷째, 정확한 어법과 표현을 사용 및 내용 구성의 안배 (5점) - 용어의 사용과 문장의 구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고, <라>의 내용의 딜레마에 대한 논술과 <마>의 한국의 대응 방향에 대한 논술의 분량이 적절하게 안배되었는지 평가 (5점)

앞에서 제시한 내용과 조건에 의거하여, 답안은 다음과 같이 6등급으로 평가한다.

- 1등급: 위의 4가지를 모두 정확히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2등급: 위의 4가지를 모두 수행했으나,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3등급: 위의 4가지 중 3가지를 정확히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4등급: 위의 4가지 중 2가지를 수행하고,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5등급: 위의 4가지 중 1가지를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이 갖춘 경우
- 6등급: 위의 4가지 중 1가지를 수행하고,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글자수에 제한(900자±100자)이 있으므로, 800자 미만의 경우 아래와 같이 하향 평가한다.

700자~799자: 1등급 하향,

600자~699자: 2등급 하향,

600자 미만: 6등급 부여,

백지답안: 7등급 부여

○ 대학발표 예시답안

[문제 1]

제시문 〈가〉는 세계화의 새로운 국면 혹은 탈세계화의 변화 속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산업 공급망을 본토와 가깝거나 동맹국으로 재편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글로벌 공급망을 통한 자유로운 교역과 시장의 개방성이 특징이었다. 하지만 견고하다고 믿었던 세계화의 양상은 브렉시트와 미국 우선주의로 대변되는 보호무역주의의 대두,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쇠퇴 중이다. 팬데믹은 상호 호혜적이었던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가 마비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결정타였고, 이에 따라 공급망 마비 현상을 겪은 글로벌 기업들은 지속 가능성과 회복력을 갖춘 새로운 분업체계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을 시도하게 되었다. 〈가〉의 니어쇼어링과 프렌드쇼어링은 변화하는 세계화의 양상 속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해 선택한 방안이다. 재난 상

황 혹은 정치적인 갈등 상황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피하는 것이 기업들에게 최우선 과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제시문 〈나〉는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부상,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패권 경쟁,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마비가 초래한 탈세계화 현상과 더불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나타난 신냉전 구도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탈세계화 현상은 국제 분업화를 축소시켜 장기적으로 인건비 상승, 원자재와 식량, 반도체 등의 공급망 경색을 야기하여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신냉전 구도는 세계 경제의 블록화를 촉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최근 러시아가 유럽으로 공급하던 천연가스를 무기화한 것과 같이 특정 상품과 자원의 무기화가 진행될 수 있고 이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여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암묵적으로 지원하며 미국 중심의 서방세계와 대립하는 것은 이러한 신냉전 구도 형성의 우려를 자극한다. 이는 과거 냉전 시대에서처럼 '경제의 블록화'를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957자)

[문제 2]

제시문 〈가〉는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나타나는 온쇼어링, 니어쇼어링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미국은 해외 생산기지 구축으로 세계화에 의한 국제적 분업화의 경제적 효과를 보았지만,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하는 위협 상황에 직면하여 제시문 〈라〉의 지도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환태평양 국가들과 동맹하는 전략을 구상하였다. 미국이 한국, 일본, 대만과 '칩4'를 형성할 경우, 중국 대비 4배 이상의 반도체 생산능력을 갖추게 되면서 원천 기술의 경쟁력은 유지하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도 견제할 수 있다. 한국이 칩4 반도체 동맹에 참여함으로써 가치 동맹국 간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우위를 차지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중국을 배제한 미국과의 일방적 반도체 동맹은 중국을 자극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 미국과의 동맹은 신뢰적 안보를 토대로 한다.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반도 분단 상황과 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한다면 한국에 대한 중국의 선의를 장담할 수 없다. 안보가 바탕이 된 미국과의 동맹이냐, 안정적인 중국과의 경제 교류냐에 대한 양자택일의 상황은 한국의 딜레마이다.

제시문 〈마〉의 상황과 같이 한국이 '칩4'에 이어 IPEF에 가입한다면 중국은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무기로 한국을 압박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 역시 중간재의 대한국 수출입 비중이 상당하여 한국과 일방적으로 대립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러시아 사이에서 한국은 평화와 공존을 위해 역할과 책임, 그리고 기여할 바를 모색하여 중추국으로서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안보와 경제적 안정이라는 양날의 검을 쥐고, 강대국의 자국 이익을 우선으로 한 패권 다툼을 견제할 수 있는 가치 외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경제·안보·재난 등의 환경 변화를 신중히 고려하여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리적 경제 외교에 주력하여야 한다. 즉, 안보가 보장되고, 경제적 지속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 실용주의 노선을 바탕으로 한 대응이 필요하다. (985자)